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불확실성 시대의 재정정책
박노욱

현안분석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 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허경선

정책연구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내부고발자 사무국 운영 계획 발표 외





올팩이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5년 5월 19일 발행

통권 제34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조혜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제작	길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불확실성 시대의 재정정책
박노욱 | 코스콤 상임감사

현안분석

10

기후예산의 자원 조달 방안: 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연구

44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정환·홍용기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권성오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권성준·이경훈·강성훈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 추정에 대한 연구
홍병진·김정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70

미국-내부고발자 사무국 운영 계획 발표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칼럼



불확실성 시대의 재정정책



박노욱
코스콤 상임감사

불확실성 시대의 재정정책

박노욱
코스콤 상임감사

불확실성 시대의 충격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시작과 함께 전대미문의 무질서와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공격적 관세정책으로 인해,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의 경제전망에서도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크게 이루어졌다.

미국의 관세 상향 발표 이전의 전망치인 2025년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5년 3.3%, 2026년 3.3%로, 선진국은 1.9%, 1.8%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2.0%, 2.1%로 전망했다.

2025년 4월에 발표한 IMF의 세계경제전망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5년 2.8%, 2026년 3.0%로, 선진국은 각각 1.4%, 1.5%로, 우리나라는 1.0%, 1.4%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전환 이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선진국 평균보다 더욱 하향되었다. 선진국 평균은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0.6%포인트씩 하향 조정되었다. 국제무역 의존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취약성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이다.

증가하는 재정지출 수요와 고갈되는 재정여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인 우리나라에 악재가 덮친 것이다. 이러한 해외시장 급변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는 직접적으로 법인세수의

하락으로 연결되어 세수 축소로 귀결될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 부족의 상당 부분이 법인세 감소로 인한 것이었고, 중기적으로 법인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세수 전망은 어두운데, 정부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기후변화, 안보 관련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국가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이전에도, 2030년까지 매년 GDP 대비 2~3% 수준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전망되었다(IMF, 2023).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재정여력을 확보해서 누적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재정적자 폭을 축소해나가면서 일정 수준 흑자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기적으로는 재정여력 창출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재정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 양립이 어려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충관계가 있는 목표 간에 균형잡힌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재정총량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 분야별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정치적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이 지배적이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의 제약에 대한 논의는 상실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재정구조의 경직화·세수 감소·지출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 누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재정운용의 장기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연간 예산편성과 운용도 도전적인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매년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매년 80조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통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의 지출구조조정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의 규모는 20조원을 넘기기 어렵다.

정부 재정지출 중에서 의무·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20% 미만이 통상적인 지출구조조정 대상이고, 이 중에서 20%의 지출구조조정하는 것을 최대치로 잡았을 경우이다. 참고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2023년)는, 재정당국이 매년 재량지출의 전년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적은 6%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출구조조정 노력으로는 적자 누적 추세를 반전 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피치오프 행사에서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인해,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압박이 중기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는 국가채무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이 높지 않고,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출구조 혁신이나 세원 확충을 견인할 정치적 역량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다.

재정정책 수립 거버넌스의 혁신에 기반한 재정여력 창출 필요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안을 설명할 때, 거의 매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의미 있는 지출구조조정은, 새로운 재정정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정지출의 절감분을 창출하는 것이며, 해당 지출구조조정은 최소한 3년 이상 지속가능하여야 한다.

기존 지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출구조조정은 3년 이내에 원상 복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급조된 지출 삭감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네덜란드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추진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작업이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독립적 재정기구와 행정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투명한 범정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중기적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무질서와 불확실한 상황뿐 아니라, 미래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정여력을 창출해 나가면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효과성 있는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이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국민에게 인기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세원 확충이나 지출구조 조정은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치의 영역에 재정 관련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재정지출 확대 일변도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현실의 제약조건을 전문성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수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된 독립적 재정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 당국만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 그림은, 모범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가 어떻게 선거 주기에 맞추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핵심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독립된 의사결정 과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여기서 제시된 재정운용기조 권고사항이 공개되어, 정치권에 제시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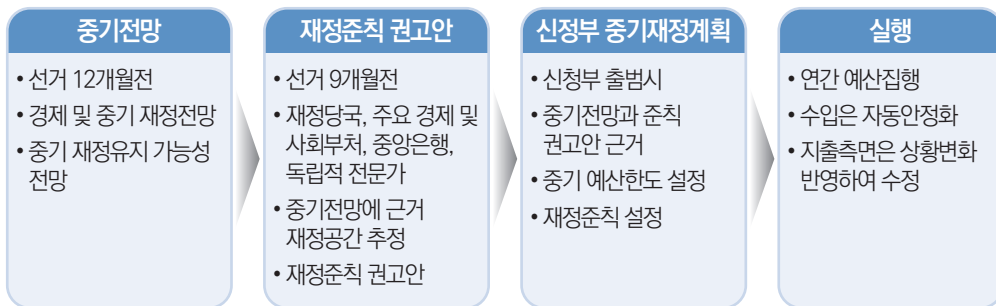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신정부는, 범정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세입기반 확충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을 견인하기 바란다. 재정여력을 지속적으로 고갈시켜나가는 현재의 추세에서 벗어나,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과 미래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창출하는 재정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림 선거주기와 재정지속가능성 분석·재정운용 준칙·중기재정계획·예산편성의 연계



현안분석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 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heo@kipf.re.kr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 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며, 경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외부성으로 인하여 민간의 투자만으로는 과소공급될 수 있어 필요한 수준의 기후환경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도입하는 등 기후대응을 위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배출권거래제의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기금 수입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도 최근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대폭 감소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89.9조원을 기후대응에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정부의 기후대응 예산은 정부의 당초 투자계획보다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기후대응 정부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여 자체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확대도 필요하다.

녹색국채(sovereign green bonds)는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대응 재원 조달을 위해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녹색채권(green bonds)은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분야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된 채권이다. 녹색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녹색채권이며 조달자금은 '녹색정책'에만 사용해야 한다. 녹색국채는 2016년 폴란드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말 현재 38개 국가에서 탄소중립과 환경목표 달성의

우리나라는
녹색채권을
비롯하여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을
2018년부터
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녹색국채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채권을 비롯하여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을 2018년부터 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녹색국채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¹⁾ 한편, 2026년 4월부터 우리나라가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²⁾ 정부는 추가적인 국고채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전환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녹색국채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녹색채권을 포함한 ESG채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녹색국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원고는 녹색채권과 녹색국채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녹색국채 도입과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 우리나라 기후대응 예산과 재원 조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 녹색채권과 녹색국채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현황과 녹색국채 도입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녹색국채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기후예산과 재원 조달

가. 기후예산

기후대응 예산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후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체 비용 중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은 공식적으로 산정되지 않았으나 이병윤·임진(2024)에서는 2050년까지 최대 2,62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본연구원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의 투자규모는 2,097조원으로 2050년으로 갈수록 저탄소 전환에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1)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7억유로, 2021년 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녹색채권으로 해외에서 발행하였으나 국고채는 녹색채권으로 발행한 적이 없다.
2) 우리나라 국채가 WGBI 지수에 실제 반영되는 것은 2026년 4월부터이며 정부는 WGBI 편입으로 75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5).

추정하고 있다.³⁾ UNFCCC는 전체 기후변화 대응 투자의 70%는 민간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30%의 투자는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몫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기후예산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기후예산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고 관련 예산이 다양한 부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기후예산과 가장 근접한 것은 기후대응을 위한 국가투자계획에 포함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대응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89.9조원의 정부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투자계획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예산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표 1 탄소중립·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 2027	합계	연평균 증가율
합계	133,455	765,738	899,193	11.54
•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	79,480	466,283	545,763	11.48
• 기후변화 적응 대책	29,856	164,213	194,068	9.43
• 녹색산업성장	10,459	54,453	64,912	7.34
• 정의로운 전환	2,366	19,837	22,203	37.57
•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4,602	30,319	34,922	25.36
• 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5,999	26,881	32,881	2.11
• 국제 협력	693	3,751	4,444	1.59

출처: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포함)」, 2023. 4., p. 11

기후예산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활용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투자계획이 기후변화 완화, 적응, 정의로운 전환, 인력 양성 등 기후대응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후예산 중 일부에 해당한다. 다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기후대응 관련 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나타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기금의 규모는 2023년 11.9조원, 2024년 10.9조원, 2025년 12.1조원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3) 금융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보도자료 별첨자료, 2024. 3. 19.

비중은 2023년 1.86%에서 2025년 1.78%로 소폭 감소하였다.

기후대응기금은 우리나라가 기후대응을 목적으로 별도로 신설한 기금으로 기후대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사업에 포함되며 기후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2023년 2.5조원, 2024년 2.4조원, 2025년 2.6조원으로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나. 재원 조달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1조원으로 전체의 9.2%, 특별회계가 6.3조원으로 52.5%, 기금은 4.6조원으로 전체의 38.3%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3.8조원(31.8%)이며, 기후대응기금 2.3조원(18.9%), 일반회계 1.1조원(9.2%), 전력산업기반기금 1.1조원(9.1%)의 순이다.

구분	회계	'25년 예산	비율
일반회계	일반회계	11,110	9.2
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310	3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679	7.2
	환경개선특별회계	7,184	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16	4.8
	교통시설특별회계	3,092	2.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19	0.1
	우편사업특별회계	45	0.0
기금	기후대응기금	22,761	18.9
	전력산업기반기금	10,922	9.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8,854	7.3
	주택도시기금	1,728	1.4
	축산발전기금	723	0.6
	수계관리기금	548	0.5
	수산발전기금	456	0.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79	0.1
합계		120,526	100.0

출처: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4.;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수입원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판매 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등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2022년부터 여유재원이 고갈되어 적자재정으로 전환되었다. 에특회계는 2022년 1조 7,558억원, 2023년 2조 6,482억원의 부족분을 전력산업기금 및 일반회계 전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하였다.⁴⁾ 이는 2019년 LNG 수입부과금이 24,242원/톤에서 3,800원/톤으로 크게 감소하여 세입이 줄어든 것과 2020년 이후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 사업이 에특회계로 편성되면서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탄소중립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어들면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에특회계의 수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세입 총계		46,689	55,038	53,290	53,137
전입 / 예수금	기금전입금(전력산업기반기금)	-	-	13,118	13,074
	예수금(공공자금관리기금)	-	-	4,440	11,594
	일반회계전입	-	-	-	1,814
	소 계	-	-	17,558	26,482
세출 총계		45,603	50,963	46,197	50,759

주 결산 기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회계에 해당하는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 수입을 활용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도입되었다. 2022년 도입 당시 예산안에서는 배출권 수입⁵⁾을 전체 수입의 약 30%에 해당하는 7,306억원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배출권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실제 배출권 수입은 예산안 대비 대폭 줄어든 3,188억원으로 집계되었고, 2023년에는 996억원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결산기준 전체 수입대비 배출권 수입의 비중은 2022년 15.6%, 2023년 전체 수입의 4.5%에 불과하며 2025년 예산안의 배출권 수입의 비중은 13.3%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에 해당하는

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5) 본고에서 '배출권 수입'은 배출권 수입을 포함한 기타경상이전 수입에 해당함

정부내부수입은 2022년 당초 계획에서는 70.3%로 전망하였으나 결산기준 2022년 84.2%, 2023년 93.9%를 차지하여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결산기준 2022년 37.3%, 2023년 54.9%를 차지한다. 차입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2022년 당초계획에서 1,522억원을 계획하였으나 결산기준 2022년 4,60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23년 2,72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24년과 2025년 예산안에서는 3,199억원을 차지한다.

표 4 기후대응기금 재원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계획	결산	당초계획	결산	당초계획	예산안
합계		2,459,423	2,046,509	2,486,723	2,226,698	2,391,807	2,622,389
자체 수입	- 기타경상이전수입(배출권매각대금등)	730,584	318,826	400,896	99,622	289,694	348,700
	- 출자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용자원금회수등			-	13,911	12,268	14,327
내부 수입	일반회계	1,076,055	763,154	1,222,255	1,222,255	1,149,413	1,331,859
	(교통·에너지·환경세)	(1,076,055)	(763,154)	(780,297)	(759,052)	(1,072,806)	(1,057,336)
	(추가전입금)			(441,958)	(463,203)	(76,607)	(274,523)
	교통시설특별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복권기금			90,975	95,646	108,333	107,593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52,204	460,105	272,597	272,597	319,910	319,910
보전수입	여유자금 회수	-	-	-	22,668	12,189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등	-	4,424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부위원회)』,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부위원회)』, 2024.;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기금 평가』, 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예환세)의 세수는 2021년부터 도입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로 인하여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교예환세의 세수 감소로 인하여 기후대응기금의 2022년 교예환세 수입 예산안 1조 761억원은 실제 결산에서는 7,632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대폭 확대하여 충당하였다.

정부는 2021년 11월 휘발유, 경유, 부탄의 유류세를 20% 인하하였으며 이후 단계별로 인하율을 변경하여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 오고 있다. 현재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는 2025년 4월 말까지 유지되고 이후 세율을 조정하여 6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내연차의 연료소비 규모가 줄어들어 따라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표 5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 11. 12. ~ '22. 4. 30.	'22. 5. 1. ~ 6. 30.	'22. 7. 1. ~ 12. 31.	'23. 1. 1. ~ '24. 6. 30.	'24. 7. 1. ~ 10. 31.	'24. 11. 1. ~ '25. 4. 30.	'25. 5. 1 ~ 6. 30.
			△20%	△30%	△37%	휘발유△25%	△20%	△15%
				경유△37%	△30%	△23%	△15%	
				부탄△37%	△30%	△23%	△15%	
휘발유	820	656	573	516	615	656	698	738
경유	581	465	407	369	369	407	448	494
부탄	203	163	142	130	130	142	156	173

출처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보도자료, 2025. 4. 22. p. 1

표 6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세청 세수(A)	283.5	284.4	277.3	334.5	384.2	335.7
교통·에너지·환경세(B)	15.3	14.6	13.9	16.6	11.1	10.8
비율(B/A)	5.4	5.1	5.0	5.0	2.9	3.2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2. 7. 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과 같이 현재의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법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수요가 급증하는 기후예산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보완을 통해 탄소가격제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원 조달의 방안은 탄소세 등 신규 세제의 도입, 화석연료보조금의 축소, 녹색국채의 발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녹색국채 발행은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재원조달 방안과는 달리 상환의 의무가 발생한다.

3 녹색채권과 녹색국채

가. 개념

ESG채권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개선과 같은 사회책임투자과 관련한 프로젝트 및 활동의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고정 수익증권⁶⁾으로,

6) World Bank(2022)

ESG채권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속가능채권(Sustainable Bonds),⁷⁾ 테마틱 채권(Thematic Bonds), 지속가능개발 목표 채권(SDGs Bonds), GSS(Green, Social, Sustainability) 혹은 GSS+ 채권 등으로 일컬어진다.⁸⁾ ESG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자금이 해당 영역에 투입되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ESG채권은 일반적으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채권의 사용처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적 검증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SG채권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P에 따르면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ESG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에서 2023년 13%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⁹⁾

ESG채권은 발행자금의 사용처 및 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자금의 용도에 기반한 ESG채권으로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자금의 목적에 기반한 ESG채권은 지속가능연계채권이 이에 해당된다. 녹색채권(Green bonds)은 기후 혹은 환경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며,¹⁰⁾ 사회적채권(Social Bonds)은 의료 및 교육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¹¹⁾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s)은 환경과 사회적 프로젝트 모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며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분야를 동시에 포함한다.¹²⁾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은 발행자가 미리 정의된 지속가능성 혹은 ESG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 및 구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채권 상품을 일컫는다.¹³⁾

7) 본 보고서는 Sustainable Bonds라는 넓은 개념의 채권들과 그 일부에 해당되는 Sustainability Bonds를 구분하기 위해, 지속가능채권(Sustainable Bonds)과 지속가능성채권(Sustainability Bonds)으로 구분함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5)

9) Cochelin et al.(2024)

10) World Bank(2015)

11) ICMA(2023)

12) ICMA(2021)

13) ICMA(2024)

표 7 ESG채권 유형 및 특징

채권 유형	채권 종류	발행기준	자금의 사용	발행자 의무
자금용도 기반 (Use of Proceeds)	녹색채권(Green Bonds)	• ICMA Green Bond Principles •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 적격 환경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투자·차환	• 자금 배분 및 보고
	사회적채권(Social Bonds)	• ICMA Social Bond Principles	•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투자·차환	• 자금 배분 및 보고
	지속가능채권 (Sustainability Bonds)	• ICMA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 적격 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투자·차환	• 자금 배분 및 보고
목표 기반 (Target Based)	지속가능연계채권 (Sustainability-Linked Bonds)	• ICMA 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 발행자 자율	• 목표 달성 및 보고

출처 최순영(2023), p. 2

녹색채권은 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의 네 가지 요건(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을 충족하는 채권이다.¹⁴⁾ 녹색채권은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차이가 있다. 녹색채권을 포함하여 ESG채권은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녹색채권을 녹색국채(sovereign green bonds)로 정의할 수 있다.

녹색채권의 발행기준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 Initiative, CBI)의 기후채권기준(Climate Bond Standards, CBS)이 대표적이며 녹색채권 발행 국가 혹은 지역별로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발행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일본은 일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s Guideline, GBG) 등의 기준에 따라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분류체계(Taxonomy)는 기후,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 자산, 그리고 프로젝트의 범주를 식별하는 체계를 칭한다. 이는 기후 환경과 관련된 기준 및 목표들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된다.¹⁵⁾ 2013년 제정된 기후채권 이니셔티브(CBI)의 기후채권 분류체계(Climate Bonds Taxonomy)는 현재 국제자본시장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2021년 9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판본은 △ 에너지, △ 교통, △ 수자원, △ 건축, △ 토지 및 해양자원, △ 산업, △ 폐기물·오염 관리, △ ICT의 8개 분야의 165개 소영역을 포괄하고 있다.¹⁶⁾ 2020년 6월에 제정된 EU 분류체계 규정(EU

14) 환경부·금융위원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거래소,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2. 12.

15) ICMA(2021)

16) Climate Bonds Initiative(2021)

2024년 말 기준
녹색채권의 누적
발행 규모는
3.5조 달러로 전체
ESG채권 발행량
5.7조 달러의
61.9%에
해당한다.

Taxonomy Regulation)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공공분야 분류체계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가장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다루고 있다.¹⁷⁾ EU 분류체계는 ①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CCM), ②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CCA), ③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제어,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목표로 지정하였다.¹⁸⁾

나. 녹색채권 현황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ESG채권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ESG채권의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누적 ESG채권 발행 규모는 4.4조달러였으나 2024년 12월 말 기준, 누적 ESG채권 발행 규모는 5.7조달러로 1년 만에 30%가 증가하였다.¹⁹⁾ 녹색채권시장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기후인식채권(Climate Awareness Bond)이 처음 선을 보인 이후 채 이십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하였다. 녹색채권은 ESG채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²⁰⁾ 2024년 말 기준 녹색채권의 누적 발행 규모는 3.5조달러로 전체 ESG채권 발행량 5.7조달러의 61.9%에 해당한다.

17) ICMA(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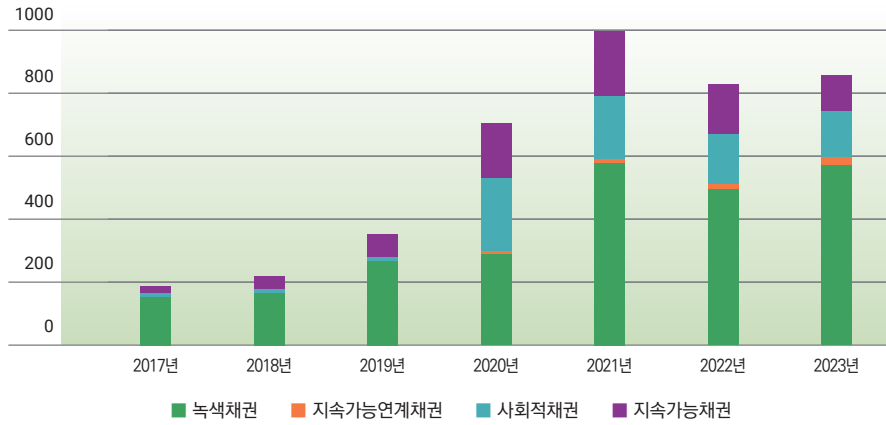
18)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2020), 제23항

19) Climate Bonds Initiative, "Climate Bonds Initiative 5 for 25," 2025.

20) 김학겸 안희준(2022)

그림 1 전 세계 ESG채권 발행 추이(2017~2023)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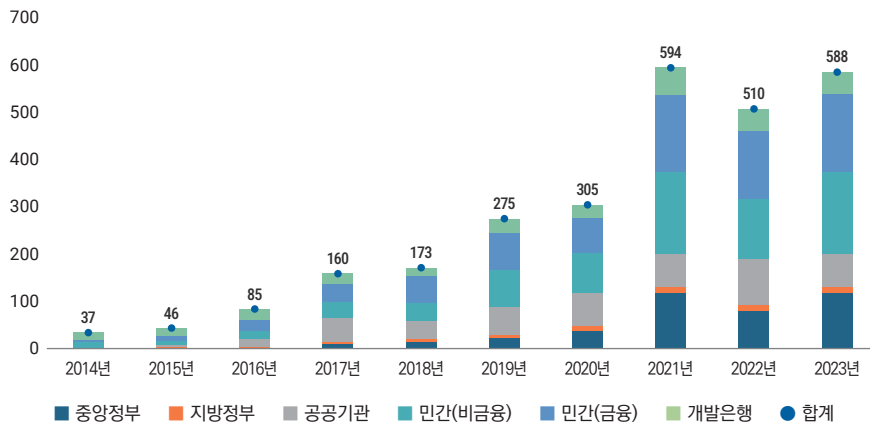


출처 Climate Bonds Initiative, Sustainable Debt Global State of the Market 2023, 2024. p. 3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녹색국채는 2016년 폴란드에서 최초로 발행된 이후 급격히 발행 규모가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체 녹색채권 발행의 20.3%를 차지한다.

그림 2 발행처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14~2024)

(단위: 십억달러)



출처 Climate Bonds Initiative, Interactive Data Platform, <https://www.climatebonds.net/market/data/>, 검색일자: 2025. 2. 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녹색채권 누적 발행금액에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녹색국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 Initiative, CBI) 데이터 기준 14.0%에 해당한다. 지방정부의 녹색채권은 3.2%, 공공기관은 18.0%이며 민간(금융)은 27.3%, 민간(비금융)은 26.8%를 차지한다.

표 8 발행처별 녹색채권 누적 발행금액(CBI 데이터)

(단위: 십억달러, %)

발행처	2014-2023 합계 금액	비율
중앙정부	386.8	14.0
지방정부	88.0	3.2
공공기관	498.5	18.0
민간(비금융)	742.4	26.8
민간(금융)	757.4	27.3
개발은행	299.5	10.8
합계	2,772.60	100.0

출처 Climate Bonds Initiative, Interactive Data Platform, <https://www.climatebonds.net/market/data/>, 검색일자: 2025. 2. 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자료에 따르면 녹색채권 자금은 에너지(35%), 건물(25%), 교통(19%), 수자원(7.4%), 폐기물(4.3%) 등의 기후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녹색채권 자금의 사용처

(단위: 십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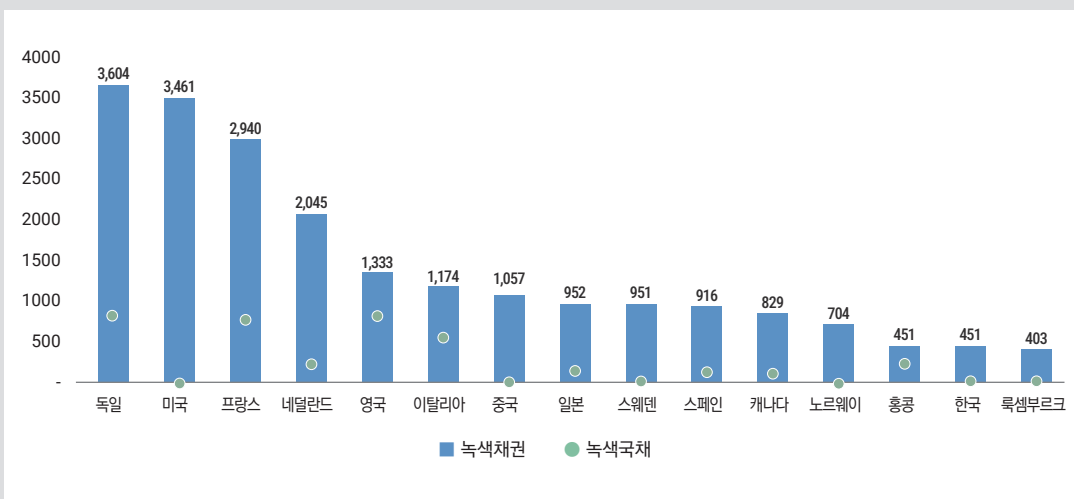
분야	금액	비중
에너지 (Energy)	965	35
건물 (Buildings)	707	25
교통 (Transport)	522	19
수자원 (Water)	206	7.4
폐기물 (Waste)	119	4.3
토지 이용 (Land Use)	137	4.9
산업 (Industry)	29	1.0
정보통신기술 (ICT)	29	1.0
기타/미지정 적응 및 회복력 (Unspecified A&R)	73	2.6
총계 (Total)	2,785.00	100

출처 Climate Bonds Initiative, Interactive Data Platform, <https://www.climatebonds.net/market/data/>, 검색일자: 2025. 2. 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말 기준 88개 국가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국가별 누적 발행 규모는 독일이 3,604억달러로 가장 크고, 미국 3,461억달러, 프랑스 2,940억달러, 네덜란드 2,045억달러, 영국 1,333억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국가별 녹색채권과 녹색국채 누적 발행량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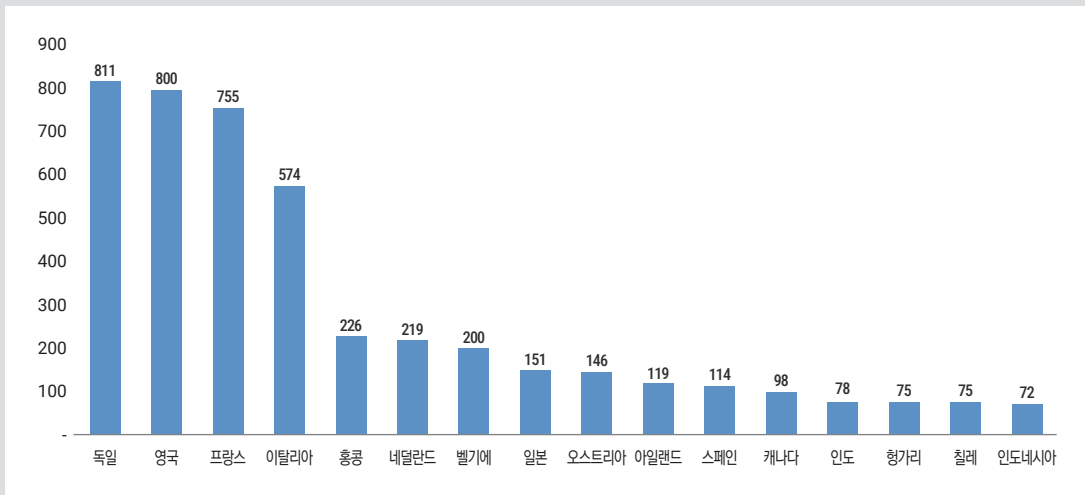


출처 ICMA Sustainable Bond Market Data, <https://www.icmagroup.org/sustainable-finance/sustainable-bonds-database/>, 검색일자: 2025. 5. 3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데이터에 따르면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국가는 2025년 5월 말 기준 38개 국가이며 국가별 누적 발행 규모는 독일 811억달러, 영국 800억달러, 프랑스 756억달러, 이탈리아 574억달러, 홍콩 226억달러, 네덜란드 219억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가별 녹색국채 누적 발행량

(단위: 억달러)



출처 ICMA Sustainable Bond Market Data, <https://www.icmagroup.org/sustainable-finance/sustainable-bonds-database/>, 검색일자: 2025. 5. 3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6년 폴란드가 최초로 녹색국채를 발행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녹색국채를 발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도 녹색국채 발행 국가에 합류하였다. 일본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이하 GX 추진전략)’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2월 녹색국채에 해당하는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이하 GX 경제 이행채)’을 1조 6천억엔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향후 10년간 총 20조엔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다.²¹⁾ 중국은 2025년 4월 총 60억위안(한화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녹색국채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력발전, 해양 생태 복원 등 녹색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²²⁾

다. 기대효과와 한계

녹색채권의 기대효과는 첫째,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기후·환경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녹색채권에 대한 높은 수요로 그린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그리니엄(greenium)이

21) 이보람 손원주,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22)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中, 英서 1조2000억 '녹색국채' 발행...日 연기금도 ESG 전략 고수」, 2025. 4. 7.,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20559>, 검색일자: 2025. 4. 10.

표 10 국가별 녹색국채와 녹색채권 누적 발행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국가명	녹색국채(A)	녹색채권(B)	녹색국채 비율(A/B)	녹색국채 최초 발행연도
1	독일	811	3,604	22.5	2020
2	영국	800	1,333	60.0	2021
3	프랑스	756	2,940	25.7	2017
4	이탈리아	574	1,174	48.9	2021
5	홍콩	226	451	50.1	2019
6	네덜란드	219	2,045	10.7	2019
7	벨기에	200	366	54.7	2018
8	일본	151	952	15.8	2024
9	오스트리아	146	324	45.0	2022
10	아일랜드	119	395	30.1	2018
11	스페인	114	916	12.5	2021
12	캐나다	98	829	11.9	2022
13	인도	78	187	41.7	2023
14	헝가리	75	122	61.3	2020
15	칠레	75	150	49.9	2019
16	인도네시아	72	89	80.7	2018
17	싱가포르	67	239	28.1	2022
18	호주	47	376	12.4	2024
19	폴란드	35	99	35.4	2016
20	덴마크	35	383	9.2	2022
21	뉴질랜드	33	94	34.8	2022
22	카타르	25	25	100.0	2024
23	루마니아	24	39	60.2	2024
24	스위스	24	190	12.4	2022
25	스웨덴	23	951	2.4	2020
26	이스라엘	20	35	57.1	2023
27	사우디아라비아	16	40	39.1	2025
28	세르비아	12	12	100.0	2021
29	아이슬란드	8	38	21.5	2024
30	한국	8	451	1.8	2019
31	중국	8	1,057	0.8	2025
32	도미니카공화국	8	8	99.3	2024
33	이집트	8	8	100.0	2020
34	콜롬비아	6	8	69.8	2021
35	우즈베키스탄	3	8	41.7	2023
36	리투아니아	0.8	8.8	9.4	2018
37	나이지리아	0.4	0.9	43.4	2017
38	피지	0.2	0.2	100.0	2017
	합계	4,923	19,948	24.7	

출처 ICMA Sustainable Bond Market Data, <https://www.icmagroup.org/sustainable-finance/sustainable-bonds-database/>, 검색일자: 2025. 6.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는 투자자베이스를 확대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하여 일반 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그리니엄(Greenium)은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로 녹색채권의 차입금리가 일반채권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발행자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말한다. 녹색채권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투자자들의 녹색기업에 대한 선호와 기업의 기후위험에 대한 헤지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서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Pastor et al., 2021). 반대로, 혐오산업에 속한 기업은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으며, 또 높은 소송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비용의 상승과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Hong and Kacperczyk, 2009). 결과적으로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는 투자자베이스를 확대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Tang and Zhang, 2020).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녹색국채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기후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그리니엄으로 인해 일반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녹색국채의 발행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와 이를 위한 정부투자 추진을 공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녹색채권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직접 녹색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의 규모가 작고 깊이가 얇은 경우 녹색채권시장을 확대하고 투자대상 자산을 다양화하며, 녹색채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²⁴⁾ 다수의 국가가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그린워싱(greenwashing) 발생에 대한 우려이다. 그린워싱은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실제 조달 목적과 다른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녹색채권 발행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둘째, 녹색채권에 요구되는 추가절차에 대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녹색채권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투자 여부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기업이 투자

23) 안지연 외(2022)

24) 안지연 외(2022)

를 통해 환경에 기여한 효과를 투자자에 보고하며 이를 외부 전문기관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가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녹색채권의 발행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셋째, 녹색채권은 자금의 사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녹색프로젝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배출 저감이 시급한 화석연료 산업이나 기업²⁵⁾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기후변화 완화에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녹색채권의 한계로 인하여 전환채권 등의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녹색국채의 발행은 이러한 녹색채권의 한계점 외에도 추가적인 이슈가 지적되고 있다. 녹색국채를 기존 국채의 대체가 아닌 추가 국채의 발행으로 진행할 경우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국가채무 비율도 상승하여 심각한 적자 재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라. 녹색채권과 녹색국채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녹색채권시장의 성장과 늘어나는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녹색채권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녹색국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녹색채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녹색채권의 프리미엄 효과의 발생 원인, 프리미엄 효과의 실제 발생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녹색채권의 프리미엄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녹색 프리미엄인 그리니엄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문헌은 다음과 같다(Ehlers and Packer, 2017; Baker et al., 2018; Nanayakkara and Colombage, 2019; Slimane et al., 2020; Pastor et al., 2021). Baker et al.(2018)은 2010~2016년 미국 지자체와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 분석 결과 지자체의 녹색채권에 6bp의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기후채권기구(CBI) 등 3자 인증을 받은 경우 이러한 프리미엄은 2배 이상 증가한다. Ehlers and Packer(2017)는 일반채권과 녹색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녹색채권이 일반채권보다 평균 18bp 낮은 수익률로 발행되어 녹색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프리미엄은 발행 후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채권 유통시장 자료를 사용하여 녹색채권의 유통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한

녹색국채를 기존 국채의 대체가 아닌 추가국채의 발행으로 진행할 경우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국가채무비율도 상승하여 심각한 적자 재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5)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자금조달은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함(황원정 외, 2024)

녹색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의
희소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며
높은 유동성과
투명성이
그린프리미엄
축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김학겸·안희준, 2022)는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에 유통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관찰하였다.

일부 연구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그린 프리미엄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Hyun et al.(2020)은 외부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녹색채권의 경우 유의한 프리미엄이 관측됨을 보고하였고, Zerbib(2019)는 금융기관이 발행하였거나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녹색채권의 경우 더 뚜렷한 프리미엄을 관찰하였다. Fatica et al.(2021)은 발행기관이 초국가기관이거나 금융기관일 경우 프리미엄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연구는 녹색채권의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ng and Zhang(2020)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8개국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미한 그린 프리미엄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Larcker and Watts(2020)는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지방정부의 녹색채권 프리미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 Initiative, 2018a, 2018b, 2019a, 2019b, 2020)는 때로는 녹색프리미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간 중에는 반대로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기도 하는 등 상반된 결과를 발견하였다.

녹색국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녹색국채의 프리미엄에 대한 분석은 녹색채권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anda et al.(2024)은 녹색국채(SGB, Sovereign Green Bonds)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간주하였다. Ando et al.(2023)은 녹색국채 발행 시 선진국은 평균 4bp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그린 프리미엄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며 신흥국에서는 평균 11bp의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트윈본드로 녹색국채를 발행한 덴마크와 독일은 3bp의 소규모 프리미엄을 보이지만 특정 기간에는 디스카운트가 나타나기도 한다. OECD(2024a)는 ESG채권시장 전체의 성장 속에서도 녹색국채의 프리미엄은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녹색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의 희소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며 높은 유동성과 투명성이 그린프리미엄 축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진국에선 프리미엄이 약화되어 유럽에는 그리니엄이 사라졌으며 트윈본드인 독일 녹색국채도 일반 국채와의 차이가 점차 사라졌다. 녹색 프리미엄은 수요 요인에 의해 주도하기 때문에 신흥국, 초국적기업에는 여전히 그리니엄이 존재하지만 신흥시장의 유동성 증가 시 그리니엄이 사라질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녹색채권의 그리니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가 있으며, 존재한다 하더라도 시장 유동성의 증가 시 그리니엄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녹색채권의 인증 및 추가적인 비용 등을 감안하면 녹색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해 추가적인 환경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근거가 제시되었다. Lam and Wurgler(2024)는 녹색채권 발행으로 기존보다 추가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에서 발행되는 녹색채권 분석 결과 대부분은 기존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고 겨우 2%만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에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녹색채권의 프리미엄과 추가자금 조달에 대한 부정적인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녹색국채의 발행에는 다른 기대효과를 찾을 수 있다. 녹색국채의 발행은 녹색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녹색국채 발행은 민간 녹색채권 발행에 양적, 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후정책을 강력히 수행하는 국가에서 이런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Cheng et al., 2024). 이는 국가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의 강화로 인해 민간기업의 프레임워크 강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색국채의 발행 자체가 그리니엄과 상관없이 발행 국가의 친환경·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²⁶⁾

녹색국채발행은
민간 녹색채권
발행에 양적,
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후정책을
강력히 수행하는
국가에서 이런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우리나라 녹색채권과 녹색국채 현황

가. 녹색채권 추진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녹색채권은 친환경사업 투자를 목표로 2013년 미화 5억달러 규모의 수출입은행 채권을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한 것이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2018년 5월 29일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3,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그 이후로 국내 녹색채권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하였으며 발행액과 발행기관의 수, 유통시장의 거래 모두²⁷⁾ 증가하였다. 녹색채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 : K-GBG)」, 국제

26) OECD 담당자 인터뷰(2025. 4. 4., 파리)

27) 김학겸 안희준(2022)

2022년 12월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전환부문에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관련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7건의 신규 경제활동을 추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보완 개정하였다.

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기후채권 기준(Climate Bond Standards, CBS)」 또는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 원칙 등에 부합해야 한다.

정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2020년 12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²⁸⁾ 이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²⁹⁾를 마련하였으며 2021년 12월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였다. 2022년 12월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전환부문에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관련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7건의 신규 경제활동을 추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보완 개정하였다. 2024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2개 부문(녹색부문, 전환부문)의 84개 경제활동을 명시하였다. 이 개정판에는 기후변화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적응)에 비해 세부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물, 순환경제 등 4개 분야의 인증기준 추가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21.12)한 것으로, 녹색채권(23~), 녹색여신(25~)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할 수 있다.³⁰⁾ 6대 환경목표에는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이 포함된다. 2025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감축효과가 큰 '전환' 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28) 환경부,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보도자료, 2020. 12. 28.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4)

30) 관계부처 합동,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 보도자료 참고자료, 2024. 12. 23.

표 11 우리나라 녹색채권 추진 현황

시기	추진현황
2018	녹색채권 첫 발행 (산업은행, 3,000억원)
2019	녹색국채(외평채) 첫 발행
2020. 12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행
2021. 4	녹색분류체계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21.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초 수립
2022. 12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2022.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 개정: 원자력 포함 7건 신규 경제활동 추가
2023. 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3. 3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서 지속가능연계채권 추진 밝힘
2024. 3	금융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환경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발표
2024.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 4개 환경목표 일부 개정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제도도 도입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이며, 지원금리는 2023~2024년에는 대기업·공공기관은 0.2%p, 중견·중소기업은 0.4%p, 2025년에는 대기업·공공기관은 0.2%p, 중견·중소기업은 1%p 수준이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반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요건이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의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행된 전체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또한, 2024년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고 발행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이 채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4%p, 중견기업의 경우 2%p 수준으로 1년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총 139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약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성공하였다.

나. 우리나라 녹색채권 현황

우리나라의 ESG채권은 2018년 산업은행의 녹색채권 3,000억원을 포함한 1.3조원 규모 채권의 발행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64조원의 발행규모로 성장하였다. 2024년 말 기준 국내에 상장된 ESG채권 잔액은 총 260.5조원에 달한다. ESG채권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 사회적채권의 발행 비중은 전체의 83.0%, 녹색채권이 10.5%, 지속가능채권이 6.4%, 지속가능연계채권은 0.1%로 사회적채권 위주의 발행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대부분 사회적채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전체 ESG채권의 발행액도 사회적채권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의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0년부터 탄소중립 선언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³¹⁾

표 12 우리나라의 ESG채권 현황(2024년 말 상장잔액 기준)

(단위: 개, 십억원, %)

채권종류	발행기관 수	종목 수	상장잔액	비율
녹색채권	89	301	27,331	10.5
사회적채권	118	1,701	216,141	83.0
지속가능채권	50	255	16,735	6.4
지속가능연계채권	2	6	360	0.1
전체	211(259) ¹⁾	2,263	260,5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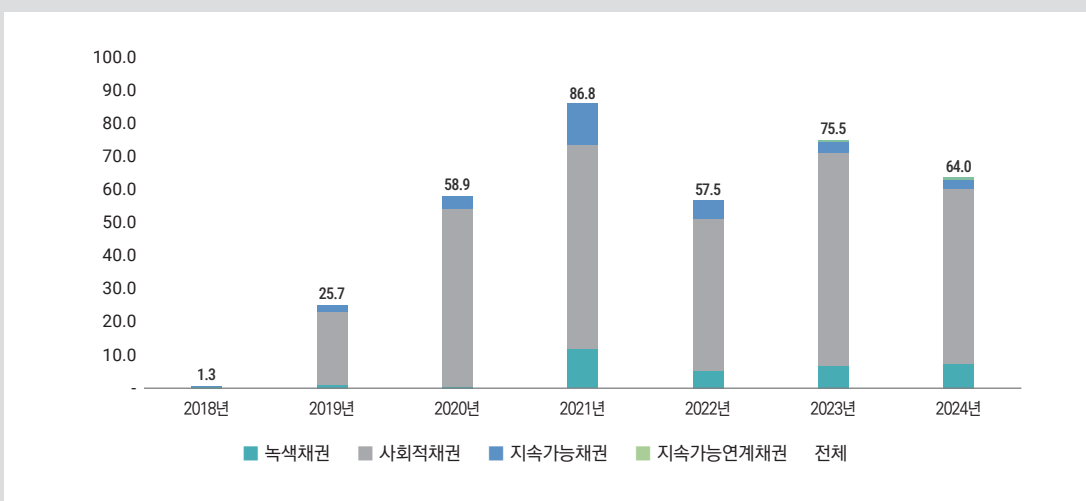
주 1) 중복을 제거한 기관 수(누적 발행기관 수)

출처 한국거래소 ESG채권 채권현황 데이터, <https://sribond.krx.co.kr/contents/02/02010000/SRI02010000.jsp>, 검색일자: 2025. 2. 1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31) 김학겸 안희준(2022)

그림 5 우리나라 연도별 ESG채권 발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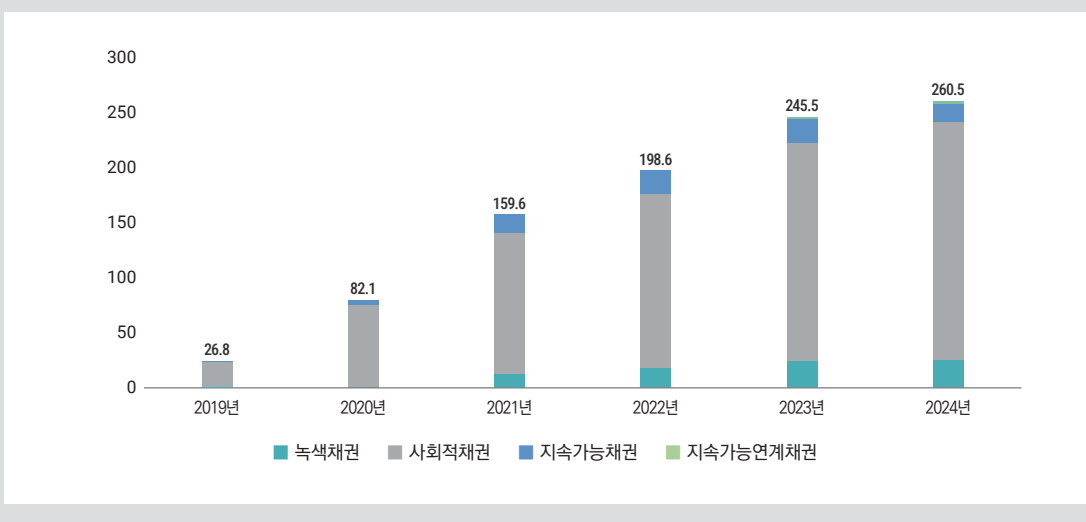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한국거래소 ESG채권 채권현황 데이터, <https://sribond.krx.co.kr/contents/02/02010000/SRI02010000.jsp>, 검색일자: 2025. 2. 1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우리나라 ESG채권 상장 잔액(2024. 12. 31. 기준)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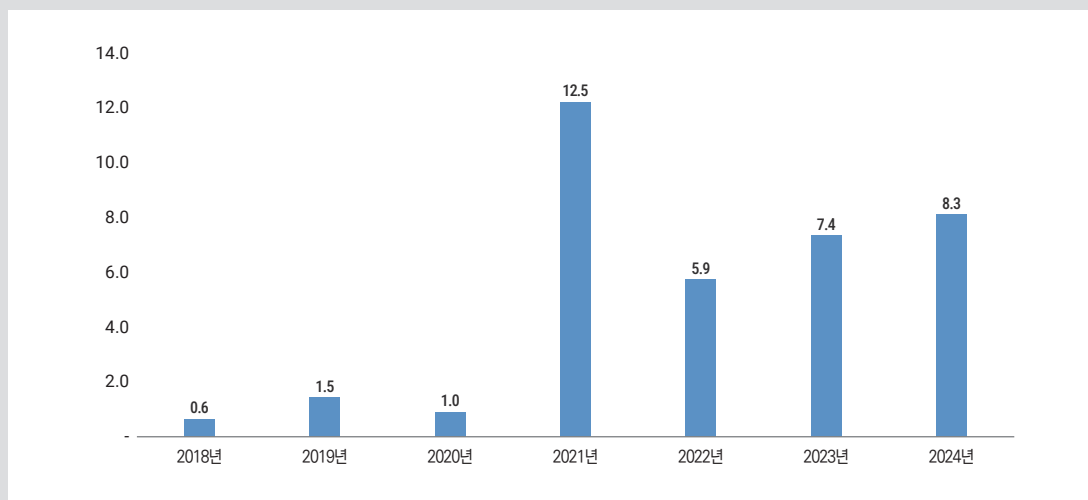


출처 한국거래소 ESG채권 채권현황 데이터, <https://sribond.krx.co.kr/contents/02/02010000/SRI02010000.jsp>, 검색일자: 2025. 2. 1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녹색채권은 2018년 최초 3종목을 발행한 이후 2019년에 18종목, 2020년에 10종목이 발행되는 등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보이다가 2020년 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시장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은 종목 수로는 119건, 발행금액으로는 12.5조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발행규모가 5.9조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국내 녹색채권 발행 종목 수는 총 87건, 발행 금액은 약 8.3조원으로 집계된다.

그림 11 우리나라 연도별 녹색채권 발행 규모

(단위: 조원)



출처 한국거래소 ESG채권 채권현황 데이터, <https://sribond.krx.co.kr/contents/02/02010000/SRI02010000.jsp>, 검색일자: 2025. 2. 1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3 우리나라의 ESG채권 현황(2024년 말 상장잔액 기준)

(단위: 조원, 개,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상장금액	0.6	1.5	1.0	12.5	5.9	7.4	8.3
발행기관 수	3	5	4	59	31	39	42
종목 수	3	18	10	119	76	89	87

출처 한국거래소 ESG채권 채권현황 데이터, <https://sribond.krx.co.kr/contents/02/02010000/SRI02010000.jsp>, 검색일자: 2025. 2. 1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녹색채권의 기관별 발행 규모는 상장 잔액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2.6조원, 포스코퓨처엠이 1.7조원, 현대캐피탈, 1.7조원 순으로 나타난다.

다. 녹색국채 도입 논의

정부는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1950년 최초로 국채를 발행한 이후 다양한 국채가 발행되었으며 현재는 국고채권(국고채), 개인투자용국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는 각 기금 및 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서 국가재정자금 조달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국내 채권시장에서 지표채권(Benchmark)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13 국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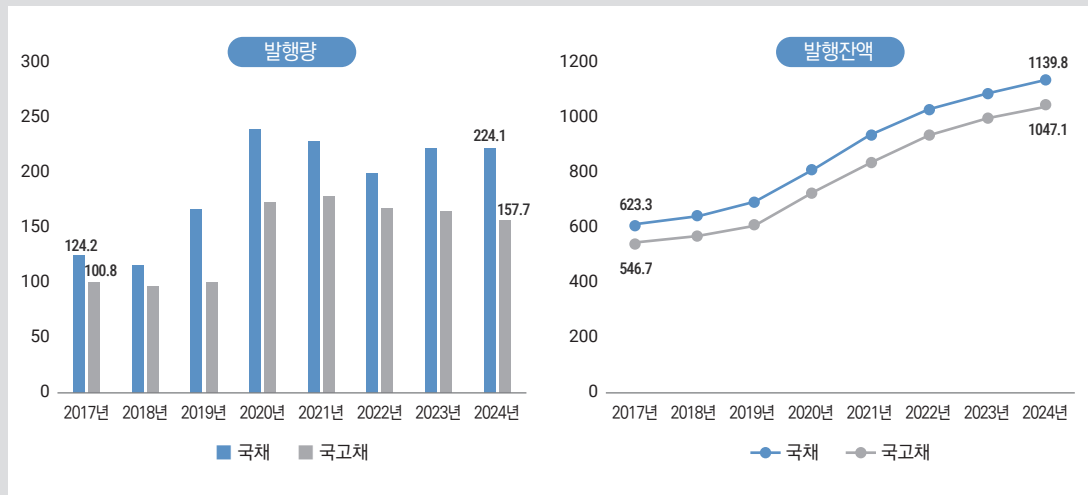
구분	발행 목적	발행 방법	만기	표면 이자
국고채	재원 조달	경쟁입찰	2, 3, 5, 10, 20, 30, 50년	입찰시 결정
개인투자용 국채	국채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청약방식	10, 20년	사전공고
재정증권	일시 부족 자금 조달	경쟁입찰	1년 이내	0%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민간의 원활한 외화채권 발행 여건 조성	경쟁입찰	발행시 결정	발행시 결정
(제1종)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 재원조달	첨가소화	5년	1.30%

출처 기획재정부, 『국채 2024』, 2024. p. 25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7년 기준 국채 발행잔액은 623.3조원이었으나 2024년 기준 1,139.8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고채 발행잔액도 동기간 546.7조원에서 1,047.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국고채의 발행량은 157.7조원으로 전체 국채 발행량의 70.4%에 해당하며 2024년 말 기준 국고채의 발행잔액은 전체 국채 발행잔액 대비 91.9%에 달한다. 국고채 발행량은 2019년까지 100조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70조원 내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1 우리나라 국채와 국고채의 발행량 및 발행 잔액

(단위: 조원)



주 발행 기준임
출처 기획재정부, 『국채 2024』, 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억달러, 7억유로 규모의 외평채를 녹색채권 형태로 발행한 적이 있으나 국고채는 아직까지 녹색채권 형태로 발행한 적은 없다. 다만 녹색국채 도입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발표된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에서는 국고채 상품 다변화 검토의 일환으로 녹색 국고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중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0월 우리나라가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는³²⁾ 정부는 추가적인 국고채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전환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국채 추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4년 12월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과 2025년 4월 발행된 『국채 2024』에서는 향후 추진과제로 녹색국채 도입 방안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월에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저탄소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녹색국채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녹색국채의 구체적인 발행 시기와 추진 방안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이다.

32) 우리나라 국채가 WGBI 지수에 실제 반영되는 것은 2026년 4월부터임. 정부는 WGBI 편입으로 75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5)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현재 재원 조달 방안은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녹색국채는 부족한 기후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볼 만한 수단이다. 녹색국채는 유럽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도입되어 정부의 친환경정책과 기후대응 정책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녹색국채 도입 방안을 준비하고 향후 녹색국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녹색국채는 발행국가의 기후대응 및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평판을 높일 수 있고, 기후대응 및 친환경 녹색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녹색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인해 기존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녹색국채를 국가가 발행함에 따라 민간 녹색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엄격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녹색국채의 발행은 자금의 추가 조달보다는 기존 채권의 상환에 대부분이 활용될 수도 있고(Lam and Wurgler, 2024), 기대했던 녹색채권의 프리미엄인 그리니엄이 실제로는 미미할 수도 있다(Tang and Zhang, 2020; Larcker and Watts, 2020; 국제기후채권기구(CBI), 2018a, 2018b, 2019a, 2019b, 2020; OECD, 2024a). 그리고 녹색국채를 추가 발행함에 따라 부채의 규모가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녹색국채가 도입 목표에 기여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국채의 도입 목적과 활용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국채는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중 차입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해당하는 규모와 기후대응기금의 추가 증분의 규모가 녹색국채 발행의 규모로 적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재정투자계획 중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녹색국채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기후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을 사용할 사업의 선정, 자금의 집행, 성과에 대해 사전 및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국채 운용과 관리를 위한 한국녹색국채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프레임워크에는 정부의 기후대응

녹색국채는 발행국가의 기후대응 및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평판을 높일 수 있고, 기후대응 및 친환경 녹색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녹색국채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녹색국채 자금으로 조성된 예산에 대해 녹색예산태깅 방식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목표와 국제 목표 등을 고려한 녹색국채의 목표 설정, 녹색채권 원칙과 k-택소노미의 활용, 자금 활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녹색국채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협업을 위한 작업반, 예산과 프로젝트 심사 및 승인을 담당하는 녹색국채위원회,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자문단 등의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국채로 조달한 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녹색예산태깅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 녹색국채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는 사용처와 집행,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 예산 중 녹색예산에 대해 식별하여 집계하고 성과를 관리하여 예산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녹색예산태깅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다. 녹색국채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녹색국채 자금으로 조성된 예산에 대해 녹색예산태깅 방식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녹색예산태깅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2023년도 예산부터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온실가스 감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녹색국채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후예산의 기후변화 적응, 정의로운 전환, 인재양성 등의 사업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기후인지예산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녹색국채 상황에 대한 계획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녹색국채는 기본적으로 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 만기 시점이 되면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녹색국채는 즉각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볼 수는 없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원인 배출권거래제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단기적인 자금조달방안으로 녹색국채를 병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X 경제이행체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수익과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부과세를 통해 상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³³⁾ 우리나라의 녹색국채 발행에 있어서도 녹색국채를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3)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으로는 2033년부터,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부과세로는 2028년부터 상환금을 충당하게 된다(임팩트온, 2024. 2. 14.).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5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별첨자료, 2025. 1. 2.
- 관계부처 합동,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 보도자료 참고자료, 2024. 12. 23.
-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포함)」, 2023. 4
-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3.
-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 2023.
-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기금 평가』, 2024.
- 금융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보도자료 별첨자료, 2024. 3. 19.
- 기획재정부,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별첨자료, 2024. 12. 30.
- 기획재정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우리 국채시장 도약의 발판」, 2024. 12. 3.
- 기획재정부, 『국채 2023』, 2024.
- 기획재정부, 『국채 2024』, 2025.
-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 2022. 12. 22.
-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보도자료, 2025. 4. 22.
- 김학겸·안희준, 「국내 채권시장에 녹색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채권시장 유통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증권학회지』, 제51권 4호, 2022, pp. 383~416.
-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4.
-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4.
- 안지연·박복영·배유진·안혜지·하기욱,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이보람·손원주,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 이병윤·임진,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탄녹위·금융연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24. 7. 15.
- 최순영,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국내 도입에 따른 기대와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3.
- 『임팩트온』, 「일본, ETS 보충 첫 기후전환채권 발행...엠투엑스 바클레이즈,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발표」, 2024, 2. 14.,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76>, 검색일자: 2025. 2. 8.

참고문헌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中, 英서 1조2000억 ‘녹색국채’ 발행…日 연기금도 ESG 전략 고수」, 2025. 4. 7.,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20559>, 검색일자: 2025. 4. 1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시아의 ESG 채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 환경부,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보도자료, 2020. 12. 28.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보도자료, 2023. 2. 22.
- 환경부, 「친환경 투자의 길 다듬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보도자료, 2024. 12. 20.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투자규모 확대」, 보도자료, 2024. 12. 24.
- 환경부,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보도자료, 2024. 12. 24.
- 환경부 금융위원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거래소,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2. 12.
- 황원정·이상원·김세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기후대응 추진 약화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은행산업분석, 2024. 4. 12.
- Ando, Sakai, Fu, Chenxu, Roch, Francisco and Wiriadinata, Ursula, “How Large is the Sovereign Greenium?,” IMF Working Paper No. 2023/080, April, 2023, pp. 1~14.
- Baker, M., D. Bergstresser, G. Serafeim, and J. Wurgler, “Financing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Pricing and Ownership of U.S. Green Bonds,” NBER Working Paper 25194, 2018, https://ssrn.com/abstract_id=3275327, 검색일자: 2025. 2. 1.
- Cheng, G., Ehlers, T., Packer, F., and Xiao, Y., “Sovereign green bonds: a catalyst for sustainable debt market development?,” BIS Working Papers, No. 1198, July 2024, pp. 1~25.
- Climate Bonds Initiative, *Sustainable Debt Global State of the Market 2023*, 2024.
- Climate Bonds Initiative, “Climate Bonds Initiative 5 for 25,” 2025.
- Climate Bonds Initiative, *Climate Bonds Taxonomy*, 2021.
- Climate Bonds Initiative(CBI),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H1–Q2) 2018, 2018a.
- Climate Bonds Initiative(CBI),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H2(Q3–Q4) 2018, 2018b.
- Climate Bonds Initiative(CBI),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H1(Q1–Q2) 2019, 2019a.
- Climate Bonds Initiative(CBI),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H2(Q3–Q4) 2019, 2019b.
- Climate Bonds Initiative(CBI),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H1(Q1–Q2) 2020, 2020.

참고문헌

- Cochelin, Patrice, Bryan Popoola, and Emmanuel Volland, Sustainable Bond Issuance To Approach \$1 Trillion In 2024, S&P, 2024.
- Ehlers, T., and F. Packer, "Green Bond Finance and Certification," *BIS Quarterly Review*,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September. 2017, pp. 89~104.
-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Navigator," <https://ec.europa.eu/sustainable-finance-taxonomy/> (검색일자: 2025. 1. 15.)
- Fatica, S., R. Panzica, and M. Rancan, "The Pricing of Green Bonds: Are Financial Institutions Special?,"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Vol. 54. Volume 54, June 2021.
- Hong, H., and M. Kacperczyk, "The Price of Sin: The Effects of Social Norms on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93, 2009. pp. 15~36.
- Hyun, Suk, Donghyun Park, and Shu Tian, "The Price of Going Green: The Role of Greenness in Green Bond Markets," *Accounting & Finance*, 60(1), 2020, pp. 73~95.
- ICMA, *Overview and 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Finance Taxonomies*, 2021.
- ICMA, *Social Bond Principles*, 2023.
- ICMA, *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2024.
- Larcker, David F. and Edward M. Watts. "Where's the Greeniu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69, No. 2-3. 2020.
- Lam, P. and Wurgler, J., "Green Bonds: New Label, Same Projects," NBER Working Paper, No. 32960, September 2024, pp. 1~36.
- Nanayakkara, M., and S. Colombage, Do Investors in Green Bond Market Pay a Premium? Global evidence, *Applied Economics*, Vol. 51, pp. 4425~4437, 019.
- Manda, V., Yadav, A., Shivani, and Sangwan, V., "Sovereign green bonds as an unconventional tool to address climate change," *Ecological Questions*, 35(3), 2024, pp. 1~26.
- OECD, *Global Debt Report 2024: Bond Markets in a High-Debt Environment*, OECD Publishing, Paris, 2024.
- Pastor, L., and R. F. Stambaugh, and L. A. Taylor, "Sustainable Investing in Equilibrium,"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42, 2021, pp. 550~571.

참고문헌

Slimane M., E. Brard, T. Le Guenedal, T. Roncalli, and T. Sekine, ESG Investing in Fixed Income: It's Time to Cross the Rubicon, Working Paper, Amundi Asset Management, 2020.

Tang, D., and Y. Zhang, "Do Shareholders Benefit From Green Bond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 61, 2020, <https://doi.org/10.1016/j.jcorpfin.2018.12.001>.

World Bank, *Long-Term Finance*, 2015.

World Bank, *SOVEREIGN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BONDS: Unlocking the Potential for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2022.

Zerbib, Olivier David. "The Effect of Pro-environmental Preferences on Bond Prices: Evidence from Green Bond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98. 2019.

〈웹사이트〉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2. 7.

한국거래소 ESG채권 채권현황 데이터, <https://sribond.krx.co.kr/contents/02/02010000/SRI02010000.jsp>, 검색일자: 2025. 2. 10.

Climate Bonds Initiative, Interactive Data Platform, <https://www.climatebonds.net/market/data/>, 검색일자: 2025. 2. 1.

ICMA Sustainable Bond Market Data, <https://www.icmagroup.org/sustainable-finance/sustainable-bonds-database/>, 검색일자: 2025. 5. 31.

〈인터뷰 자료〉

OECD 담당자 인터뷰, 2025. 4. 4., 파리

정책연구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정환·홍용기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권성오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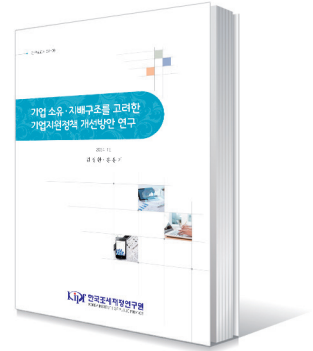
권성준·이경훈·강성훈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 추정에 대한 연구

홍병진·김정환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정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용기 |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두 가지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진행한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성적 분석 파트에서는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종류에 따른 이질성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제도 수혜 기업요건 결정 시 고려할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등에서는 기업집단들이 집단 내에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경제주체임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모기업은 소속 기업의 도산을 막을 유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에 이를 고려한 효율적 기업지원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지원정책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모두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기업 결합이 기업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파악한 후, 현실적으로 기업지원정책에서 기업집단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상세히 살펴본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독점규제, 기업집단 등의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지원정책의 수혜요건에는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추가적으로 독립성 기준이라는 것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거대한 모기업의 일부라면, 그에 따라 지원을 축소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결합이 중요한 제도 수혜요건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며, 이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도 보인다.

두 번째로 정량적 분석 파트에서는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인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간략한 요약 설명을 서술하였다. 네트워크 모형은 연결된 기업들이 상호 간 생산성과 기업 특성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자료의 구축 단계에서는 데이터 결측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EM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이는 자료의 한계로 온전한 변수를 보유한 기업 표본이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단계에서는 결측치 문제를 해결한 데이터로

결합효과를 일반적으로 연결된 기업의 효과, 모기업과 연결된 기업 효과, 자회사와 연결된 기업 효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방법론은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과 네트워크 모형으로 나누어 2019~2023년 5개 연도에 대하여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러 가지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들과 Levinsohn and Petrin(2003) 방식으로 추정한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네트워크 종류와 기업 생산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반최소자승법의 결과, 전체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본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매출액, 고정자산, 그리고 노동비용이며, 연도별 모기업 결합 여부와 생산성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를, 자회사 결합에 대한 계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값을 보였다. 네트워크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모기업 및 자회사 결합효과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회귀분석과는 달리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분석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본 보고서에 담았다.

앞서 언급한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한 방향성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정교화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명확화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기준이 기업집단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이 충분히 최적화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술적 연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규모가 막대한 것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 기업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다 엄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질적 지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 동일한 평균 매출액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 제도가 형식적 지배와 실질적 지배 여부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차등적으로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개별 기업의 규모가 작으나 해당 기업이 충분히 자산총액 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해당 기업을 판단할 때 모기업 및 자회사와 같이 직접적인 소유관계로 이어진 기업의 특성에 보다 가중치를 두어 판단하는 현 방식이 실제 기업의 행태를 잘 반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한 국가의 세제는 가상의 사회계획가(hypothetical social planner)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Persson and Tabellini, 2002).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김진수·김정아·조진권, 2008),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¹⁾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세법개정안은 행정부에서 준비한 뒤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이 입법 활동이나 여론 형성을 통해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세법을 입안하고 협의하는 주요 의사

결정자 중 다수가 선출직인 점은 세계 결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체계를 분석하는 재정학의 최적조세모형에서도 사회 선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aez and Stantcheva, 2016). 예를 들어, 최적조세모형을 통해 상속세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과세 필요성과 적정 과세 수준이 사회 선호에 대한 가정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Farhi and Werning(2013)은 자녀 세대의 기회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uziemko et al., 2015; Almås et al., 2020; Fisman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t al., 2020; Singhal, 2021; Stantcheva, 2021).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선호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조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²⁾을 고려하여, 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Fisman et al.(2020)은 적정 부유세 수준에 대한 선호를 계량화하고, 자산 형성 방식에 따라 부유세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Stantcheva(2021)는 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무작위로 제공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실제 세제와 세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둘째, 세제가 노동 공급, 탈세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셋째, 세목별 및 과세표준 구간별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를 조사한다. 넷째, 경제력, 연령, 정치 성향 등 납세자 인식의 다양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첫째로,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적정 세율 정보를 이용한다. 재정패널 조사는 2018년부터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소득세율을 조사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응답자들은

세목별로 구체적인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 비율을 응답하였다. 둘째로,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견해 등 응답자의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상속세에 중점을 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세제의 재분배 효과, 효율 비용,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실제 세부담 정보 제공,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응답 방식(금액 혹은 비율)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실험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의 적정 세부담에 관한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선행연구 중 Stantcheva(2021)와 Kuziemko et al.(2015)는 응답자에게 상속세 부담을 현행 대비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담 수준에 대한 선호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반면, Singhal(2021)과 Fisman et al.(2020)에서는 소득세와 부유세에 대한 적정 세부담을 소득 및 자산 수준별로 수량화하여 응답자의 구체적인 선호를 추정하였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납세순응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오종현, 2024).

본고의 제II장에서는 설문실험을 이용해 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2) Almás et al.(2020)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간의 세제 및 재분배 정책 차이가 국민들의 선호 차이에 기인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저자들은 피험자들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분배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 선호도가 공정성과 효율성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인들은 노르웨이인들보다 더 많은 불평등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국인들은 소득이 운에 의해 결정되든 능력에 의해 결정되든 이를 공정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공정성 관점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선호와 세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가 수준 자료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와 저소득층 지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국가일수록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소득 격차 개선에 있어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더 누진적인 소득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응답이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응답자가 인식한 적정 세율이 실제 실효세율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서 응답자가 인식한 적정 세율이 실제 실효세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장에서는 상속세에 중점을 둔 자체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적정 세부담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와 비교하여,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세제에 대한 지식,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 해외 선행연구에서 응답자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Stantcheva, 2021). 적정 세부담에 대한 선호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부담 변화 여부, 적정 면세점 수준 및 과세 대상 비율 등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설문실험을 통해 상속세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실제 세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요인이 응답자의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 실효세율을 유산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는 과대 추정하고,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실제 세부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선호가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작위 실험을 통해 세부담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응답자들의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적정 상속세 체계는 실제 세제에 비해 덜 누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응답자들에 비해 상속세를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tcheva, 2021).³⁾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적조세모형에 따르면, 적정 과세 수준은 단순히

3) 미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활용한 Stantcheva(2021)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사회적 선호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세제로 인한 행태 변화와 능력 분포의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Piketty and Saez, 2013). 또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견해가 조세 제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소수의 납세자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선호의 의의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⁴⁾

상속·증여세 등 세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첨예한 분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세제에 대한 지식, 효율 비용과 재분배 효과, 공정성 인식, 적정 세부담 선호 등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1년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0%(전체 피상속인 중 평균 0.26%)가 전체 상속세의 75%를 납부하였다.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성훈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부교수



우리나라는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소득 불평등도 및 빈곤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OECD의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와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4.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1%보다 6.3%p 낮은 수준이고, 2021년 기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14.8%인데, OECD 회원국 평균 10.9%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낮은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높은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로 복지재정 증대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2)에서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22년 141.6조원, GDP 대비 6.5%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그 규모가 366.3조원, GDP 대비 11.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정부 차원에서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더라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은 자발적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기부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장려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문제 해결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지출이므로 세수입을 감소시킨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개인기부금 세액공제에 의한 조세지출은 2023년 귀속 기준 1.6조원으로, 세액감면 규모로는 매년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적지 않은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기부를 통한 민간의 공익활동 증가로 세수입 감소분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부금 세제지원으로 납세자의 기부행태가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의 변화로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변화하였을 때 기부참여 비율, 평균적인 기부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본다.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는 과거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던 것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 2014년 이후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인상된 사례가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공제받으므로 소득세율의 변화로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변화할 수 있는데, 2014년 이후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이 인상된 사례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변화와 소득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 인센티브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에서 과세표준의 조정을 통해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의 사업소득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계점 아래로 낮추려는 유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태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세수입 감소분보다 사회적 효용이나 사회복지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지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의 최소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기부참여 및 평균적인 기부금액 수준의 증가 여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최근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므로, 공제율 인상이 기부금액 또는 기부행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도 분석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볼 수 있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집단의 기부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는 납세자의 소득, 기부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포괄하므로 전체 납세자를 대표하는 대규모 표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는 파악할 수 없으며, 신고자료상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간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5~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10% 표본에 대한 소득세 신고자료와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표본은 소득, 연령, 성별, 기부유형별 기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층화하고 각층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구축했다. 반복 횡단면 표본과 패널 표본 두 가지 형태로 표본을 추출하는데, 패널 표본의 경우 2015년 횡단면 표본을 2022년까지 추적하는 형태의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며 각 분석의 목적에 따라 기초자료로 분석 표본을 구축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분석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변화가 납세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다. 2014년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세 차례 변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2018년과 2021년의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2018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은 2016~2020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수행하며, 이 기간에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고액기부 기준금액은 3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21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은 2018~2022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고액기부 기준금액은 1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5%p 상향 조정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 효과 분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 두 그룹에 대해 수행하며, 기부참여 여부,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의 변화가 기부금 규모, 기부유형(특례, 종교 외 일반, 종교 일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도 분석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소득세 신고 패널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던 납세자로 구성된 균형(balanced) 패널을 이용한다. 다만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기간 중 고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납세자는 표본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소득신고를 했지만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 즉 연말정산 신고자는 총급여액이 0,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총수입금액이 0인 경우 표본에서 제외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부참여 여부, 기부금액 등의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과 2021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를 외생적 변이로 간주하고, 이를 활용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이용한다.

$$C_{it} = \beta T_{it} \times P_{it} + \delta T_{it} + \gamma X_{it} + m_i + \pi_t + \varepsilon_{it}$$

여기서 i 는 개별 납세자, t 는 연도, C_{it} 는 기부참여 여부 또는 (기부금액+1)의 로그값 등의 종속변수, T 는 처치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P 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X 는 통제변수로 가처분소득의 로그값, 연령, 부양가족 수 등 주요 통제변수를 포함하며, m 은 개인고정효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특성을 통제한다. π 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연도별 더미변수이다. ε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이상의 회귀식에서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를 세액공제율 인상 전후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가 기부참여 여부이면 β 는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기부참여 비율이 몇 %p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며, 종속변수가 로그 기부금액이면 세액공제율 인상에 의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몇 % 증가했는지 나타낸다.

종속변수 중 하나인 기부금액은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를 활용하여 각 연도에 실제로 기부한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계산하여 구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기부금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부유형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른 종속변수인 기부참여 여부는 기부금액이 0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때 기부금액은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부유형별로 분석할 때 기부유형별 기부참여 여부는 기부유형별 기부금액이 0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다.

처치집단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집단, 통제집단은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을 초과하는 납세자를 처치집단,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 이하인 납세자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함께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을 초과하는 납세자를 처치집단,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 이하인 납세자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참여율(즉 납세자 수 대비 기부자 수의 비율)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부참여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018년 제도 변화는 전체 기부참여율을 약 0.67%p 증가시켰는데, 이는 제도 변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1.3%의 기부참여율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특정 기부금 구간의 공제율만 변화하였을 뿐인데 모든 기부금 구간에서 효과가 나타나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분석 결과를 2018년 제도 변화의 온전한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기부참여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기부참여율은 약 1.65%p 감소하였고, 이는 제도 변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3.1%의 기부참여율 감소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천

만원 초과 기부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나 100만원 초과 기부참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기부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기부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제도 변화로 1천만원 미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제도 변화는 1천만원 미만 기부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부유형별 분석 결과는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종교 외 일반기부 참여의 증가로 전체 기부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모든 기부유형에 대한 기부참여가 감소하여 전체 기부참여가 감소했음을 보여 주는데, 특례기부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소득수준별 분석 결과는 2018년, 2021년 제도 변화 모두 소득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기부참여가 증가하고, 소득 5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기부참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는 모두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 변화였다. 하지만 소득구간별 분석 결과는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로 고소득층의 기부참여가 오히려 감소함을 보여 준다. 이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금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약 1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교 외 일반기부가 다른 기부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소득구간별 분석에서는 1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납세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증가하고 고소득자라 할 수 있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인상된 경우로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구간별 분석 결과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기부금액이 오히려 약 16.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특례기부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소득구간별로는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은 증가하지만 5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에서의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변화의 효과와 기부참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균 기부금액 증가의 경우 새로운 기부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효과가, 평균 기부금액 감소의 경우 기존 기부참여자가 기부를 하지 않게 되면서 감소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효과가 나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변화 전후 기간 각각 한 해 이상 기부에 참여한 지속기부자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지속기부자에 대한 제도 변화의 효과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전체에 대한 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기부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평균적인 기부금액의 변화 정도는 기부 신규참여 인원 혹은 중단인원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시사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전반적인 기부참여율을 1.0%p(제도 변화 이전 대비 약 16.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증가에 기인했다. 그런데 앞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액기부의 증가로 전반적인 기부참여가 증가하는 결과는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가 제대로 식별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기부참여율을 약 2.0%p 증가시켜 기부참여율이 제도 변화 이전보다 약 29%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은 하였지만, 1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참여도 약 0.2%p 증가하여 제도 변화 전 대비 빠른 증가세(약 49% 증가)를 보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안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기부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 모두 종교 외 일반기부 참여의 증가가 전반적 기부참여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는 증가하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부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금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두 제도 변화 모두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액을 약 12.9%, 2021년 제도 변화는 약 28.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두 제도 변화로 인한 평균 기부금액의 증가가 종교 외 일반기부의 평균 금액이 증가한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 분석의 경우 2018년 제도 변화는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금액을 증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고소득 신고자의 기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제도 변화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이 서로 동일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새로운 기부참여자 증가에 따른 평균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의 영향이 상당 부분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기부자의 반응 정도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보다 작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변화의 효과도 신규 기부자의 증가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히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서만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세액 결정 과정에 따르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규모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결국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가 소득세율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변화하면 기부가격이 변화하고, 결국 기부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는 2014년 5개 과세표준 구간에 6~38%의 세율을 적용하던 형태에서, 8개 과세표준 구간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특히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구간에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의 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를 살펴본다. 해당 구간의 세율은 2017년 38%에서 40%,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패널 표본자료로, 불균형 패널자료이다. 불균형 패널인 이유는 소득세 신고자료의 특성상 일부 관측 대상의 경우 특정 연도의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이다. 따라서 분석 표본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석 표본에서 제외한다.

분석 방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부금액의 차이를 소득세율 인상 전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이중차분분석법을 이용한다.

$$\log d_{it} = \alpha + \beta Treat_i \times Post_t + X_{it}\gamma + m_i + T_t + \varepsilon_{it}$$

여기서 i 는 개별 납세자, t 는 연도, $\log d$ 는 (기부금액+1)의 로그변수, $Treat$ 는 처치집단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Post$ 는 2017년 이후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X 는 가처분소득의 로그변수,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로그변수, 필요경비금액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T 는 연도별 더미변수, m 은 관측되지 않은 개인 특성을 반영한 변수, ε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상의 식에서 본 연구의 관심모수는 β 로,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처치효과가 있었다면 β 는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2017년 이후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와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로 구분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과세표준 수준이 높은 고소득 사업소득자라 할 수 있으며, 추정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효과는 고소득 사업소득자에 대한 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권성오·권성준(2020)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도 추정한다. 기부가격 탄력성은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2SLS(two stage least squares)로 추정한다.

$$\log d_{it} = \alpha + \beta \log(1 - \tau_{it}) + X_{it}\gamma + T_t + m_i + \varepsilon_{it}$$

여기서 i 는 개별 납세자, t 는 연도, $\log d$ 는 (기부금액+1)의 로그변수, τ 는 법정한계세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X 는 가처분소득의 로그변수,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로그변수, 필요경비금액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 벡터를 의미하고, T 는 연도별 터미변수, m 은 관측되지 않은 개인특성을 반영한 변수, ε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상의 식에서 β 가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기부가격에 대한 도구변수는 2017년과 2018년 소득세율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과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터미변수 간의 교차항을 사용한다.

한편 소득의 과소신고, 비용의 과다계상 등 조세회피가 용이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 보고자 본 연구는 분석 표본을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업종과 높은 업종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과소신고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의 과소신고, 비용의 과다계상 등 조세회피가 용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표본을 구분하였다. 과소신고비율에 따른 업종은 안중석·김빛마로(2019)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과소신고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종을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업종, 나머지 업종을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금액의 변화를 과세표준 5억~10억원 구간의 고소득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으로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액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으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약 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다른 주요 설명변수의 계수에 대한 추정 결과는 가처분소득이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성과, 기부금을 제외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소득세율 인상은 기부가격을 낮춤으로써 기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기부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기부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율 인상의 두 가지 상충하는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요경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은 필요경비 규모가 클수록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기부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필요경비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기부할 여력이 있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는 사업소득자일수록 기부를 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세신고비율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상과 달리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만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현상은 해당 집단이 세부담 경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수준이 높아서 세부담 경감 수단인 기부금 세제혜택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다르게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가 기부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 용이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기부 의사결정에 경제적 요건이 세제지원 제도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에는 전년도 과세대상소득과 당해의 기부금액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 결과도 있었다.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사업소득자가 기부 시점을 소득세율 인상 전으로 앞당겨 소득세율 인상 후 기부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율 인상에 의한 기부 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득세율 인상 결과,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효과와 함께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 감소 효과가 서로 상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된 결과, 기본적으로 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이중차분 결과와 유사하다. 전체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은 이론적 예측과 달리 양(+)의 값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부유형별 분석에서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은 1.410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기부가격의 1% 감소가 종교 일반기부금액의 약 1.4%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과소신고비율 집단별 분석에서는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만 기부가격 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 집단의 기부가격 탄력성은 1.431로 탄력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기부가격이 1% 하락한 경우, 기부금액이 1.4%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업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세율의 변화는 세율체계를 개편하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의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변화하면서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율이 바뀌는 과세표준 구간의 경계점에서 나타난다. 즉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경계점 아랫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거나 경계점 윗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표준 경계점 윗 구간의 사업소득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조정할 유인이 있는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과세표준을 경계점 아랫 구간으로 조정하려는 유인도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 바로 아래의 기부한 인원 비율이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경계점 바로 위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을 기준으로 기부인원 비율, 평균 기부금액 등의 분포를 아랫 구간과 윗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분석은 2015~2022년 종합소득세 횡단면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분석 표본에는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만을 포함한다. 경비율 신고자, 비사업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0인 사업자 등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거나 유인이 없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의 기부인원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과세표준 1.5억원 근방에서만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고, 모든 기부 유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표준 1.5억원 근방 사업소득자가 기부참여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에서의 세율 변화에 대응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과세표준이 1.5억원보다 조금 크면 적용받는 소득세 한계세율은 38%이고, 1.5억원보다 조금 작으면 적용받는 소득세 한계세율은 35%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5억원 근방인 납세자는 기부참여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1.5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행태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부비율이 0.01~0.02% 수준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3억원, 5억원, 10억원 경계점은 각각 2018년, 2017년, 2021년에 도입되어 경계점 도입 전후 경계점 기부인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경계점 도입에 사업소득자들이 반응을 한다면 경계점 도입 이후에만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

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과세표준 3억원, 5억원, 10억원 경계점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근방의 기부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기부인원이 적어 유의미한 변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과세표준 2.8억원에서 3.1억원 구간의 기부인원이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이전보다 많아진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부한 사업소득자가 경계점 부근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결과일 수 있다.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의 평균 기부금액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모든 경계점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을 보여 주지 못했다. 앞서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의 기부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근방에서는 경계점 아랫 구간 기부비율이 경계점 윗 구간 기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기부금액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부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과세표준 경계점에서 세율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가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보다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변화와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바뀌었을 때 납세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납세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연구의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특정 고액기부금 구간의 공제율을 조정하는 제도 변화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고액기부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 이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의 증가에 목적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2018년 제도 변화로 고액기부 참여가 증가하거나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기부참여 또는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한 것과 같은 제도 변화는 기부참여 및 기부금액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민간의 공익활동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 외 일반기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제도 변화 효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액공제율의 전반적 인상의 효과가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기부를 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부금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한, 기부금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조세지출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 오히려 세제혜택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각종 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다양한 공제제도 등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이는 실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문화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 비율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 과세표준 1.5억 원 경계점 부근 사업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기부 인센티브 또는 가격이 변화하였을 때 기부행태가 변화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부 인센티브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집단 또는 계층을 타깃하여 해당 집단 또는 계층의 기부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저소득구간의 과세표준 경계점에서 기부행태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고,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또는 필요경비가 클수록 기부금액 수준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소득수준이 낮거나 수입 대비 비용이 클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소득자의 기부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부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기부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적 관점 그리고 민간 공익활동의 증대 측면에서 특례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교 일반기부는 대체로 신앙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경제적 유인 없이 신앙적 동기만으로도 기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교 일반기부의 이러한 특성은 기부가격 하락에 의한 세제혜택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대체로 기부 인센티브 변화가 종교 일반기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종교 일반기부가 세제혜택보다 신앙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액공제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소득세율의 변화를 통해 기부 인센티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부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와 함께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서로 상충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충효과는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율이 낮은 원인이면서 기부 인센티브 변화의 효과가 특정 집단 혹은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세제혜택의 확대에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도 변화를 통한 기부유도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기부 인센티브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방식의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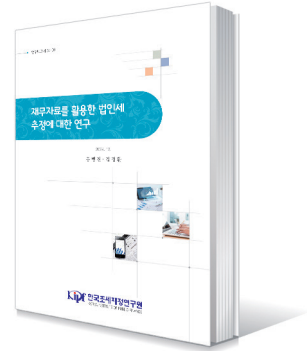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소액기부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021~2022년에는 한시적이지만 소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액기부 참여의 증가가 이러한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부참여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에는 새로운 기부참여자 증가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소액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참여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하며, 향후 더 엄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 중 하나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한계이다. 서두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으나,

이 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한계점들도 존재한다. 간단히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소득세 신고자료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가 없어 기부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신고자료상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세제적격 기부금에 한정하여 분석하여 모든 기부행태를 완전 반영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중차분분석, 기부가격 탄력성 추정 등에도 여러 한계점이 있다.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이 동질적이지 못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부분에서는 통제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중차분분석의 가정인 평행추세를 엄밀하게 검증하기 어려웠던 점도 주요 한계점이다. 그리고 기부금액은 0보다 큰 값을 가져서 0에 많이 분포하는 특성을 반영한 토빗 모형(Tobit Model)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 추정에 대한 연구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법인세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 관련 정책에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법인세는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데, 이는 법인세 부담 수준이 기업의 고용, 투자, 연구개발과 같은 재화 생산 활동의 규모와 시점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업 의사결정 과정은 기업이 위치를 선정하거나 특정 지역·산업에 진출할 때 고려 요소가 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금융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 법인세는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법인세 부담이 높아지면 배당 가능 이익이 감소하여 주식의 현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들은 이 같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체계적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가 운영 측면에서 법인세는 대부분의 국가

에서 주요한 재정 수입원 중 하나로, 정부의 예산 계획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을 설계할 때는 미래 재정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세목이기 때문에 재정 예측과 운영이 더욱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청이 수집·구축하고 있는 재무 정보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 단위에서의 정확한 미시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된 법인세 부담치를 활용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지만, 이 추정치가 실제 법인세 실측치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법인세 부담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정책 수립과 방향성 설계에 핵심적인 근거자료가 되지만, 재무자료에서 산출한 추정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실질적인

법인세 효과인지 아니면 측정오차로 인한 오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송호신·전봉걸(2011)의 연구가 유일하며 여러 한계를 지닌다. 스웨덴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법인과 법인 소유자에 대한 건강, 가족 구성, 교육수준, 자산, 소득 등 세부적인 사회·경제적 정보와 과세정보를 자유롭게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전면 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측치와 추정치의 비교 분석을 미국 국세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법인세 추정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개별 기업이 식별되지 않으면서 과세자료의 특성이 동일한 Synthetic Data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송호신·전봉걸(2011)의 연구가 사실상 유일하나, 이 연구 역시 법인세 추정 방법 두 가지 방식만 비교했으며, 그마저도 한정된 기간의 상장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송호신·전봉걸(2011)의 연구를 확장하여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최근까지 제안된 기업 수준 법인세 추정 방법들의 정확도를 최초로 비교한 것으로, 그 기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한 폭넓은 표본에서 여러 법인세 추정 방법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실측치와 추정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Kolmogorov-Smirnov 분포분석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치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였다. 나아가 실측치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추정치가 정책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국내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추정 방법과 함께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추정 방법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법인세 추정치를 산출한 뒤,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실측치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TS2000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금융업종을 제외한 상장기업과 외감 기업을 모두 포함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결손금 이월공제 등을 반영하는 추정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TS2000 자료의 시작 시점인 1980년부터 자료를 축적하여 법인세를 추정하였다. 이후 국세청이 제공하는 법인세 과세자료와 병합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국세청의 법인세 미시자료가 2015년 이후분부터만 이용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부터 병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비교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법인세 추정치와 실측치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 평균, 중간값, 상관관계수, MSE (mean squared error), Kolmogorov-Smirnov 통계량 등을 기준으로 전체 수준 및 연도·산업별 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추정치가 실제 법인세와 가장 유사한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법인세 실측치가 다른 변수와 맺는 관계를 법인세 추정치에서도 재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법인세와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송헌재·전병힐·소준영(2023)의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국세청 병합 자료 내에서 분석에 필요한 모든 변수를 구할 수 있고, 표본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최신 연구라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법인세 추정치는 총 17가지 방법을 통해 산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직접법은 재무 정보 중 ‘법인세비용’ 항목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추정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간접법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항목에서 「법인세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직접법에 속하는 Tax1,

Tax2, 그리고 간접법에 속하는 Tax4와 같은 추정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다.


법인세 실측치와의 직접 비교 결과,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직접 추정 방법들이 높은 유사도를 보였는데,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법인세비용(Tax1)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나타냈다. 또한 송호신·전봉걸(2011)에서 제시한 방법(Tax2)과 본 연구에서 중단사업손익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한 직접법(Tax3) 역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연도별 또는 산업별로 살펴보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송헌재 외(2023)의 회귀분석 모형에 실측치와 추정치들을 각각 법인세 부담 변수로 대입하여 재현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러 간접법 가운데

표 법인세 추정 요약

추정 법인세	제시 방법	분류	기본 고려항목	추가 고려항목	
$\widehat{Tax1}_{it}$		직접법	법인세비용	-	
$\widehat{Tax2}_{it}$				이연법인세	
$\widehat{Tax3}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widehat{Tax4}_{it}$		간접법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widehat{Tax5}_{it}$				이연법인세	
$\widehat{Tax6}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widehat{Tax7}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투자·연구 세액공제	
$\widehat{Tax8}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전체 세액공제 비율	
$\widehat{Tax9}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투자·연구 세액공제, 최저한세	
$\widehat{Tax10}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전체 세액공제 비율, 최저한세	
$\widehat{Tax11}_{it}$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결손금 공제	-
$\widehat{Tax12}_{it}$					이연법인세
$\widehat{Tax13}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widehat{Tax14}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투자·연구 세액공제
$\widehat{Tax15}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전체 세액공제 비율
$\widehat{Tax16}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투자·연구 세액공제, 최저한세
$\widehat{Tax17}_{it}$	V				이연법인세, 중단사업손익, 전체 세액공제 비율, 최저한세

출처 | 저자 작성

Tax13이 실측치와 가장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Tax1, Tax2, Tax4 등은 실측치로 추정된 계수와 비교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이들 선행연구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시적 관점에서 법인세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투자자·정책 설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경쟁 기업 및 산업의 법인세 부담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모색할 수 있고, 투자자는 이를 통해 기업 가치평가의 정확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 설계자 입장에서는 특정 산업·기업군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시 법인세 부담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자원배분을 보다 적절히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대기업·중견기업과 거래 상대 기업 간 법인세 부담의 변동성을 정확히 추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연구자들이 추계 오차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된 추산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법인세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회귀분석 계수들은 실측치의 회귀분석 계수와 비교하였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고 측정오차로 인해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책 설계가 이러한 과거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ipf

동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미국

내부고발자 사무국 운영 계획 발표

- ◆ 미국 국세청의 내부고발자 사무국(IRS Whistleblower Office)은 2025년 4월 18일,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최초의 다년간 운영계획(Multi-Year Operating Plan)을 발표함¹⁾
-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세법 또는 국세청이 관리, 집행, 조사하는 기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처리함
- 운영계획은 향후 3년간(2025~2027) 추진될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담고 있고 각 전략은 총 38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구성되어 있음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구 제출(claim submission) 절차 개선
 - 높은 가치를 가진 내부고발자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지급
 - 내부고발자 대상 청구 현황 및 국세청의 청구 결정 근거 정보 제공
 - 내부고발자 및 납세자 정보의 보호
 -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수단(tool), 기술, 교육 및 기타 자원의 지원
-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은 정보는 세법 위반 방지(deterrence) 및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07년 내부고발자 사무국 설립 이래 내부고발자의 정보로 징수된 금액은 70억달러 이상, 지급된 보상은 13억달러 이상임²⁾
 - 2024년도에는 총 4억 7,470만달러를 징수했으며, 그중 1억 2,350만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사무국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포상금이었음

1) IRS, "IRS Whistleblower Office releases operating plan outlining integrated approach to advance program," 2025. 4. 18., <https://www.irs.gov/newsroom/irs-whistleblower-office-releases-operating-plan-outlining-integrated-approach-to-advance-program>, 검색일자: 2025. 4. 23.

2)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징수 금액의 15~30% 사이임



영국

2025년 봄 예산안 발표

- ◆ 영국은 2025년 3월 26일, 2025년도 봄 예산안(Spring Statement 2025)을 발표함³⁾⁴⁾
 - 본 예산안에는 증세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총세수를 75억파운드⁵⁾까지 늘리기 위한 조세회피 방지 및 조세확실성 증대 방안이 언급됨
 - 금번 예산안에서는 주요한 세금 변화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주요 세금 변경 사항은 2025년 가을 예산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⁶⁾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회피 조력자(promoters of tax avoidance)에 대한 신규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함
 - 여기에는 국세청의 추가 권한 및 제재, 조세회피 계획 공개(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DOTAS) 제도의 범위 확대, 보편적 중지 통지 및 조력자 조치 통지 도입 등이 포함되며, 관련 의견수렴은 2025년 6월 18일 마감됨⁷⁾
 - 조세확실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승인(advance clearance), 원가분담약정(Cost Contribution Agreements, CCA)에 대한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제공 등을 제안함
 -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오류 및 사기 등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025년 5월 26일까지 진행함⁸⁾
 - 그룹내 자산 개발을 위한 약정인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APA 승인을 제공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실무 지침은 추후 발표 예정임
 - 주요 세금 변화는 2025년 가을 예산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금 정책이 공개될 것임

3) IBFD, "United Kingdom - UK Spring Statement 2025: No Tax Increases, but Welfare Cuts Announced, Growth Projection Slashed," 2025. 3.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26_uk_1.html, 검색일자: 2025. 4. 10.

4) GOV.UK., "Speech - Spring Statement 2025 speech," 2025. 3. 26.,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spring-statement-2025-speech>, 검색일자: 2025. 4. 10.

5) 2025년 4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조 311억원임

6) EY, "UK Spring Statement defers major tax announcements to Budget in Autumn 2025," 2025. 3. 26., <https://globaltaxnews.ey.com/news/2025-0761-uk-spring-statement-defers-major-tax-announcements-to-budget-in-autumn-2025>, 검색일자: 2025. 4. 10.

7) GOV.UK., "Open consultation - Closing in on promoters of marketed tax avoidance," 2025. 3. 26.,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losing-in-on-promoters-of-tax-avoidance/closing-in-on-promoters-of-marketed-tax-avoidance#the-consultation-process>, 검색일자: 2025. 4. 10.

8) GOV.UK., "Open consultation -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 advance clearances," 2025. 3. 26.,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advance-clearances>, 검색일자: 2025. 4. 10.

에너지 이익 부담금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 ◆ 영국은 2025년 3월 5일, 2030년 종료 예정인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 EPL)의 대체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⁹⁾ ¹⁰⁾
- EPL은 석유 및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windfall profits)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도입되었음된 바 있음
- EPL 대체 방안은 향후 석유 및 가스 가격 급등에 대한 예측가능한 대응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됨
 - 첫째, 기준가격(threshold)을 초과하는 총매출(gross revenu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매출

기반 모델(Revenue-based model)’로, 기업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석유 및 가스에 대해 받는 초과 이익과 연계된 모델임

- 둘째, 폐기(decommissioning) 또는 금융비용에 대한 감면 없이 EPL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익(profits)을 계산하는 ‘이익 기반 모델(Profit-based model)’로, 평균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해당 높은 가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함
- 두 방안 모두에서 석유 및 가스 가격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 별도의 석유 및 가스 기준가격이 도입될 수 있으나, 본 문건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음



벨기에

OECD 기준 부합 내국 최저추가세액 신고서 초안 발표

- ◆ 벨기에 연방재무부는 2025년 4월 11일, 내국 최저추가세액(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 신고서 초안을 발표함¹¹⁾
- 이 초안은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모델 신고서(GIR-template)와의 정합성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DMTT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포함함

9) IBFD, "United Kingdom - UK Consults on Replacement for Energy Profits Levy," 2025. 3.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10_uk_1.html, 검색일자: 2025. 3. 31.

10) GOV.UK., "Open consultation - Oil and gas price mechanism consultation," 2025. 3. 5.,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il-and-gas-price-mechanism-consultation>, 검색일자: 2025. 4. 1.

11) IBFD, "Tax Administration Publishes Draft Template of Domestic Minimum Top-Up Tax Return to Align with OECD," 2025. 4.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11_be_1.html, 검색일자: 2025. 4. 15.

- (신고서 구성) 신고서는 과세 대상 벨기에 기업 및 다국적 기업 그룹 식별, 그룹 구조, 세이프 하버 조치 및 선택사항(Elections), DMTT 산정, 예납 내역, 최종 납부세액, 연락 담당자 및 서명란으로 구성됨
- (신고 마감일) 최초 신고 마감일은 2025년 11월 30일로, 이는 2024 과세연도에 대한 글로벌 정보 신고서(GIR)의 마감일보다 7개월,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일보다 1개월 앞섬
- (신고 요건) DMTT 신고는 그룹이 벨기에에서 필라 2 및 GloBE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독일

재무부, 거래 매트릭스 관련 팩트 시트 발표

- ◆ 독일 재무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거래 매트릭스(Transaction Matrix)에 대한 팩트 시트(fact sheet)를 발표함¹²⁾
- 2024년 10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제4차 행정-경제-국민 부담 완화법(Bureaucracy Reduction Act)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확대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매트릭스' 제출이 의무화됨
- (참고) 거래 매트릭스란 다국적 기업과 관련자 간 국제 거래 내용과 국제 거래 개요를 구조화된 표로 정리한 문서로, 세무조사 시 위험 기반 선정 및 감사 영역 식별에 활용됨
- 거래 매트릭스에 기재해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거래의 내용과 유형(예: 상품 인도, 지속적 관여 등)
 - 거래 당사자(서비스 수신자 및 제공자 식별)
 - 거래 금액 및 대가(예: 대출 금액과 이자,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
 - 계약 근거(계약 문서 명칭)
 - 적용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예: 원가 가산법,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등)
 - 관련 세법 관할권(세금이 부과되는 국가 등)
 - 거래가 해당 관할권에서 일반 과세 대상 여부(예: 특허박스 제도 등 특혜 세제의 적용 여부)
 - 미제출 시 과태료: 5,000유로¹³⁾ 부과
- 이는 독일 일반세법(GAO) 제90조 3항에 따른 문서화 의무의 일환임

12) IBFD, "MoF Issues Fact Sheet on Transaction Matrix," 2025. 4.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07_de_1.html, 검색일자: 2025. 4. 9.

13) 2025년 4월 18일 원화 환산 시 기준 약 808만원



이탈리아

소규모 기업 대상 부가가치세(VAT) 특별 제도 관련 분기별 보고서 양식 승인

-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EU 회원국에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특별 제도를 적용받는 자격을 갖춘 이탈리아 소재 납세자가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공식 보고서 양식(model form)을 승인함¹⁴⁾
-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 12월 3일자 관보에서 「소규모 기업 부가가치세 제도 지침」 및 「부가가치세 세율 지침」을, 2025년 1월 7일에는 개정된 소규모 기업 VAT 제도에 대한 시행규칙을 각각 발표함
- 자격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각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이탈리아어로 된 해당 양식을 전자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분기에 이탈리아 및 기타 EU 회원국에서 수행한 재화 및 용역 공급의 총액(유회 기준)을 명시해야 함
- 만약 납세자가 기타 EU 회원국 전체에서 연간 매출 100,000유로¹⁵⁾의 한도를 초과한 때도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이는 2025년 3월 28일 발표된 프로토콜 번호 155649/2025을 근거로 함



스페인

‘2025년 세금 및 세관 통제 계획’ 발표

- ◆ 스페인 재무부(MoF)는 2025년 3월 17일, ‘2025년 세금 및 세관 통제 계획(Annual Plan for Tax and Customs Control for 2025)’에 대한 일반 지침을 발표함¹⁶⁾
- 재무부는 본 통제 계획에서, 납세자의 납세의무 준수를 유인하기 위해 5가지 측면에서 과세관청(AEAT)이 수행할 주요 조치를 제시함
-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전화예약 시스템, 가상 인구조사 도우미(Virtual Census Assistant), Renta DIRECTA¹⁷⁾ 등

14) IBFD, "Tax Authorities Approve Model Form for Quarterly Communication of VAT Scheme for Small Enterprises," 2025. 3.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31_it_3.html, 검색일자: 2025. 4. 9.

15) 2025년 4월 18일 원화 환산 시 기준 1억 7,168만원

16) IBFD, "MoF Approves Guidelines on Annual Plan for Tax, Customs Control for 2025," 2025. 3.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18_es_1.html, 검색일자: 2025. 4. 9.

17) 일부 납세자는 Renta DIRECTA를 통해 수정 없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 (납세의무 미준수 예방) 주요 세목별 납세현황에 대한 자체 평가 시스템 도입, 소득세(법인 및 개인) 과세자료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연계, 위험 분석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 (세금사기 조사 및 검증) 납세자의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 간 불일치 모니터링, 법인의 실질 운영 여부를 파악하여 유령회사(shell companies) 적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정례화 등
- (징수) 행동유형 기반 체납자 선별 애플리케이션 개발, 은행 계좌의 자금 압류 절차 개선, 국가 차원의 파산 대응팀 구성 등
- (자치지방정부와 협력) 과세 데이터 공유, 공동 조사 및 대응, 자산 거래 추적 등



포르투갈

조세피난처 내 보유한 해외자산 보고 의무화

- ◆ 포르투갈 정부는 2025년 3월 6일,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소득세 신고 시 조세피난처(Tax Havens) 내 보유한 특정 해외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¹⁸⁾
- (보고대상 해외자산) 조세피난처 내에 있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주식 등
- 부동산 소유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자동차·보트·항공기, 현금·유가증권 등, 주식·지분·자본, 집합투자기구(CIUs) 등에서 발행된 증권, 주주대여금, 보험 또는 연금계약, 지분참여 형태로 보유한 자산 또는 증권 등
- 조세피난처 내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와 해외자산이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법인 또는 지점과 관련된 경우, 동 자산 내역을 개인소득세 신고 시 보고해야 함
-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므로, 자동세무신고(automatic tax return process) 서비스¹⁹⁾를 통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라 할지라도 해외자산을 신고해야 함

18) IBFD, "Government Mandates Reporting Foreign Assets in Tax Havens in PIT Return," 2025. 3.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10_pt_1.html, 검색일자: 2025. 4. 9.

19) 포르투갈 세무당국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서비스



스웨덴

대규모 그룹 내 기업 관련 추가 세법 개정안 발표

- ◆ 스웨덴 재무부는 2025년 3월 20일, 대규모 그룹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세법 개정안을 담은 각서 No. Fi2025/00675를 발표함²⁰⁾
 - 해당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
 - (외국세액공제 분배 정보 제공) 기업은 외국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된 세액의 분배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연법인세자산 계산 명확화) 불인정 이연법인세 자산과 특별 이연법인세자산의 계산 규정이 지점, 고정사업장, 혼성기업, 역혼성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모기업이나 주요 기업에도 적용됨
 - (보고 주체의 선택권 부여) 보고 대상 기업은 다른 그룹에 할당된 이연법인세를 조정된 법인세비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짐
 - (소수지분 소유자의 영향 반영) 소수지분 보유자의 직접 보유 지분뿐 아니라 다른 주주 과세 기업을 통해 간접 보유한 지분도 고려하여, 주주 과세 기업의 보고 이익을 조정함
 - 법안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20) Bloomberg Tax, "Sweden MOF Issues Memorandum on Additional Tax Act Amendment Proposal Regarding Companies in Large Groups," 2025. 3. 2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28N28EO000000?bc=W1siU2VhcmNoIC YgQnJvd3NIivviaHR0cHM6Ly93d3cuYmxb21iZk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ZdWx0cy9jMzlyY2NlMTY5NzliYT40 Tk4MjMxM2U5NmVjODUzNiJdXQ--6a6218f0919317a6642f02db9030c7a45a76f7f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c322cce16979ba689982313e96ec8536, 검색일자: 2025. 3. 27.



덴마크

OECD 최저한세 이행 및 이전가격 간소화 개정안 발의

- ◆ 덴마크 세무장관은 2025년 4월 9일, OECD 최저한세 지침에 부합하고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 법안(L 194호)을 의회에 제출함²¹⁾
- 본 법안은 OECD 필라 2 행정지침(2024년 6월 및 2025년 1월)을 반영하고, 최저한세법 및 법인세법 내 국제통합과세 규정을 정비하여 이중과세 등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OECD 지침 반영) 필라 2에 대한 OECD 행정지침을 이행하고, 최저한세법과 법인세법상의 국제통합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이전가격 간소화) 2024년 2월 발표된 OECD “Amount B 보고서”에 따라 일정한 유통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고, 일부 국가 소재 특수관계 유통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일반 정상가격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함
 - (제한세 적용 확대) 부동산 관련 소득에 제한세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제한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와 관련한 원천징수 의무를 강화함
 - (TP 문서화 예외) 중소기업(SME)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하²²⁾의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서는 TP 문서화 의무를 면제하고, 배당·출자 등 현금성 거래와 조세투명기업을 통한 일부 투자에도 문서화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투명기업 분류 규정 보완)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2C조²³⁾를 개정하고, 투명기업을 활용한 국가 간 분류 차이(하이브리드 불일치)를 통한 소득 비과세 문제에 대응함
 - (EU 조세회피처 목록 반영) EU 블랙리스트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방어적 조치 대상국 목록을 수정함
-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최저한세법 관련 개정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21) IBFD, “Tax Minister Proposes Reforms to Align With OECD’s Minimum Tax Guidelines, Simplify TP Documentation,” 2025. 4.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10_dk_3.html, 검색일자: 2025. 4. 15.

22) 총 특수관계 거래액이 연간 500만 DKK 미만이고, 연말 기준 총 미수·미지급금이 5,000만 DKK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23) 법인세법 제2C조는 국가 간 법인 분류 차이를 약용하여 투명기업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의 소득이 이중 비과세되는 문제(소위 ‘하이브리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기업 형태의 오남용을 차단하려는 목적임



일본

상속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규정 적용기한 연장

- ◆ 일본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2025년 3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면제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²⁴⁾
- 상속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개인이 등기하기 전 사망한 경우
- 상속²⁵⁾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개인이 그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기 전 사망한 경우, 2025년 3월 31일까지 사망한 개인을 토지 소유권자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함²⁶⁾
- 소액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 개인이 100만엔²⁷⁾ 이하의 토지에 대해 2025년 3월 31일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함²⁸⁾



인도

6% 균등화 부담금 제도 철회 추진

- ◆ 인도 정부는 2025년 3월 25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도의 6% 균등화 부담금 제도를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재정법안²⁹⁾을 승인함³⁰⁾
- 균등화 부담금 제도는 2016년 6월부터 비거주 사업체 등이 인도 내에서 온라인 광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3월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거주 전자 상거래 사업체에 대해서도 2% 균등화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확대됨
- 인도 정부의 균등화 부담금 제도 철회 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³¹⁾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24) 일본 국세청, 「相続による土地の所有権の移転登記等に対する登録免許税の免税措置について」,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onota/0018003-081-01.pdf>, 검색일자: 2025. 4. 7.

25) 상속인에 대한 유증 포함

26)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84조의 2의 3 제1항

27)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03만원임

28)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84조의 2의 3 제2항

29) 인도 재무부, 「THE FINANCE BILL, 2025」, https://www.indiabudget.gov.in/doc/Finance_Bill.pdf, 검색일자: 2025. 4. 7.

30) Tax Note, 「India Aims to Abolish 6 Percent Equalization Levy」, Stephanie Soong,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digital-economy/india-aims-abolish-6-percent-equalization-levy/2025/03/31/7rt6m>, 2025. 3. 31., 검색일자: 2025. 4. 7.

31)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1월 균등화 부담금 제도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보복 관세 부과를 고려하였으나, 다자간 글로벌 세계 협정을 타결할 수 있도록 보복 관세 부과를 보류해 왔음



호주

재정부, 2025-2026 예산안 발표

- ◆ 호주 재 정부는 2025년 3월 25일, 2025 회계연도 (2025년 7월~2026년 6월) 예산안(Budget 2025-26: Building Australia's Future)을 발표함³²⁾
- 호주 정부의 2025-2026년도 예상 수입(revenue)과 지출(expense) 규모는 각각 약 7,503억 호주달러(이하 AUD)³³⁾와 7,857억 AUD³⁴⁾임
 - 정부 수입 중 세목별 비중은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3,578억 AUD,³⁵⁾ 기업 및 자원임대세(Company and resources rent taxes) 1,455억 AUD,³⁶⁾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993억 AUD³⁷⁾ 순이었음
 - 지출 분야에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Social security and welfare) 2,910억 AUD,³⁸⁾ 기타 목적(Other purposes) 1,497억 AUD,³⁹⁾ 보건/의료(Health) 1,248억 AUD⁴⁰⁾ 순으로 비중이 컸음
- 조세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세율 인하, 세계 혜택 그리고 환급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2026년 7월 1일부터 18,201⁴¹⁾~45,000⁴²⁾ AUD 사이의 과세대상 소득구간의 세율을 16%에서 15%로 인하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세율을 추가로 14%까지 인하할 예정임
 - 수소 및 핵심광물 생산(hydrogen and critical minerals production)에 대한 약 137억 AUD⁴³⁾ 규모의 세계 혜택(Tax incentive)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음
 - 모든 가구와 약 100만개의 중소기업(small businesses)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에너지 요금 감면(energy bill relief)을 연장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50억 AUD⁴⁴⁾의 요금 감면에 더해 약 18억 AUD⁴⁵⁾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임⁴⁶⁾

32) Department of Finance, "Budget 2025-2026: Building Australia's future," 2025. 3. 25., <https://budget.gov.au/content/overview/index.htm>, 검색일자: 2025. 4. 7.

33)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2조 5,974억원임

34)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3조 6,473억원임

35)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5조 8,749억원임

36)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8조 4,677억원임

37)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조 6,689억원임

38)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조 9,937억원임

39)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2조 1,656억원임

40)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조 1,821억원임

41)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06만원임

42)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72만원임

43)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조 976억원임

44)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4,152억원임

45)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5,894억원임

46) Department of Finance, "Cost of living : Helping with the cost of living," <https://budget.gov.au/content/01-cost-of-living.htm#m1>, 검색일자: 2025. 4. 7.



뉴질랜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세법 통과

- ◆ 뉴질랜드 국회는 2025년 3월 25일, 「2024-25년 비상대응 및 구제조치에 대한 세법」(The Taxation (Annual Rates 24-25, Emergency Response, and Remedial Measures) Bill)을 통과시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47) 48)}
 - 2018년 이후의 물가 반영 및 스타트업의 인재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직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s, ESS)⁴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함
 - 직원에게 연간 제공 가능한 주식 총액이 기존 5,000뉴질랜드달러(이하 NZD)⁵⁰⁾에서 7,500 NZD⁵¹⁾로, 제공되는 주식의 시장가치 대비 할인(discount) 허용 한도는 2,000 NZD⁵²⁾에서 3,000 NZD⁵³⁾로 각각 상향되었음
 - 해당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주식부터 적용될 예정임
 - 홍수·지진 등의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제공해왔던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국회를 통한 기존 법률 개정 없이,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의 행정명령(Order in Council)⁵⁴⁾으로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개정함
 - 기존의 1학년 등록금 면제 제도(first-year fees free scheme)를 졸업학년 등록금 면제 제도(final-year fees free scheme)로 대체하였음
 - 취약계층(disadvantaged)을 중심으로 한 학습자(learners)의 학업 과정 완수를 장려하고, 졸업자에 대한 보상 및 학습 전체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임
 -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1994) 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Commissioner)이 제도를 관리하고 자격 요건을 인터넷상에 공개할 의무가 부여되었음
 - 2025년 1월 1일 이후 학업(study) 또는 훈련(training)을 시작하는 학습자에 해당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12,000 NZD⁵⁵⁾까지 적용됨⁵⁶⁾

47) New Zealand Government, "Tax legislation passed to support growth," <https://www.beehive.govt.nz/release/tax-legislation-passed-support-growth>, 검색일자: 2025. 2. 28.

48) New Zealand legislation, "Taxation (Annual Rates for 2024-25, Emergency Response, and Remedial Measures) Bill," <https://www.legislation.govt.nz/bill/government/2024/0073/11.0/versions.aspx>, 검색일자: 2025. 4. 9.

49) 기업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는 제도

50)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0만원임

51)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6만원임

52)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4만원임

53)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6만원임

54) 국회법(Acts of Parliament)을 제외한 뉴질랜드 정부가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결정을 집행하는데 사용하는 법적 행위임

55)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5만원임

56)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Entitlement - final-year Fees Free," <https://www.legislation.govt.nz/bill/government/2024/0073/11.0/versions.aspx>, 검색일자: 2025. 4. 9.



OECD

필라 1 Amount B 관련 통합 보고서 발행

- ◆ OECD는 2025년 2월 24일, 필라 1 Amount B 이전 가격 보고서와 관련 주제에 대해 2024년 발표된 자료를 포괄하는 통합보고서를 발행함⁵⁷⁾
- 해당 보고서는 2024년 2월에 발행된 Amount B 이전가격 보고서⁵⁸⁾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2024년 6월 발표된 추가 지침⁵⁹⁾과 2024년 9월 발표된 모델 CAA⁶⁰⁾(Competent Authority Agreement)를 포함하며, 2024년 12월 발표한 Amount B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와 수익 계산 자동화 도구⁶¹⁾는 포함하지 않음
- Amount B는 지역량 관할국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원칙 적용을 위한 간소화되고 효율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임
- 본 통합 보고서는 기존 발간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참조하기 용이하도록 단일 문서로 정리한 것임

57) Taxnotes, "OECD Issues Consolidated Amount B Transfer Pricing Report," 2025. 3. 3.,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transfer-pricing/oecd-issues-consolidated-amount-b-transfer-pricing-report/2025/03/03/7r9q5>, 검색일자 : 2025. 3. 27.

58) 2024년 2월 발행된 기존 Amount B 보고서는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접근법에 관한 내용으로 각 관할국은 적격 기준 유통업체에 대한 Amount B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59) 2024년 6월 추가 지침은 관할국에 관한 정의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Amount B의 포괄적 이행 체계에서 정치적 공약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대상 관할국의 정의를 포함함

60) 2024년 9월 발표된 모델 CAA는 양자 간 조세조약이 체결된 관할국의 Amount B 이행에 도움을 주며, 포용적인 틀을 가진 국가들은 모델 CAA를 관할국이 아닌 경우로 범위 확장이 가능하여 잠재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거나 국내법 및 행정관행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

61) 2024년 12월 기업 및 과세당국이 Amount B를 구현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Amount B의 메커니즘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요를 제공하고, 데이터 입력을 기반으로 Amount B의 수익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자동화 도구를 발표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EU

-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하향 조정(2025. 4. 17.)¹⁾
 - ▶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7차례 연속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함³⁾ (〈표1〉 참고)
- (정책금리) 4월 23일부터 세 가지 주요 금리를 각각 0.25%p 하향 조정
 - 물가상승률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2% 목표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 (〈그림1〉 참고)
- 예금금리 2.50%→2.25%, 담보대출금리 2.65%→2.40%, 한계대출금리 2.90%→2.65%로 인하²⁾
 - (경제) 경제 상황은 이례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글로벌 무역 긴장과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이

표 1 EU 정책금리 변화 경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1월	6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4월
예금금리	3.00	3.25	3.50	3.75	4.00	4.00	4.00	3.75	3.50	3.25	3.00	2.75	2.50	2.25
변동폭(%p)	+0.5	+0.25	+0.25	+0.25	+0.25	-	-	-0.25	-0.25	-0.25	-0.25	-0.25	-0.25	-0.25
담보대출금리	3.50	3.75	4.00	4.25	4.50	4.50	4.50	4.25	3.65	3.4	3.15	2.90	2.65	2.40
한계대출금리	3.75	4.00	4.25	4.50	4.75	4.75	4.75	4.50	3.90	3.65	3.40	3.15	2.90	2.65
담보대출금리 및 한계대출금리 변동폭(%p)	+0.5	+0.25	+0.25	+0.25	+0.25	-	-	-0.25	-0.6	-0.25	-0.25	-0.25	-0.25	-0.25

출처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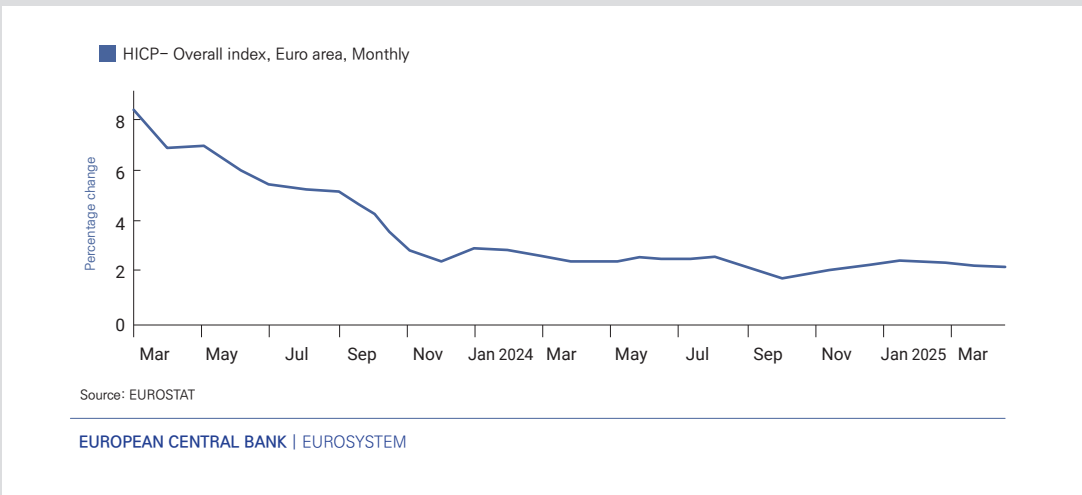
1) 유럽중앙은행(ECB),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5. 4.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5/html/ecb.mp250417-42727d0735.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_____, "Monetary policy statement Press conference," 2025. 4.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2025/html/ecb.is250417-091c625eb6.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_____, "Our monetary policy statement at a glance - April 2025,"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visual-mps/2025/html/mopo_statement_explained_april.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2) 예금금리(Deposit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 시 적용받는 금리로서 통화정책 기초를 이끄는 기준금리임. 담보대출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는 은행이 주간 단위로 담보를 제공하고 유럽중앙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는 은행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임(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4. 18.)

3) 유럽중앙은행(ECB)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고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함

그림 1 EU 물가상승률 변화 추이

(단위: %)



주 2023년 3월 ~ 2025년 3월

출처 유럽중앙은행(ECB), "ECB Data Portal," <https://data.ecb.europa.eu>, 검색일자: 2025. 4. 18.

경제전망을 어렵게 만드나 소비 요인과 투자 정책 등이 회복력을 구축해 옴

※(참고)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국제 발행⁴⁾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을 보완하고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조치를 취해오며 경제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 3월 2.2%로 전월 대비 0.1%p 감소하였으며⁵⁾,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5년 3월 2.4%로 전월 대비 0.2%p 감소함⁶⁾
- (평가)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무역 긴장이 심화하면서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

- 글로벌 무역 긴장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고조는 수출을 저해하여 유로지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유로화 강제는 물가상승률을 더욱 낮추도록 작용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이 악화하면 위험 회피 심리가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 의지를 떨어뜨리며, 무역 긴장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국내 수요에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이 수입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률을 높일 수 있음

4) EU 집행위원회,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25. 3. 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5DC0070>, 검색일자: 2025. 4. 30.

5) 유럽중앙은행(ECB), "Inflation and consumer prices," https://www.ecb.europa.eu/stats/macroeconomic_and_sectoral/hicp/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4. 21.

6) 유럽중앙은행(ECB), "HICP - All-items excluding energy and food, Euro area(changing composition)," Monthly, <https://data.ecb.europa.eu/data/datasets/ICP/ICP.M.U2.N.XEF000.4.ANR>, 검색일자: 2025. 5. 7.

- ◆ EU 집행위, 국방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EU 예산 규정의 개정안 발표(2025. 4. 22.)⁷⁾
- (배경) 2030년까지 방위 강화를 위한 안보·방위 로드맵인 ‘유럽 방위백서(Readiness 2030)’⁸⁾ 목표에 따라 EU 국방 기술 및 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 (방향)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한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STEP)⁹⁾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 역량 향상, 증대, 혁신을 유도하고, 국방 프로젝트에 관한 EU 자금 접근 절차를 간소화함
- ① STEP 범위 확대) 국방 관련 기술 및 제품, 특히 유럽 방위 백서(Readiness 2030)의 우선 역량 기술을 포함하도록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STEP)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프로젝트에 STEP 인증 (seal)¹⁰⁾을 부여함
 - ‘유럽 방위 기금’, ‘호라이즌 유럽’,¹¹⁾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¹²⁾의 선정 프로젝트에 STEP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방위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함
 -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민간 및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이중용도(dual-use) 및 방위 관련 혁신 스타트업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
 -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이중용도 응용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토록 하여, AI 기가팩토리¹³⁾ 구축 및 운영으로 국방 기술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② EU 예산 내 이전 허용) 각 EU 회원국들이 원하는 경우 EU 예산 내 결속 기금¹⁴⁾(cohesion

7) EU 집행위, “EU budget set for defence-related boost under new regulation,” 2025. 4. 2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76, 검색일자: 2025. 4. 23.

8) 2025년 3월 19일 EU 집행위는 EU 시민 보호, EU 가치 수호,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 역량 개발을 위한 유럽 방위 백서 및 재무장(ReArm) 계획을 발표함.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3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5, pp. 11~12, 2025. 4. 3.,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71>, 검색일자: 2025. 4. 29.

9)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STEP))은 유럽 산업을 지원하고, 유럽 핵심 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세 가지 부문(디지털 기술과 딥 테크놀로지 혁신, 청정 및 자원 효율적인 기술, 생명공학)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해당 투자 분야에 대한 자금을 조달 지원함 (EU,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https://strategic-technologies.europa.eu/index_en, 검색일자: 2025. 4. 28.)

10) STEP Seal은 유럽연합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품질 인증 마크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유럽연합의 전략적 의존성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경우 부여함. STEP 인증을 받으면, EU 예산(유럽지역개발기금, 결속 기금 등)에서 자금 지원을 촉진하여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며, STEP 포털에 등록되어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를 더 잘 알릴 수 있음. STEP 인증은 프로젝트 전체 기간 동안 유효함. 2024년 12월 STEP Seal을 처음으로 받은 프로젝트 130개가 발표된 바 있음.(EU,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 For investors,” https://strategic-technologies.europa.eu/investors_en#paragraph_190, 검색일자: 2025. 5. 2.)

11)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은 연구와 혁신 지원을 위한 2021~2027년 EU 장기 예산하의 EU 예산 항목 중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 총예산은 935억유로로 편성되어 있음(EU 집행위, “Horizon Europe,” 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horizon-europe_en, 검색일자: 2025. 4. 25.)

12)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 연구와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고급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확산과 같이 다섯 가지 중요한 분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2021~2027년 EU 장기 예산하의 EU 예산 항목 중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 총예산은 75.9억유로로 편성되어 있음(EU 집행위, “Digital Europe Programme,” 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digital-europe-programme_en, 검색일자: 2025. 4. 28.)

13) 약 10만개의 최첨단 시칩을 탑재한 대규모 공장 시설로 기존 AI 공장보다 4배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함. 2025년 2월 파리에서 열린 AI Action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EU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2천억유로의 AI 투자를 유치하는 이니셔티브인 InvestAI를 발표하였고, AI 행동 계획을 2025년 4월 발표함. AI 행동 계획에서는 5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EU의 AI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다섯 가지 핵심 축 - 대규모 AI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AI 기가팩토리 구축 포함), 대용량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성 증대, EU 전략 부문에서 알고리즘 개발 및 AI 도입 촉진, AI 기술 강화 및 인재 양성, 규제 간소화)(EU 집행위, “Commission sets course for Europe’s AI leadership with an ambitious AI Continent Action Plan,” 2025. 4. 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13, 검색일자: 2025. 4. 29.)

14) EU의 경제·사회·영토 차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중 하나로,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EU 평균의 90% 미만인 회원국이 해당됨(EU 집행위, “Cohesion Fund,”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cohesion-fund_en, 검색일자: 2025. 5. 7.)

funds)에서 ‘유럽방위기금’이나 ‘탄약생산지원법’¹⁵⁾과 같은 방위 프로그램으로 이전을 허용하여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 (③ 국방 관련 인프라 강화) 결속 기금을 유럽연결사업(CEF)¹⁶⁾에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이중용도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AI, 5G 시스템 등과 같은 이중용도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CEF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
- (다음 단계) 이번 개정안 패키지는 EU 차원의 국방 분야 규제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EU 집행위에서 발표될 예정인 국방 분야 간소화 패키지(Omnibus Defence Simplification Package)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예정

◆ EU 통계청, 2024년 4분기 재정통계 발표(2025. 4. 22.)¹⁷⁾

- (재정수지) 2024년 4분기 EU의 계절조정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4%, 유로지역¹⁸⁾ 3.2%로 3분기에 비해 두 지역 모두 0.4%p 증가(〈표 2〉참고)
- (정부 부채) 2024년 4분기 말 유로지역의 GDP 대비 부채는 87.4%로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하였고, EU도 81.6%에서 81.0%로 0.6%p 감소함¹⁹⁾
 -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은 GDP 대비 87.3%에서 87.4%, EU는 80.8%에서 81.0%로 소폭 증가함
 - (일반정부 부채 구성) 유로지역의 경우 채권 84.0%, 대출 13.5%, 통화 및 예금 2.5%, EU 전체에서는 채권 83.4%, 대출 14.1%, 통화 및 예금 2.4%로 구성됨
 - (회원국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²⁰⁾는 그리스(153.6%), 이탈리아(135.3%), 프랑스(113.0%), 벨기에(104.7%), 스페인(101.8%) 순이고,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23.6%), 불가리아(24.1%), 룩셈부르크(26.3%) 등으로 나타남(〈그림 2〉참고)

15) 유럽 전역에 탄약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EU 회원국들이 국방 관련 공급망 병목 현상과 탄약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탄약 재고를 보충하고,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5억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하고 있음(EU 집행위, "The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ASAP) at a glance,"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eu-defence-industry/asap-boosting-defence-production_en, 검색일자: 2025. 4. 29.)

16) 유럽연결사업(Connecting Europe Facility(CEF))은 EU 차원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교통, 에너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연결된 유럽 횡단 네트워크의 개발을 지원함. 운송, 에너지, 디지털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고, 2021-2027년 EU 장기 예산하의 EU 예산 항목 중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 총예산은 207.3억유로로 편성되어 있음(EU 집행위, "Connecting Europe Facility," https://commission.europa.eu/funding-tenders/find-funding/eufunding-programmes/connecting-europe-facility_en, 2025. 4. 29.)

17)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4% in the EU,"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cp>, 검색일자: 2025. 4. 23., "Government debt at 87.4% of GDP in euro area,"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bp>, 검색일자: 2025. 4. 23.

18) 경제통화연합(EMU)에 속하는 EU 모든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금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으로(2023년 기준), 해당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 포함됨. 비유로지역(Non-euro area)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가 해당됨(EU 집행위, "What is the euro area?,"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uro/what-euro-area_en, 검색일자: 2025. 4. 29.)

19) 정부 부채의 변동은 재정수지 적자/흑자 발생과 일반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금융자산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거나,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부채를 조달할 수도 있으므로 적자/흑자 외에도 금융자산 순 취득 등이 분기 정부 부채 변동과 연관될 수 있음. 2024년 4분기 유로지역의 금융자산 순 취득(net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은 마이너스로 전분기 대비 재정적자는 증가했으나, 금융자산 매각으로 부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음.(EU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quarterly data - Evolution of deficit and debt," 2025. 4. 18.,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overnment_finance_statistics_-_quarterly_data#Evolution_of_deficit_and_debt, 검색일자: 2025. 5. 7.)

20) 2024년 EU 재정준칙 개편으로 기존 재정준칙(GDP 대비 3% 재정적자, 60% 정부 채무 이내)은 유지되나, EU는 국가별 점진적 재정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 추이, 신용등급 변화, 재정건전성 노력 등을 고려하여 EU 차원의 즉각적인 부채 감축 압력은 크지 않은 상황

표 2 2024년 4분기 유로지역 20개국 및 EU 27개국 재정통계(계절조정)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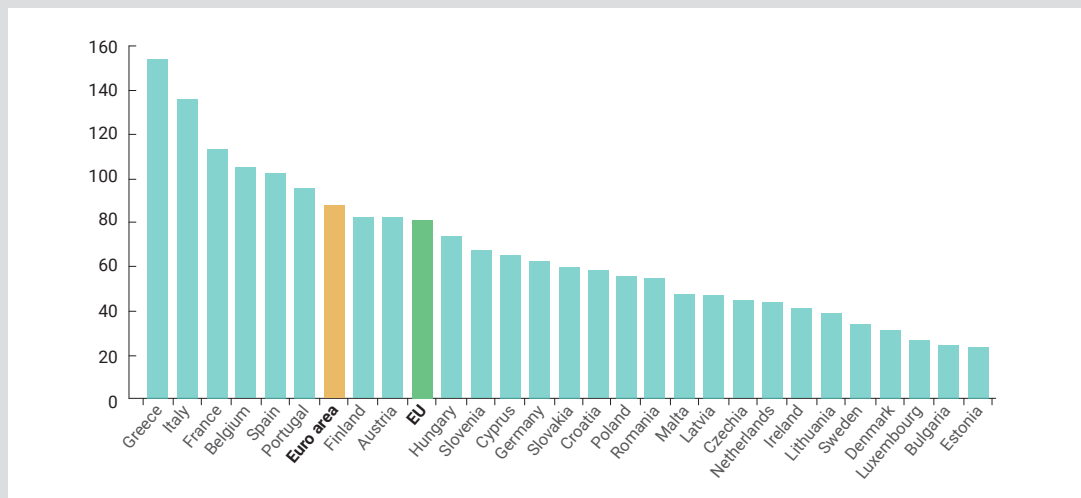
구분	2023Q4	2024Q3	2024Q4
유로지역 20개국			
재정수지	-4.0	-2.8	-3.2
정부수입	46.3	47.0	46.6
정부지출	50.3	49.8	49.9
정부부채	87.3	88.1	87.4
EU 27개국			
재정수지	-3.9	-3.0	-3.4
정부수입	45.9	46.4	46.1
정부지출	49.9	49.4	49.5
정부부채	80.8	81.6	81.0

주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4% in the EU,"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cp>, 검색일자: 2025. 4. 23.
 ____, "Government debt at 87.4% of GDP in euro area,"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bp>, 검색일자: 2025. 4. 23.

그림 2 2024년 4분기 EU 회원국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



출처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at 87.4% of GDP in euro area," 2025.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5-bp>, 검색일자: 2025. 4. 23.



IMF

◆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발표(2025. 4. 22.)²¹⁾

※ 세계경제전망 보고서(2025. 4월)자료는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자료에서는 제1장의 내용을 위주로 요약함

- 제1장. 글로벌 전망과 정책, 제2장. 실버경제의 부상: 인구고령화의 글로벌 영향, 제3장. 여정과 교차점(Journeys and Junctions): 이민 및 난민 정책의 파급 효과

● (전망) 세계성장률은 2025년 2.8%, 2026년 3%로 2025년 1월 WEO 기준으로 두 해 모두 3.3%였던 것에 비해 낮은 수치로 전망됨

* 현재 시점의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전망의 기초가 되는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세계경제전망(WEO) 자료에서는 전망 기준일에 따라 다양한 전망을 함께 제시함.²²⁾ 해당 수치는 2025년 4월 4일 기준 이용 가능한 정보(4월 2일 관세 및 초기 대응 포함)를 기반²³⁾으로 한 전망에 해당

- 경제성장률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무역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와 무역연계 파급효과, 불확실성 등 간접적 효과에 기인함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24년 1.8%에서 2025년 1.4%, 2026년 1.5%로 예상되며,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 긴장, 수요 모멘텀 약화 등으로 인해 2025년 1월 WEO 전망 대비 0.9%p 낮은 2025년 1.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불확실성 증가와 관세로 인해 2025년 0.8%로 소폭 하락 후, 2026년 1.2%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성장률은 2025년 1월 WEO 전망 기준(2025년 2.0%, 2026년 2.1%)에서 2025년 1.0%, 2026년 1.4%로 하향 조정됨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2024년 4.3%, 2025년 3.7%, 2026년 3.9%로 전망되며, 중국은 2025년 1월 WEO 전망(2025년 4.6%, 2026년 4.5%)에서 두 해 모두 4.0%로 하향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4.3%, 2026년에는 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위험) 무역전쟁이 가속화하고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글로벌 무역 흐름을 위축시키고,

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A Critical Juncture amid Policy Shifts, 2025. 4. 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4/22/world-economic-outlook-april-2025?cid=bl-com-SM2025-WEOEA2025001>, 검색일자:2025. 4. 23.

22) 현재 무역긴장의 급격한 고조로 정책 모호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전망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 WEO 자료(2025년 4월)에서는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2025년 4월 4일 기준 이용 가능한 정보(4월 2일 관세 및 초기 대응 포함)를 기반으로 한 기준전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른 2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전망을 추가로 제시함. ① 4월 관세를 제외(4월 2일 이전 예측 (3월말 마감)기준 전망치로 2024년 10월 WEO 이후의 모든 이전 정책 발표 내용 포함)한 전망에서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3.2%로 전망하였으며, ② 4월 9일 이후 기준(일부 국가에 부과된 높은 관세 유예 및 미-중 간 보복관세 조치 등 관련 내용 반영)으로 한 전망에서는 2025년 2.8%, 2026년 2.9%로 전망함

23) 2025년 2월 1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2월 4일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 3월 4일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4월 2일에는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함. 중국은 2월 10일에 발효된 일부 미국 농산물, 에너지 원자재 및 농기구 수입품과 3월 10일에 발효된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 10~15%의 관세 부과 등 4월 4일까지 이용 가능한 관세 관련 다양한 조치들을 고려하여 전망함

- 자산 가격 조정 및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단기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음
- (정책권고) 각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부채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요구됨
- (무역정책의 안정성 회복)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적 또는 다자간 협력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 무역환경 조성 필요
- (통화정책)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신중하고 민첩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노력 필요
- (기술과 성장) 정부는 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인공 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에 투자할 필요

표 3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

(단위: %, %p)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5년 1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4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4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세계경제	3.3	2.8	3.0	-0.5	-0.3	-0.4	-0.3
선진국	1.8	1.4	1.5	-0.5	-0.3	-0.4	-0.3
미국	2.8	1.8	1.7	-0.9	-0.4	-0.4	-0.3
유로지역	0.9	0.8	1.2	-0.2	-0.2	-0.4	-0.3
독일	-0.2	0.0	0.9	-0.3	-0.2	-0.8	-0.5
프랑스	1.1	0.6	1.0	-0.2	-0.1	-0.5	-0.3
이탈리아	0.7	0.4	0.8	-0.3	-0.1	-0.4	0.1
스페인	3.2	2.5	1.8	0.2	0.0	0.4	0.0
일본	0.1	0.6	0.6	-0.5	-0.2	-0.5	-0.2
영국	1.1	1.1	1.4	-0.5	-0.1	-0.4	-0.1
캐나다	1.5	1.4	1.6	-0.6	-0.4	-1.0	-0.4
기타 선진국 ²⁾	2.2	1.8	2.0	-0.3	-0.3	-0.4	-0.3
한국	2.0	1.0	1.4	-1.0	-0.7	-1.2	-0.8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3	3.7	3.9	-0.5	-0.4	-0.5	-0.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5.3	4.5	4.6	-0.6	-0.5	-0.5	-0.3
중국	5.0	4.0	4.0	-0.6	-0.5	-0.5	-0.1
인도 ³⁾	6.5	6.2	6.3	-0.3	-0.2	-0.3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3.4	2.1	2.1	-0.1	-0.3	-0.1	-0.4
러시아	4.1	1.5	0.9	0.1	-0.3	0.2	-0.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2.4	2.0	2.4	-0.5	-0.3	-0.5	-0.3
유럽연합	1.1	1.2	1.5	-0.2	-0.2	-0.4	-0.2
아세안-5 ⁴⁾	4.6	4.0	3.9	-0.6	-0.6	-0.5	-0.6
저소득 개도국	4.0	4.2	5.2	-0.4	-0.2	-0.5	-0.4

주 실질실효환율은 2025. 3. 6.~2025. 4. 3.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순서는 경제규모 순으로 나열.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조정

- 1) 2025년 1월 WEO 업데이트 및 2024년 10월 WEO 예측에 대한 반올림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차이
- 2) G7과 유로지역 국가 제외
- 3)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11년 이후의 GDP는 2011-12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Apr, 2025. 4. 22. Table 1.1을 참고하여 작성 ; 한국의 수치는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참고하여 작성

◆ IMF, 재정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2025. 4. 23.)²⁴⁾

※ 재정감시 보고서(2025. 4월)자료는 다음과 같이 총 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본 자료에서는 1장의 내용을 위주로 요약함

- 제1장: 불확실성하의 재정정책, 제2장: 공공여론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에너지 보조금과 연금 개혁의 본질
- (동향) 최근 경제 및 재정전망은 정책 변화 및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재정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늘어난 예산과 공공채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4년 세계 재정적자는 0.1%p 증가하여 GDP의 평균 5.0%에 달했으며, 공공채무는 1%p 증가하여 GDP의 92.3%를 기록
- ▶ 이는 높은 보조금, 사회복지혜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기인
- (전망)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가 간 대응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전망을 악화시키고 하방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 세계 공공채무는 2025년까지 GDP 대비 95.1%(전년 대비 2.8%p 상승)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팬데믹 당시의 정점을 넘어 GDP의 약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위험) 높은 관세와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은 매출 감소와 생산 위축을 유발해 부채 수준을 높이고 있음. 특히 금융조건이 더 어려운 신흥시장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럽국가에서의 국방비 지출 증가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적 원조 감소로 인한 어려움도 예상됨

- (정책권고) 불확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각국은 각 국가의 재정여력과 경제적 상황 및 우선순위에 따라 부채 감소와 경제성장 간 균형을 맞춘 정책을 설계 필요
- (국가별 대응) 국가별 상황에 맞춘 정책 대응으로 국가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 재정여력에 따른 대응 : 재정여력이 제한된 국가는 공공지출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지출은 다른 부문의 지출 삭감이나 새로운 세입으로 상쇄하도록 해야 함.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예시 : 독일)는 중기재정 프레임 워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
 - ▶ 선진국 :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우선순위재조정, 연금 및 의료 개혁 추진, 과세 기반 확대 필요
 - ▶ 미국 : 공공채무를 줄이고 지속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구축 및 지출조정필요
 - ▶ 중국 : 재정확장을 통한 경제지원과 무역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원 필요
 - ▶ 저소득 개발도상국 : 과도한 재정긴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양허성 금융(concessional financing)²⁵⁾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필수적
 - ▶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 세제개혁을 통한 지출 합리화와 세수기반 확대 및 세수관리 강화 필요
- (재정정책과 금융안정성) 금융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기관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대출, 보증 및 자본 투입 등 금융혼란 완화 노력 필요

24) IMF, Fiscal Monitor 2025 April: Fiscal policy under Uncertainty, 2025. 4. 2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5/04/23/fiscalmonitor-April-2025>, 검색일자: 2025. 4. 24.

25) 양허성 금융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이 빈국에 일반 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이율, 상환 기간 등)으로 제공하는 대출을 의미하며, 주로 저소득 국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 준칙 준수, 예측 강화, 중기계획과 연간 예산의 통합, 비상 계획 수립 등 재정프레임 워크 강화와 중기 부채관리 전략 수립으로 자금조달 위험 완화 필요

- (구조적 개혁 및 성장 촉진) 재정 및 구조 개혁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부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며, 연구 개발, 인프라, 교육 등에 대한 투자와 지출효율성 강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해야 함

표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재정수지							
세계경제	-5.0	-5.1	-4.7	-4.5	-4.5	-4.5	-4.6
선진국	-4.7	-4.3	-3.9	-3.8	-3.9	-3.9	-4.0
캐나다	-2.1	-1.9	-1.6	-1.4	-1.2	-1.0	-0.8
유로지역	-3.1	-3.2	-3.4	-3.5	-3.5	-3.6	-3.7
프랑스	-5.8	-5.5	-5.9	-6.1	-6.1	-6.0	-6.1
독일	-2.8	-3.0	-3.5	-3.9	-4.1	-4.3	-4.4
이탈리아	-3.4	-3.3	-2.8	-2.6	-2.4	-2.5	-2.5
스페인 ¹⁾	-3.2	-2.7	-2.4	-2.3	-2.2	-2.1	-2.0
일본	-2.5	-2.9	-3.1	-3.3	-4.0	-4.6	-5.3
영국	-5.7	-4.4	-3.7	-3.1	-2.8	-2.6	-2.3
미국	-7.3	-6.5	-5.5	-5.4	-5.6	-5.5	-5.6
기타 선진국	-0.5	-0.6	-0.3	-0.1	-0.1	-0.2	-0.2
한국	-0.6	-0.4	-0.5	-0.4	-0.4	-0.4	-0.4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5.5	-6.1	-5.9	-5.5	-5.4	-5.3	-5.3
국가채무							
세계경제 ²⁾	92.3	95.1	96.7	97.5	98.2	98.9	99.6
선진국	108.5	110.1	110.9	111.5	112.0	112.6	113.3
캐나다 ³⁾	110.8	112.5	110.9	109.4	107.9	106.2	104.1
유로지역	87.7	88.7	89.7	90.4	91.1	91.9	92.9
프랑스	113.1	116.3	119.1	121.6	123.9	126.1	128.4
독일	63.9	65.4	67.0	68.5	70.4	72.5	74.6
이탈리아	135.3	137.3	138.5	138.6	138.2	137.7	137.7
스페인	101.8	100.6	99.0	97.6	96.0	94.5	93.0
일본	236.7	234.9	233.7	232.1	231.2	231.1	231.7
영국	101.2	103.9	105.4	106.1	106.5	106.5	106.1
미국 ³⁾	120.8	122.5	123.7	124.9	125.9	127.0	128.2
한국	52.5	54.5	55.7	56.6	57.5	58.4	59.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69.5	73.6	76.7	78.4	79.7	80.9	82.0

주 1. 모든 국가의 평균은 미국달러로 환산된 명목 GDP 기준

2. 추정치(estimate)와 전망(projections)은 2025년 4월 14일까지 이용 가능한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모든 경우에 최신 발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1) 금융부문 자원 포함

2) 부채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부채 불포함

3)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 계정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캐나다,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부채 및 순부채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부채를 제외하도록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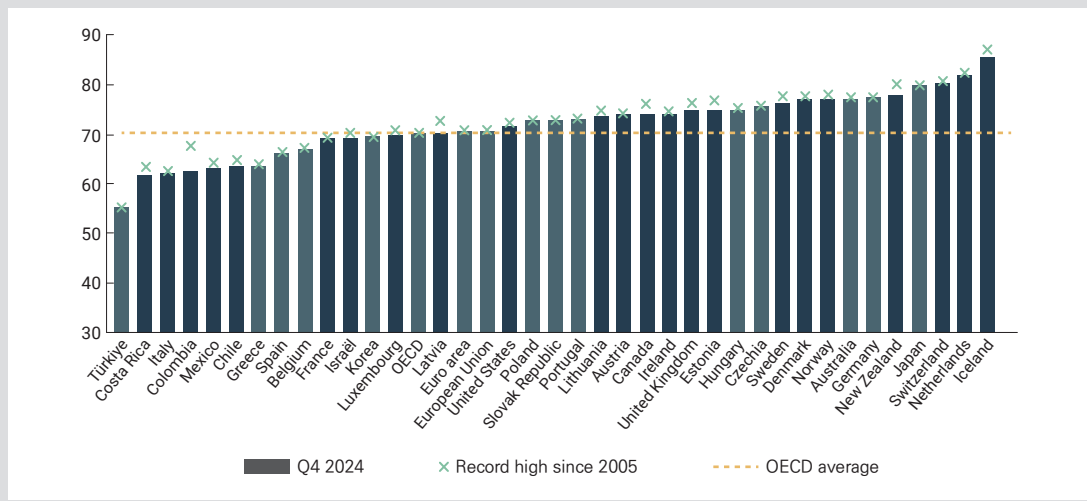
출처 IMF, Fiscal Monitor 2025 April, 2025. 4. 23., Table1.1, 1.2를 참고하여 작성; 한국의 수치는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Table A1, A7에서 발췌



OECD

- ◆ OECD, 2024년 4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5. 4. 17.)²⁶⁾
- OECD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4분기에 각각 70.2%와 73.9%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두 지표 모두 38개 OECD 회원국 중 11개국²⁷⁾에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에 해당
- 2024년 4분기 고용률은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OECD 평균인 70.2%를 초과하였음
- 튀르키예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의 고용률은 80%를 상회하며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보임(그림 3, <표 5> 참고)
- 2024년 4분기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의 거의 4분의 3에서 OECD 평균인 73.9%보다 높았음. 2024년 전체로 볼 때, OECD 고용률은 2023년보다 소폭 높았으며(0.2%p 상승), 이는 주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를 반영한 것임(<표 6> 참고)

그림 3 OECD 회원국의 고용률



주 2024년 4분기 고용률은 호주, 벨기에,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르키예 뿐만 아니라 OECD, 유로 지역, 유럽연합(청색광으로 표시된 막대)에서도 사상 최고치의 0.1%p 이내로 나타남

출처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Fourth quarter 2024," 2025. 4. 17., p. 2, Figure 2

26) OECD, "labour-market-situation-oecd-04-2025," 2025. 4. 17.,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4/labour-market-situation-oecd-04-2025.pdf>. 검색일자: 2025. 4. 18.

27) 호주, 벨기에,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튀르키예

표 5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19년	2023년		2024년			
				Q4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69.3	70.0	70.2	68.9	70.1	70.1	70.2	70.2	70.3	70.2
G7	72.4	73.0	73.0	72.3	73.0	73.1	73.0	73.0	73.1	73.1
유럽연합	69.8	70.4	70.8	68.1	70.4	70.6	70.7	70.8	70.9	70.9
유로지역	69.4	70.1	70.5	68.5	70.0	70.2	70.3	70.5	70.5	70.6
호주	76.9	77.2	77.1	74.1	77.2	77.1	76.8	76.8	77.2	77.3
캐나다	75.6	75.9	74.7	74.5	75.8	75.6	75.2	74.9	74.3	74.2
프랑스	68.1	68.5	69.0	66.7	68.3	68.4	68.7	69.0	69.2	68.9
독일	76.9	77.2	77.4	75.8	77.2	77.3	77.4	77.4	77.4	77.6
이탈리아	60.2	61.5	62.2	59.0	61.4	62.1	62.1	62.0	62.5	62.2
일본	78.5	78.9	79.4	78.1	79.0	79.2	79.1	79.3	79.5	79.8
한국	68.5	69.2	69.5	67.0	69.4	69.5	69.5	69.5	69.6	69.6
스페인	64.3	65.4	66.1	63.4	65.7	65.7	65.7	66.1	66.3	66.3
튀르키예	52.8	53.8	55.2	50.3	53.8	54.4	55.1	55.1	55.2	55.2
영국	75.1	75.1	74.8	76.4	74.9	74.9	74.5	74.6	74.9	75.0
미국	71.3	72.0	71.9	71.7	72.0	72.0	72.0	71.9	71.8	71.7

출처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Fourth quarter 2024," 2025. 4. 17., Table 1 일부 발췌

표 6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19년	2023년		2024년			
				Q4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73.1	73.7	74.0	72.9	73.8	73.8	73.9	74.0	74.0	73.9
G7	75.6	76.2	76.4	75.5	76.2	76.3	76.3	76.4	76.5	76.4
유럽연합	74.5	75.0	75.4	73.0	75.0	75.2	75.3	75.4	75.4	75.3
유로지역	74.5	75.0	75.4	74.1	75.0	75.2	75.4	75.4	75.4	75.3
호주	80.0	80.2	80.4	78.3	80.2	80.3	80.0	80.1	80.6	80.6
캐나다	79.8	80.3	79.8	79.1	80.3	80.2	80.0	80.0	79.6	79.6
프랑스	73.6	73.9	74.5	72.7	73.8	74.1	74.4	74.6	74.8	74.4
독일	79.4	79.7	80.2	78.2	79.7	79.9	80.1	80.2	80.3	80.4
이탈리아	65.6	66.7	66.6	65.4	66.7	67.1	67.0	66.7	66.6	66.2
일본	80.7	81.1	81.6	80.0	81.2	81.4	81.4	81.5	81.7	81.9
한국	70.5	71.1	71.5	69.6	71.3	71.4	71.5	71.5	71.4	71.6
스페인	74.0	74.5	74.6	73.8	74.7	74.6	74.5	74.8	74.8	74.4
튀르키예	59.2	59.6	60.6	58.2	59.4	59.8	60.5	60.6	60.6	60.6
영국	78.1	78.3	78.2	79.4	78.2	77.9	77.9	77.9	78.4	78.5
미국	74.0	74.7	74.9	74.4	74.8	74.9	74.9	74.9	75.0	74.9

출처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Fourth quarter 2024," 2025. 4. 17., Table 2 일부 발췌

- OECD 실업률은 2024년 4.9%, 2025년 2월 기준 4.8%를 유지하고 있음(〈표 7〉 참고)
- 2025년 2월 기준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5.7%, 6.1%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캐나다 6.6%, 미국 4.1%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

표 7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5년	
			Q4	Q1	Q2	Q3	Q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OECD 전체	4.8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8	4.8
G7	4.1	4.3	4.2	4.2	4.3	4.3	4.3	4.3	4.3	4.3	4.3	4.3	4.3
유럽연합	6.0	5.9	6.1	6.1	6.0	5.9	5.8	5.9	5.8	5.8	5.8	5.8	5.7
유로지역	6.6	6.4	6.5	6.5	6.4	6.3	6.2	6.3	6.2	6.2	6.2	6.2	6.1
호주	3.7	4.0	3.9	3.9	4.0	4.1	4.0	4.1	4.1	3.9	4.0	4.1	4.1
캐나다	5.4	6.4	5.7	5.9	6.3	6.6	6.7	6.6	6.6	6.9	6.7	6.6	6.6
프랑스	7.4	7.4	7.6	7.5	7.4	7.4	7.3	7.4	7.4	7.3	7.3	7.3	7.4
독일	3.0	3.4	3.1	3.3	3.4	3.5	3.4	3.5	3.4	3.4	3.5	3.5	3.5
이탈리아	7.7	6.5	7.5	7.1	6.7	6.3	6.1	6.2	6.0	6.0	6.3	6.2	5.9
일본	2.6	2.6	2.6	2.6	2.6	2.5	2.5	2.4	2.5	2.5	2.5	2.5	2.4
한국	2.7	2.8	2.8	2.8	2.8	2.5	3.0	2.5	2.7	2.7	3.7	2.9	2.7
스페인	12.2	11.4	11.9	11.8	11.6	11.3	10.7	11.1	10.9	10.7	10.6	10.5	10.4
튀르키예	9.4	8.7	8.8	8.8	8.8	8.7	8.6	8.7	8.8	8.5	8.4	8.4	8.2
영국	4.1	4.3	3.9	4.3	4.2	4.3	4.4	4.3	4.4	4.4	4.4	4.4	...
미국	3.6	4.0	3.8	3.8	4.0	4.2	4.1	4.1	4.1	4.2	4.1	4.0	4.1

출처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Fourth quarter 2024," 2025. 4. 17., Table 3 일부 발췌



미국

예산·결산 등

-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회계연도 상반기 (2024. 10. 1.~2025. 3. 31.)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5. 4. 10.)²⁸⁾
-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상반기에 집계된 총 누적 재정적자는 1조 3,100억달러로, 전년 동기(1조 650억달러) 대비 23.0%(2,450억달러) 증가
- (세입) 전년 동기(2조 1,880억달러) 대비 3.2% (710억달러) 증가한 총 2조 2,590억달러
- 세입 증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급여세(payroll taxes)를 합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2%(870억달러) 증가한 약 2조 2,590억달러
-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9%(310억달러) 감소한 1,590억달러

- ▶ 법인세 감소는 캘리포니아 등의 재난 지역 기업들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금 납부를 2024회계연도로 유예 조치(유예된 세금 징수는 2024회계연도 초에 대부분 발생)한 것에 기인
- 기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0%(150억달러) 증가한 1,220억달러
- ▶ 관세수입은 약 17%(60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산 수입품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특정 품목 및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월~3월에 부과된 추과 관세에 기인
- (세출) 전년 동기(약 3조 2,530억달러) 대비 약 7%(3,170억달러) 증가한 총 3조 5,690억달러이며, 주요 지출²⁹⁾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의무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지출(8%), 메디케어(7%), 메디케이드(5%) 지출 모두 증가하였으며, 3개 분야를 모두 합한 증가율은 7%로 집계

표 8 미국 FY2024 & FY2025 상반기 재정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24 상반기 ¹⁾ (A)	FY2025 상반기 ¹⁾ (B)	증감 (B-A)	증감률 (B-A)/A	지출 시점 이동 제거 ²⁾	
					증감	증감률
재정수입	2,188	2,259	71	3.2	71	3.2
재정지출	3,253	3,569	317	9.7	244	7.3
재정적자	1,065	1,310	245	23.0	173	15.2

주 1)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지출 시점 이동(timing shifts)을 제거(exclude)하지 않은 경우
 2)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지출 시점 이동(timing shifts)을 제거한 경우(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공휴일))에 발생했어야 할 지출이 2023회계연도에 지출됨)의 FY2024 상반기 대비 FY2025 상반기의 증감 및 증감률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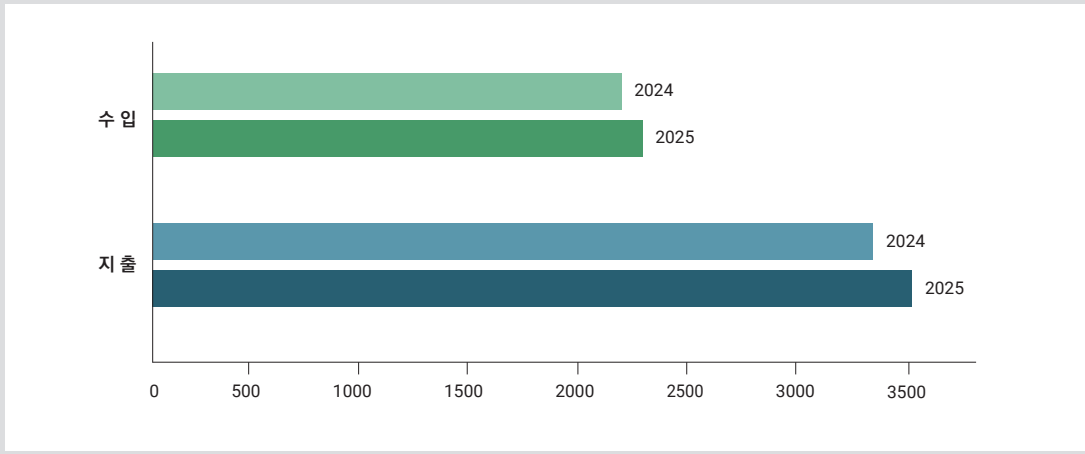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Table 1-1, p. 1

28)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https://www.cbo.gov/system/files/2025-04/61300-MBR.pdf>, 검색일자: 2025. 4. 14.

29) 지출의 시점 이동(timing shifts)을 제거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그림 4 FY2024 & FY2025 상반기 결산 추이 비교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주 기간(주말 등) 일정으로 인한 지출 시점 이동(timing shifts) 제거(exclude) 조정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 ▶ 사회보장지출은 수혜자와 생계비(cost of living) 조정
에 따른 평균지급금액(average benefit payment)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8%(600억달러) 증가한
7,720억달러
-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20
억달러), 5%(160억달러) 증가한 4,210억달러, 3,200억
달러로 집계
 - * 메디케어 지출 증가는 가입자 수 증가 및 지급률 인상(수가 인
상)에 따른 결과이며, 메디케이드의 경우 가입자의 비용 증가
에 기인³⁰⁾
- (순이자 지출) 전년 동기 대비 13%(570억달러) 증
가한 4,970억달러
- (환급형 세액공제)³¹⁾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430억달러
- ▶ 건강보험개혁법(ACA)³²⁾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험 시장³³⁾
을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기인
 - *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구 소득(연방 빈곤선 기준)을
기준으로 설정된 본인 부담률(최대 8.5%)을 초과하는 보험료
에 대해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s)를 받게 됨
- (국토안보부) 전년 동기 대비 약 32%(140억달러)
증가한 570억달러로 허리케인 헬렌(Helene)과 밀
턴(Milton)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에 주로 기인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³⁴⁾ 전년 동기 대비 약
127%(700억달러) 감소한 -150억달러로 집계

30) 서비스 단가 상승이나 이용률 증가 등이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음

31) refundable tax credits: Refundable Tax Credits는 recovery rebates(재난지원금)를 포함하여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Premium Tax Credits(의료보험 관련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교육세액 공제)등을 포함

32) Affordable Care Act

33) Health Insurance marketplaces(Affordable Insurance Exchange로 불리기도 함)

34)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mpany

- ▶ 2024회계연도 상반기에 은행 파산 처리에 따른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특히 높았으며, 계속 진행 중인 파산 은행의 자산 청산(liquidation)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 지출 상쇄 수입(offsetting collections: 지출 감소)으로 집계
- (채무) 채무한도의 경우 현재 재무부의 특별 조치(extra ordinary measures)로 인해 유예 상태에 있으나, 2025년 8월 또는 9월에 가용 자금이 고갈 될 것으로 전망

◆ 의회, 2025회계연도³⁵⁾ 예산결의안*(H.Con.Res. 14) 최종 합의(resolving differences) 및 의결 완료 (2025. 4. 10.)³⁶⁾

* (예산결의안)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미 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예산안을 바탕으로 각각 예산결의안(의회 예산 심의 청사진) 심의에 착수

- (주요 내용) 상·하원의 분야별 상임위원회에 예산 증감에 대한 조정지침(reconciliation instruction) 제시, 조정지침에 따른 관련 법안 완료 시한(~2025. 5. 9.) 등
- 동 예산결의안의 조정지침은 적자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향후 10년 동안 총 2조달러 이상의 순 적자 감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도를 감축하도록 함(반면, 2조달러를 기준으로 초과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한도를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전망) 예산 결의안의 통과로 의회 심의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상원의 필리버스터 제한)가 가능³⁷⁾

* 일반 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나 예산결의안이 통과되면 재정에 관한 내용³⁸⁾은 단순 과반(51표)만으로도 처리 가능

기타

-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55 장기재정전망(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보고서 발표(2025. 3. 27.)^{39) 40) 41)}
-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6.2%로 추정되며, 205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7.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의 증가는 이자 비용의 증가 및 지속적인(sustained)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기인하며,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의 향후 30년 평균 수치는 과거 50년 평균 대비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primary deficit) 2025회계연도에 GDP 대비 3.0%로 추정되며, 2055회계연도에는 1.9%로 감소하나, 이자비용과 의무지출의 증가로 인해 총 재정적자는 증가

35) 2025회계연도를 중심으로 2026~2034회계연도에 대한 방향도 설정

36)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https://www.cbo.gov/system/files/2025-04/61300-MBR.pdf>, 검색일자: 2025. 4. 14.

37) Economic Policy Institute, "Congress passes budget resolution (H. Con. Res. 14)," 2025. 4. 10., <https://www.epi.org/policywatch/house-passes-budgetresolution-h-con-res-14/>, 검색일자: 2025. 4. 29.

38) byrd rule에 따라 비예산 항목은 포함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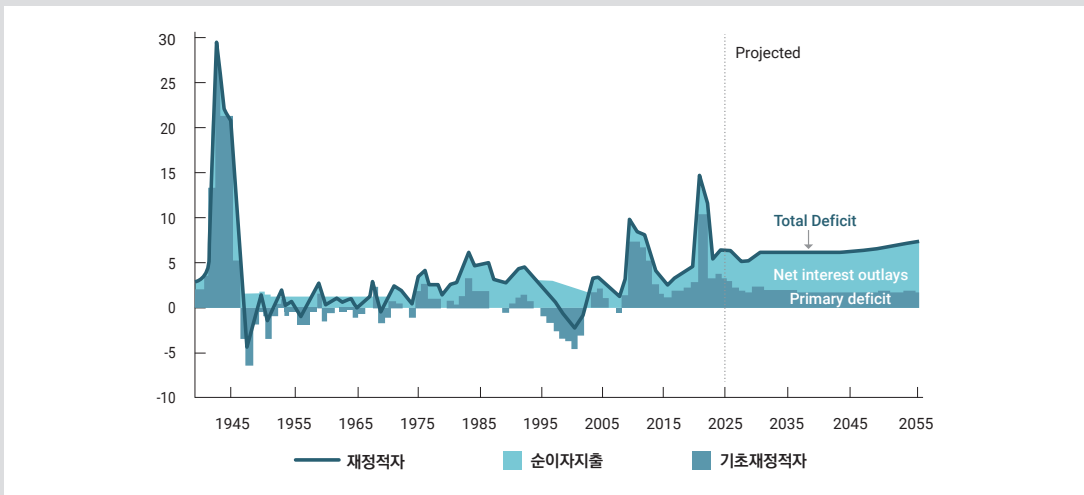
39) 미국 의회예산처(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https://www.cbo.gov/publication/61187>, 검색일자: 2025. 4. 3.

40) 해당 보고서의 장기재정전망은 CBO의 경제 전망(2024년 12월 4일 기준), 예산 전망(2025년 1월 6일까지 제정된 법률 기준) 및 2025년 1월에 발표한 인구 추계 보고서(2024년 11월 15일 기준)를 기준으로 분석

41) 모든 연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를 의미

그림 5 미국 재정 장기전망(2025-2055)

(단위: GDP 대비 %, 회계연도)



출처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3.27. Figure1-1,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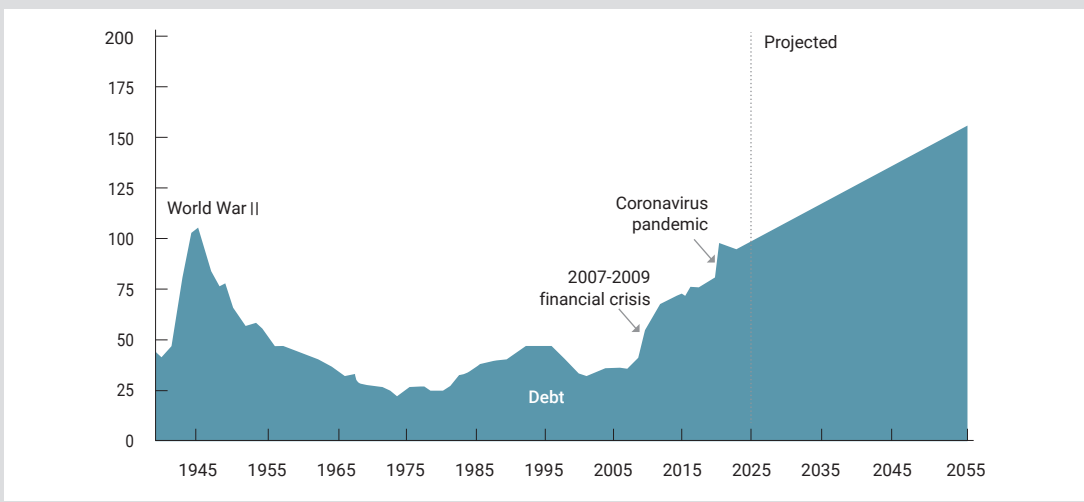
- (연방채무) 2024회계연도 말 연방채무*는 GDP 대비 98%로 추정되며, 2029회계연도에 역대 최고점(FY1946: 106.7%)을 넘는 GDP의 107%를

기록한 후, 2055년에는 GDP 대비 156%에 달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연방채무의 최근 30년(1995~2024) 평균은 60%

그림 6 미국 연방채무 장기전망(2025-2055)

(단위: GDP 대비 %, 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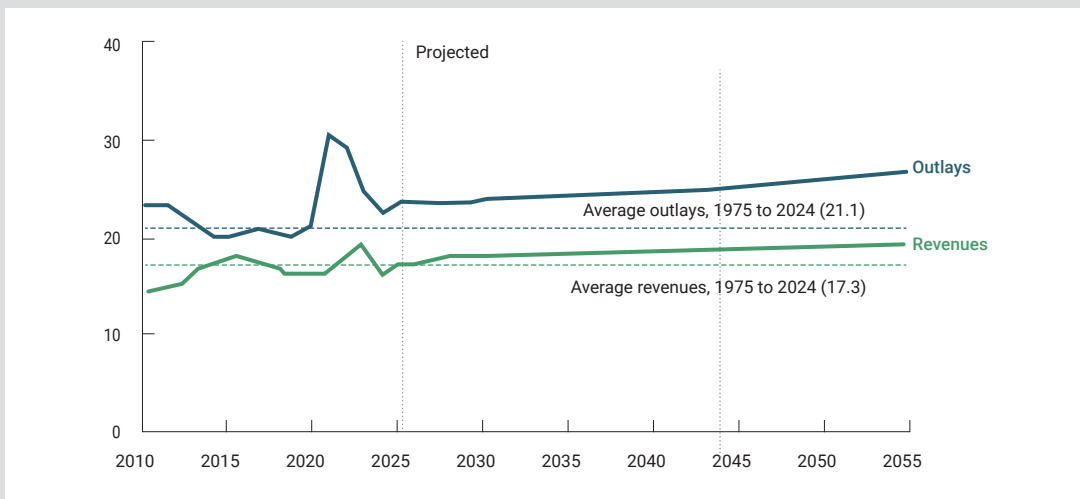


출처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Figure1-1, p. 10

- (재정지출) 2025회계연도 지출은 GDP 대비 23.3%로 추정되며, 205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6.6% 전망
 - 재정지출의 증가는 메디케어 중심의 한 보건 프로그램과 사회보장지출 및 순이자지출 비용에 주로 기인
- (재정수입) 2025회계연도 수입은 GDP 대비 17.1%로 추정되며, 205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9.3% 전망
 - 연방 재정수입 증가는 향후 몇 년간은 2017 세계 개혁법 만료, 이후에는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한 개인소득세 수입의 증가에 주로 기인

그림 7 미국 지출·수입 장기전망(2025-2055)

(단위: GDP 대비 %, 회계연도)



출처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2025. 3. 27., Figure 2-1, p. 18

표 9 미국 장기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FY2024(실적)		FY2025		FY2036		...	FY2054		FY2055	
	2024전망	2025전망	2024전망	2025전망	2024전망	2025전망		2024전망	2025전망	2024전망	2025전망
수입	17.5	17.1	17.1	17.1	18.0	18.4	...	18.8	18.9	N/A	19.3
지출	23.1	23.4	23.1	23.3	24.4	24.5	...	27.3	26.5		26.6
재정수지	-5.6	-6.4	-6.1	-6.2	-6.3	-6.1	...	-8.5	-7.2		-7.2
기초재정수지	-2.5	-3.3	-2.8	-3.0	-2.2	-2.0	...	-2.2	-1.9		-1.9
연방채무	99	98	102	100	120	120	...	166	154		156

주 각 회계연도의 지출 및 재정수지 규모는 timing shifts⁴²⁾ 조정(exclude)을 반영한 경우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5," 2025. 4. 8., Table 1-1, p. 1

42) timing shifts: 지급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지출의 이동이 직전 회계연도로 잡히는 경우

- (2024년 전망과의 비교) 2025년도 보고서의 전망 수치를 2024년도 전망과 비교할 경우, 2054년의 재정적자(1.3%p↓) 및 채무(12%p↓) 규모가 GDP 대비 감소
- 전년도 전망(GDP 대비 기준) 대비 순이자지출과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고, 세입 수치는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정적자와 채무 비율 감소
- ◆ 의회예산처(CBO), 연방 채무한도(Federal Debt and the Statutory Limit) 보고서 발표(2025. 3. 26.)⁴³⁾
 - (배경) 2023년 6월 3일에 재정책임법⁴⁴⁾에 근거하여 채무한도의 적용이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됨
 - (현황) 현재 채무한도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서, 현재 보유한 현금과 재무부의 특별조치를 통한 정부 운영에 필요한 현 가용 금액이 소진되기 전에 현 채무한도 (36.1조달러)를 인상하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
 - CBO는 현금 및 재무부 특별조치⁴⁵⁾를 통한 가용 금액은 약 8,200억달러로 약 5개월 (3. 1.~7. 31.) 정도 기간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
 - (향후 전망) 올해(2025)의 차입이 과거 추이와 크게 달라진다면 CBO가 추정하는 자금 고갈일(X-date; 채무 불이행)은 조기 도달하거나 예상 시점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
- 올해 3~7월까지 차입 수요가 연간 차입의 36%*를 넘게 되면, 현금 및 특별조치 가용 총금액인 8,200억달러를 초과하게 되어 8월 1일 이전에 자금 고갈 가능
 - * 최근 3년간 연간 총차입 금액의 해당 기간(3~7월) 평균 차입 비중은 30%(최저: 24%, 최고 36%)
- 같은 기간 동안 예상 차입이 약 5,000억달러(최근 3년간 연간 차입의 25% 수준)에 그친다면 특별조치는 9월 말까지도 지속 가능
- ◆ 트럼프 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 이후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등 정책 조치 이행(2025. 3. 26.~2025. 4. 28.)
 - (자동차 부품 관세)⁴⁶⁾ 모든 국가⁴⁷⁾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2025. 4. 3.~) 명령
 - *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개시일은 2025년 4월 3일이나, 자동차 부품은 추후(연방관보⁴⁸⁾에 지정된 날짜부터)에 적용하되, 2025년 5월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 (상호 관세)⁴⁹⁾ 모든 무역 상대국 수입품(all imports from all trading partners)에 2025년 4월 5일부터 일괄적인 10% 추가 관세 부과
 - (별도 관세) 별도 지정국가(Annex I)의 경우, 2025년 4월 9일부터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고, 별도 지정되지 않은 국가는 10%의 상호 관세만 부과

43) CBO, "Federal Debt and the Statutory Limit, March 2025," 2025. 3. 26., <https://www.cbo.gov/publication/60887>, 검색일자: 2025. 4. 4.

44)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P.L. 118-5)

45) 특정 기금(공무원퇴직 기금, 환율안정기금 등)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채투자 중단을 의미

46) 백악관,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 Proclamations," 2025. 3. 1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3. 31.

47) USMCA 협정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은 비미국산 제품(non-U.S. content)에 한해서만 25% 관세 부과

48) Federal Register for automobile parts

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 및 시사점」, 2025. 4.의 주요 내용 발췌

- (상호 관세 예외 품목) 이미 부과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이번 상호 관세에서 예외를 두며, 기존 조치 그대로 적용
- (중국 관세 조정)⁵⁰⁾ 소액 품목(우편물) 면세(de minimis)는 해당 요건하에 혜택을 부여 (2025. 2. 4.~) 하였으나, 세 차례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20%로 인상(2025. 5. 2.~)
- (중국 별도 관세 인상) 34% → 84%로 인상⁵¹⁾(2025. 4. 9.~) → 125%로 추가 인상⁵²⁾(2025. 4. 10.~)
- (상호 관세 조정)⁵³⁾ 2025년 4월 10일부터 모든 국가에 적용한 상호 관세 10%만 부과하고, 별도 관세는 90일간(2025. 4. 10.~2025. 7. 9.) 유예⁵⁴⁾
- (전체 상호 관세 제외 품목 발표)⁵⁵⁾ 반도체로 분류되는 품목은 상호 관세의 예외 품목으로 적용 (2025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관세 미부여 발표(2025. 4. 11.)
- ▶ 즉, 반도체 품목은 상호 관세(10%)와 별도 관세 모두 적용 제외(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적용 제외)
- (미국 투자 촉진기구 설립)⁵⁶⁾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 내에 투자 촉진기구(accelerator)를 설립⁵⁷⁾하여 정부 규제(투자 및 시설 구축)에 대한 절차를 현대화 하고, 미국 내 투자 적극 지원
- (주 정부의 에너지 규제 개선)⁵⁸⁾ 기후변화, ESG, 환경정의, 탄소세 및 탄소 관련 벌금 등의 에너지 관련 규제를 식별하고 불법 및 위헌적이라고 판단 되는 조치*에 대한 신속한 중단 지침 제시⁵⁹⁾
 - * 많은 주들의 기후 변화 및 에너지와 관련하여 이념 중심(ideologically motivated)의 정책 시행 또는 계획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과 경제-국가 안보에 위협(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되고 있음을 언급
- 비현실적인(impossible) 탄소 상한 규제와 과도한 탄소 거래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 에너지 생산 허가 심사 지연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

50) 백악관,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 Executive Orders," 2025. 4. 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further-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as-applied-to-low-value-imports/>, 검색일자: 2025. 4. 4.

51) 백악관, "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Executive Order," 2025. 4. 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amendment-to-reciprocal-tariffs-and-updated-duties-as-applied-to-low-value-imports-from-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4. 18.

52) 백악관,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 Executive Order," 2025. 4. 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modifying-reciprocal-tariff-rates-to-reflect-trading-partner-retaliation-and-alignment/>, 검색일자: 2025. 4. 18.

53) 백악관,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 Executive Order," 2025. 4. 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modifying-reciprocal-tariff-rates-to-reflect-trading-partner-retaliation-and-alignment/>, 검색일자: 2025. 4. 18.

54) 단, 중국은 84% → 125%로 추가 인상(2025. 4. 10.~)된 것임

55) 백악관,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 Presidential Memoranda," 2025. 4. 1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clarification-of-exceptions-under-executive-order-14257-of-april-2-2025-as-amended/>, 검색일자: 2025. 4. 18.

56) 백악관, "Establishing The United States Investment Accelerator," 2025. 3. 3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establishing-the-united-states-investment-accelerator/>, 검색일자: 2025. 4. 17.

57)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설치

58) 백악관, "Protecting American Energy From State Overreach - Executive Order," 2025. 4. 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protecting-american-energy-from-state-overreach/>, 검색일자: 2025. 4.

59) 법무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 제출 및 필요 조치를 권고해야 함

- (국가 재정 관리 통합)⁶⁰⁾ 사기(fraud), 낭비(waste), 남용(abuse)으로부터 국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지출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재정정보 통합 조치 등 제시
- 주요 조치로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재무부 중심의 사전 지급 검증 절차⁶¹⁾ 도입,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재무 시스템의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한 지침 발표, 지급 검증 강화(사회보장번호, 납세자 식별번호,⁶²⁾ 고용주 식별번호⁶³⁾ 등 충족)
-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로 베이스 규제 추진)⁶⁴⁾ 본 명령에서 포함된 기관*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당해 기관의 모든 규제에 일몰 규칙을 제정하도록 지침 제시
 - * 에너지부(DOE), 환경보호청(EPA),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등을 포함한 다수의 연방 기관 포함
- 202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모든 규제는 1년 후 자동 소멸이 되는 최초 일몰 규정을 설정하여야 함(기관별 DOGE 팀장 및 OMB 처장과 협의)

구분	정책 방향	주요 내용
표 10	트럼프 대통령 주요 정책 조치(2025.4.28. 기준)	
행정 명령	상호 관세	• 모든 무역 상대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2025. 4. 5.~)
메모 랜덤	상호 관세	• 상호 관세 예외(2025. 4. 5.부터 소급 적용) 품목(반도체로 분류되는 품목) 발표(2025. 4. 11.)
행정 명령	별도 관세	• 별도로 지정된 국가는 개별적인 관세율 적용(2025. 4. 9.~) 발표(2025. 4. 2.) → 이후 90일간(2025. 4. 10.~2025. 7. 9.) 유예 결정(2025. 4. 9.)
		• 중국에 대해서는 최종 125% 별도 관세 부과(2025. 4. 10.~)
	기타 중국 관세	• 소액 품목 면세 혜택 개정. 종가세와 정액 관세 중에서 부과(2025. 5. 2.~) - (종가세) 소액 품목 관세 120% 부과 - (정액 관세) 시기별로 구분하여 관세 부과 - 2025. 5. 2.~2025. 6. 1.전까지: 100달러 - 2025. 6. 1.~: 200달러
	미국 투자 촉진기구 설립	• 10억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외 미국 투자 신속히 유치 및 촉진
	에너지 규제 개선	• 불법/위험적이라고 판단되는 규제 신속히 중단
선언문	국가 재정 관리 통합	• 시스템 표준화 및 통합(재무부 통합 관리), 지급 시스템 검증 강화
	에너지 활성화	• 에너지 관련 규제에 일몰 규칙 제정(-2025. 9. 30.)
	자동차 부품 관세	• 모든 국가 자동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2025. 4. 3.~)

출처 백악관(<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구성

60) 백악관, "Protecting America's Bank Account Against Fraud, Waste, and Abuse - Executive Order 14249," 2025. 3. 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protecting-americas-bank-account-against-fraud-waste-and-abuse/>, 검색일자: 2025. 4. 16.

61) 사전 지급 관련 데이터를 재무부에 제공해야 함

62)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63)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64) 백악관, "Zero-Based Regulatory Budgeting To Unleash American Energy," 2025. 4. 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zerobased-regulatory-budgeting-to-unleash-american-energy/>, 검색일자: 2025. 4. 21.



일본

예산·결산 등

-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예산안 성립 발표(2025. 3. 31.)⁶⁵⁾
- 일본 재무성이 지난 1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115조 5,415억엔(일반회계,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규모의 정부안이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심의를 거친 후 3,437억엔이 감소한 115조 1,978억엔 규모의 국회 수정된 예산안이 성립
- 일본 국회에서 정부의 당초 예산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며, 참의원에서 예산을 수정한 것은 현행 헌법하에서 최초⁶⁶⁾

- 중의원에서 예산 수정은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⁶⁷⁾ 등 반영에 기인하였으며, 참의원에서 예산 수정은 고액 요양비 제도의 자기부담액 한도액 인상 유예 등을 반영한 것에 기인
- (세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고교 무상화 관련, 고액 요양비 관련, 지방교부세·교부금, 예비비에서 수정되었으며, 정부안 대비 총 3,437억엔 감소
- (고교 무상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소득 요건의 철폐에 따른 경비로 정부안 대비 1,064억엔 증가
- (고액 요양비)⁶⁸⁾ 중의원, 참의원에서 심의 후 정부안 대비 160억엔 증액

표 11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 정부안 수정 절차

날짜	절차	주요일정
2024. 12. 27.	정부안	정부안 각의 결정
2025. 1. 24.		정부안 국회 제출, 심의 개시 -제217회 국회에서의 재무장관의 재정 연설
2025. 2. 14.		각 부처의 정책별 예산 공표
2025. 3. 4.	국회수정	중의원(하원)에서의 예산 수정(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 등 반영) -중의원 가결, 참의원 승부
2025. 3. 31.		참의원(상원)에서의 예산 수정(고액 요양비 제도의 자기부담액 상한액 인상 유예 등 반영) -참의원 가결, 중의원 회부·동의
2025. 3. 31.	예산성립(확정)	국회 수정 후 예산성립 -2025년도 예산 및 재정 투융자 계획의 설명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fy2025.html

65)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yosan2025.html, 검색일자: 2025. 4. 22.

66) 일본 총리 관저, <https://www.kantei.go.jp/jp/103/statement/2025/0331kaiken.html>, 검색일자: 2025. 4. 22.

67)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교육 기회 평등을 확보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며 2010년부터 시행됨, 일본 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index.htm, 검색일자: 2025. 4. 22.

68) 고액 요양비 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청구에서 지불한 금액(입원시 식비, 차액침대비 등은 미포함)이 한달 동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연령과 소득에 따라 상이함,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高額療養費制度を利用される皆さまへ」, <https://www.mhlw.go.jp/content/000333279.pdf>, 검색일자: 2025. 4. 23.

- ▶ (중의원) 고액 요양비 지원이 연 4회 이상(다수회) 해당하는 경우 자기부담한도액을 재조정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라 55억엔 증가
- ▶ (참의원) 올해 8월에 예정되어 있던 정률 개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정 사항(자기부담한도액 단계적 인상 등)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05억엔 증가
- (지방교부세·교부금) 소득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정분이 감소하여 정부안 대비 2,056억엔 감소
- (예비비)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605억엔 감소⁶⁹⁾
- (세입)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수, 세외 수입, 공채금에서 수정되었으며, 정부안 대비 총 3,437억엔 감소
- (세수) 소득세 기초 공제 인상 및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안 대비 6,210억엔 감소
 - (세외 수입) 독립행정법인 납부금·기금 반환금 등으로 2,793억엔 증가
 - (참고) 기초 공제 등의 인상과 기초 공제 상향 특례⁷⁰⁾의 창설
 - (기초 공제 등 인상) 물가 상승 국면에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소득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이로 인해 과세 최저한도가 103만엔에서 최대 123만엔으로 인상
 - ▶ 기초 공제는 48만엔에서 58만엔으로 10만엔 인상
 - ▶ 급여 소득 공제의 최저보장액은 55만엔에서 65만엔으로 10만엔 인상(단, 급여 소득 190만엔 미만 한정)
 - (기초 공제 상향 특례) 저소득층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 최저한도를 160만엔⁷¹⁾으로 인상하고, 중소득층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조치는 2025~2026년까지 시행
 - ▶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2만엔~4만엔의 세금 부담 감소 예상(2025년 12월 기준)

표 12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 정부안에 대한 국회 수정 내역

(단위: 억엔)

세출		세입	
고교 무상화 관련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소득 요건의 사실상 철폐)	1,064	세수 (소득세 기초 공제 특례 창설)	-6,210
고액 요양비 관련 (전면적인 시행 연기)	160	세외 수입 (독립행정법인 납부금·기금 반환금 등) ¹⁾	2,793
지방교부세·교부금 (소득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정분 감소)	-2,056	공채금	-19
예비비	-2,605		
계	-3,437	계	-3,437

주 1) 예금보험기구나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의 납부금, 백신 생산 체계 등 긴급 정비 기금에서의 반환금 등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修正フレーム(衆議院修正+参議院修正)」, 2025. 3. 31.

69) 블룸버그, 「政府当初予算案が異例の國會修正、29年ぶり - 予備費削減で總額は減少」, 2025. 2. 28.,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5-02-28/SRZ6EET1UMOW00>, 검색일자: 2025. 4. 30.

70) 기초 공제 상향 특례 기준은 급여소득 ~200만엔 미만은 37만엔, 200~475만엔은 30만엔, 475~665만엔은 10만엔, 665~850만엔은 5만엔으로 급여 소득에 따라 추가 공제액이 상이, 일본 재무성, 「基礎控除等の引上げと基礎控除の上乗せ特例の創設」,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5/20250417syotoku.pdf, 검색일자: 2025. 4. 22.

71) 과세 최저한도 160만엔은 급여소득 ~190만엔 미만인 경우, 기초 공제 58만엔, 급여 소득 공제 65만엔, 기초 공제 상향 특례에 따른 추가 공제액 37만엔의 총합으로 계산

표 13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 개요(중의원·참의원 수정 후)

(단위: 억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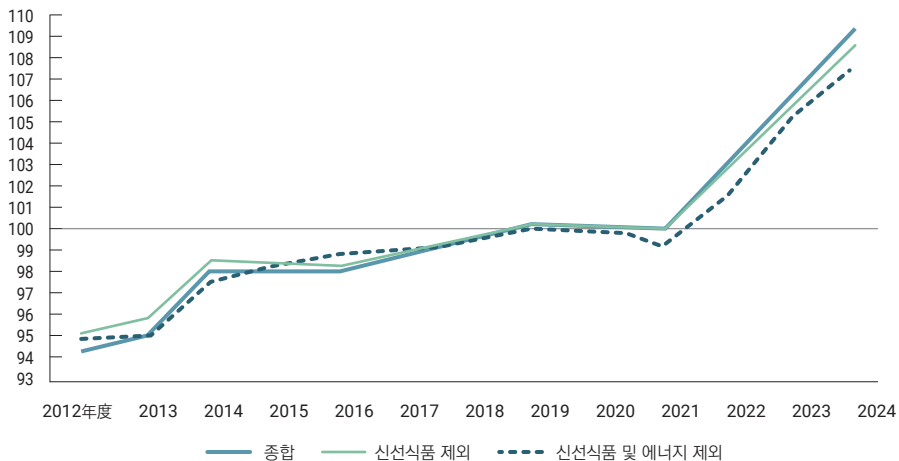
구분		2024회계연도 당초	2025회계연도 정부안(A)	2025회계연도 국회 수정(B)	증감액 (B-A)	증감률
세출	일반세출 ¹⁾	677,764	682,452	681,071	-1,381	-0.2
	사회보장관계비	377,193	382,778	382,938	160	0.0
	사회보장관계비 외	290,571	299,674	298,133	-1,541	-0.5
	방위력정비계획 ²⁾ 대상 경비	77,249	84,748	84,748	-	-
	일반 예비비	10,000	10,000	7,395	-2,605	-26.1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 ³⁾	10,000	-	-	-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77,863	190,784	188,728	-2,056	-1.1
국채비	270,090	282,179	282,179	-	-	
합계	1,125,717	1,155,415	1,151,978	-3,437	-0.3	
세입	세수	696,080	784,400	778,190	-6,210	-0.8
	기타 수입	75,147	84,525	87,318	2,793	3.3
	방위력강화분	21,261	26,659	26,659	-	-
	공채금	354,490	286,490	286,471	-19	-0.0
	건설공채	65,790	67,910	67,910	-	-
	특례공채	288,700	218,580	218,561	-19	-0.0
	합계	1,125,717	1,155,415	1,151,978	-3,437	-0.3

- 주 1)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2)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 출처: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 12. 16.
 3)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는 '원유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의 약칭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修正フレーム(衆議院修正+参議院修正)」, 2025. 3. 31.

그림 8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100)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년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5年(令和7年)3月分及び2024年度(令和6年度)平均」, p. 4, 그림 7, 2025. 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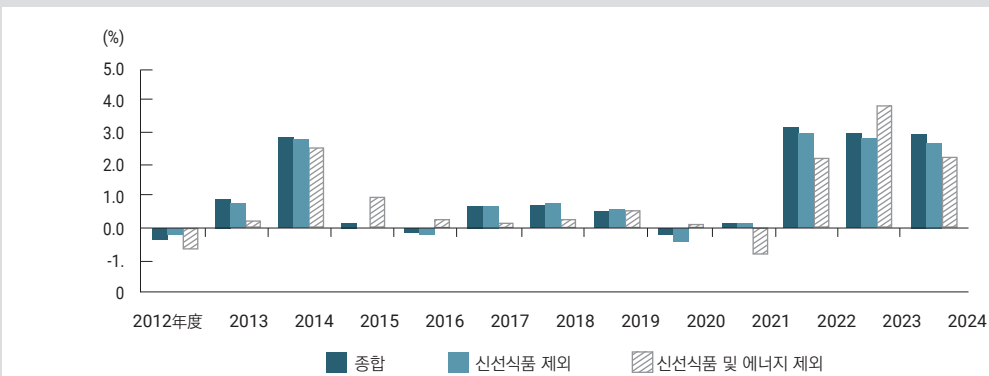
기타

- ◆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4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5. 4. 18.)⁷²⁾
- 2024회계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0% 상승한 109.5를 기록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로 전년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로 전년 대비 2.3% 상승

그림 9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대비)

(단위: %)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5年(令和7年)3月分及び2024年度(令和6年度)平均」, p. 4, 그림 8, 2025. 4. 18.

표 14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100, %)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종합	지수	94.4	95.2	98.0	98.2	98.2	98.9	99.6	100.1	99.9	100.0	103.2	106.3	109.5
	전년 대비 상승률(%)	-0.3	0.9	2.9	0.2	-0.1	0.7	0.7	0.5	-0.2	0.1	3.2	3.0	3.0
신선식품 제외	지수	95.0	95.8	98.5	98.5	98.2	98.9	99.7	100.3	99.9	99.9	103.0	105.9	108.7
	전년 대비 상승률(%)	-0.2	0.8	2.8	0.0	-0.2	0.7	0.8	0.6	-0.4	0.1	3.0	2.8	2.7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94.8	95.0	97.5	98.4	98.8	99.0	99.3	100.0	100.0	99.2	101.4	105.3	107.7
	전년 대비 상승률(%)	-0.5	0.2	2.6	1.0	0.3	0.2	0.3	0.6	0.1	-0.8	2.2	3.9	2.3

주 통계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지수의 기준 연도인 2020년은 역년 기준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5年(令和7年)3月分及び2024年度(令和6年度)平均」, p. 4, 표 7, 2025. 4. 8.

72)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5年(令和7年)3月分及び2024年度(令和6年度)平均」, <https://www.stat.go.jp/data/cpi/sokuhou/tsuki/pdf/zenkoku.pdf>, 검색일자: 2025. 4. 25.



독일

-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잠정치) 발표(2025. 4. 4.)⁷³⁾
- (재정수지) 독일의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대비 127억유로 증가한 1,044억유로(잠정치)
 - 각 부문별 재정적자는 연방정부 509억유로, 주정부 182억유로, 지방자치단체 248억유로, 사회보장 105억유로를 기록
- 연방정부의 적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부문의 적자는 전년 대비 확대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입 대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에서 적자를 기록
- (수입) 2024년 일반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 9,776억유로를 기록

표 15 독일의 일반정부 및 부문별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일반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일반정부 순용자(+), 순차입(-)					
2024년	-104.4	-50.9	-18.2	-24.8	-10.5
2023년	-91.7	-87.6	-0.1	-6.6	2.7
2022년	-127.3	-145.1	10.5	2.6	4.7
2021년	-133.2	-135.8	3.5	4.6	-5.5
수입					
2024년	1,977.6	569.0	544.1	376.1	864.1
2023년	1,852.5	526.2	529.2	349.4	820.7
2022년	1,748.3	463.8	532.9	328.4	809.0
2021년	1,629.3	424.7	510.8	308.0	774.2
지출					
2024년	2,082.1	620.0	562.4	400.9	874.6
2023년	1,944.2	613.9	529.3	356.0	878.0
2022년	1,875.4	608.9	522.3	325.8	804.4
2021년	1,762.4	560.5	507.2	303.4	779.7

- 주 1.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지출 및 수입은 각 정부 수준의 거래액이 중복된 수치(예, 연방정부 → 주정부 지출,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분배)
 2. 재정통계 범위내에서의 공공예산과 국민회계 상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2024년은 잠정치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Jahr 2024 bei 104,4 Milliarden Euro," press release, 2025. 4. 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131_711.html, 검색일자: 2025. 4. 14.

73)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Jahr 2024 bei 104,4 Milliarden Euro," press release, 2025. 4. 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131_711.html, 검색일자: 2025. 4. 14.

- 2024년 조세수입은 1조 6,567억유로로 2023년 대비 4.6% 증가
- (지출) 2024년 일반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조 821억유로이며 사상 처음으로 2조유로 이상을 기록
- 에너지 보조금의 종료로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지원금은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 및 군사 부문의 지출이 증가
- ▶ 전년 대비 시민수당(Bürgergeld)⁷⁴⁾ 33억유로 증가, 군 사특별기금 113억유로 증가
-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5년 봄 공동 경제전망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5) 발표 (2025. 4. 10.)⁷⁵⁾
 -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 Institut,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IfW Kie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RWI Essen)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 2회 공동 경제전망을 발표해 연방정부의 경제전망에 지침을 제공
 - (경제성장률)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 그룹의 2025년 봄 공동 경제전망에서는 독일의 GDP 성장률을 2025년 0.1%, 2026년 1.3%로 전망
 -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가을 전망 대비 0.7%p 하향 조정,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p 하향 조정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부정적 영향으로 전망치 하향 조정
- ▶ 미국의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는 2025~202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0.1%p씩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월에 발표한 추가 관세 반영 시 0.2%p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⁷⁶⁾
-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5년 2.2%에서 2026년 2.1%로 하락할 전망
- 물가는 완만하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관세 정책과 독일의 재정 확대는 중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노동시장)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 유지
- 실업률은 2024년 6.0%에서 2025년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경제회복 시까지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5년 2.6%, 2026년 3.2%로 확대될 전망
- 2025년부터 국방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인 구조적 재정적자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독일의 경상수지는 2025년 3.6%, 2026년 3.0%로 다소 낮은 수준에서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및 기계류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74) 독일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복지 제도로, 실직자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자율적 직업훈련을 지원

75) Die Projektgruppe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5, 2025. 4. 10.,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5/04/IfW_Kiel_GD_1_2025_RZ4_korrigiert_web.pdf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5: Geopolitischer Umbruch verschärft Krise – Strukturreformen noch dringlicher," 보도 자료, 2025. 4. 10.,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5/04/10/gemeinschaftsdiagnose-fruehjahr-2025-geopolitischer-umbruch-verschaerft-krisestrukturreformen-noch-dringlicher/>, 검색일자: 2025. 4. 16.

76) 4월 5일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를 적용하고, 4월 9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약 60개국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 부과(EU는 20% 관세 부과)를 시행하였으나 90일간의 유예 조치로 현재 10%를 적용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가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위험요인)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독일의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장기적인 물가 상승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
- 에너지 위기 이후 에너지집약 산업의 구조적 쇠퇴, 노동력의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을 구조적 문제로 언급
- (정책 제언) 구조개혁, 노동력 공급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혁,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화, 유럽 차원의 국방 및 투자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 독일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U 중기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APR) 2025⁷⁷⁾ 발표(2025. 4. 24.)⁷⁸⁾

* 유럽연합(EU)은 유럽재정프레임워크를 준수하기 위해 수립하는 3~5년 기간의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 Strategy)에 따라 회원국에게 재정계획(Fiscal Structural Plan, FSP)과 FSP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연례 추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매년 4~5월에 제출

** 독일은 2025년 2월 조기 총선 실시로 2024년 FSP 제출이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례 추진 보고서에서 순지출경로가 미설정

- (경제전망) 독일 경제는 고령화와 노동력 및 생산성 감소, 지나친 규제 및 행정절차 등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2025년에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GDP 성장률) 독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4년 -0.2%에서 2025년 0.3%로 전망
- ▶ 경제 성장의 정체는 단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 과도한 규제 및 행정절차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 (노동시장) 독일의 실업률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EU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고용시장의 강세는 대부분 이민정책의 개선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기인

표 16 2025년 봄 공동 경제전망(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GDP성장률	1.4	-0.3	-0.2	0.1	1.3
취업자수(천명)	45,675	46,011	46,082	46,019	46,046
실업률	5.3	5.7	6.0	6.3	6.2
소비자물가상승률	6.9	5.9	2.2	2.2	2.1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84.9	-103.8	-118.8	-113.5	-144.2
(GDP 대비 %)	-2.12	-2.5	-2.8	-2.6	-3.2
경상수지(십억유로)	152.0	232.8	246.7	157.8	133.7
(GDP 대비 %)	3.8	5.6	5.8	3.6	3.0

주 2025, 2026년 전망치

출처 Gemeinschaftsdiagnose, "PRESSEMITTEILUNG DER GEMEINSCHAFTSDIAGNOSE 1/2025," 보도자료, 2025. 4. 10.,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5/04/iwh-press-release_2025-13_Gemeinschaftsdiagnose_1-25_de.pdf

77) 2024년 7월 발표한 「2025년 연방예산안」과 2025년 1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3월 새로운 헌법개정에 따른 재정의 영향은 미반영

78) 독일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Deutscher Fortschrittsbericht 2025, 2025. 4.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r-fortschrittsbericht-2025.pdf?__blob=publicationFile&v=9

- ▶ 특히, 2023년 이후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전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의해 뒷받침됨
- (소비 및 투자) 물가상승률 완화에도 소비회복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투자 역시 약화
- (재정전망) 독일은 공공투자 및 국방비 확대를 통해 경제를 지원하면서 EU의 규정을 준수하고 재정적자 및 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
- (재정적자) 2024년 GDP 대비 -2.8%에서 2025년 -2.5% 소폭 개선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4년 -1.9%에서 2025년 -1.5%로 개선될 전망
- (채무) 2024년 62.5%에서 62.75%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연방예산) 연방정부의 지출은 2024년 4,742억유로에서 2025년 4,886억유로로 예상되며, 공공투자 및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
- (투자) 연방정부 지출 대비 투자 비율은 2024년 12%에서 2025년 16.6%까지 증가할 전망
- (순차입금) 2024년 333억유로에서 2025년 535억유로로 증가할 전망
- (특별회계 및 기금) 국방 및 인프라 추가 투자를 위해 12년간 집행하는 약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
- (순지출 증가율)⁷⁹⁾ 2024년 3.8%에서 2025년 2.5%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EU 재정규율에서 독일에 요구하는 순지출 증가율 2~3% 기준에 부합
- (권고사항) 유럽연합 이사회는 독일에 2024~2025년 동안 재정 건전성 강화, 투자 촉진, 연금 개혁, 조세체계 개선,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권고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순지출 증가율 제한, 공공·민간투자 확대, 연금 재정구조 개편, 노동 인센티브 강화, 행정의 디지털화 및 인프라 현대화 등을 추진할 계획

표 17 독일 주요 경제 및 재정지표

(단위: %, GDP 대비 %, 십억유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	-0.3	-0.2	0.3
물가상승률(HVPI)	6.0	2.5	-
실업률	2.8	3.2	3.3
연방지출	457.1	474.2	488.6
순차입금	27.2	33.3	51.3
투자	56.5	58.0	81.1
재정수지	-2.5	-2.8	-2.5
구조적 재정수지	-2.0	-1.9	-1.5
국가 채무	62.9	62.5	62.75

- 주 1. 국가채무는 마스트리히트 기준
- 2. HVPI (Harmonisierter Verbraucherpreisindex)는 유럽연합기준의 통일된 소비자 물가지수
- 3. ILO 기준 실업률(적극적 구직자 기준)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및 연방경제기후보호부, Deutscher Fortschrittsbericht 2025, 2025. 4., Tabelle1, Tabelle3, Tabelle5, p. 12, p. 14, pp. 32~33

79) 순지출은 일회성 수입,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정부지출로 채무의 지속가능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을 통해 각 회원국에 요구되는 최대 허용 순지출 증가율을 설정

-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5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5. 4. 24.)⁸⁰⁾
- (개요) 독일의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4월 24일, '2025년 봄 경제전망'을 발표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세수 추계, 예산 편성 관련 거시경제 지표 기준, EU 제출 보고서 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전망을 발표
- (경제전망) 2025년 독일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적 제약 요인과 에너지 가격 상승, 투자 부진, 노동력 공급 제약 등 대내적 구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체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
 - (GDP)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0.0%로 1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 1.0%로 점차 개선될 전망

- ▶ 2025년 1분기에 GDP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수출 부진 및 글로벌 교역 둔화로 연간 성장세는 약화될 전망
- ▶ 2026년부터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EU 중심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 실질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소비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는 공공 인프라와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
-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2.0%에서 2026년에 1.9%까지 소폭 하락할 전망
- ▶ 물가안정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소비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5년 말 정점을 찍은 후 2026년 경제회복 및 공공투자의 효과와 함께 서서히 개선될 전망

표 18 독일의 2025년 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4	2025*	2026*
실질 GDP 성장률	-0.2	0.0	1.0
가계최종소비	0.3	0.2	0.8
정부최종소비	3.5	2.1	1.4
총고정자본형성	-2.7	0.4	3.2
설비	-5.5	0.7	3.8
건설	-3.3	-0.4	2.4
기타	3.9	2.4	4.3
내수	0.3	1.6	1.4
수출 증가율	-1.1	-2.2	1.3
수입 증가율	0.2	1.8	2.1
실업률(연방 고용청 기준)	6.0	6.3	6.2
고용	0.2	-0.2	0.1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0	1.9

주 모든 수치는 실질 기준이며, 2025-2026년은 전망치

출처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Frühjahrsprojektion 2025," 2025. 4. 24.,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E/eckwerte-fruehjahrsprojektion-2025.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5. 5. 2.

80)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Binnenwirtschaftliche Stabilisierung, außen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 Frühjahrsprojektion der Bundesregierung," 2025. 4. 24.,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20250424-fruehjahrsprojektion.html>, 검색일자: 2025. 5. 2.



프랑스

예산·결산 등

- ◆ 프랑스 총리, 예산안 집행 및 편성 관련 제1회 비상 사태 대책 위원회(premier comité d'alerte) 소집 (2025. 4. 15.)⁸¹⁾
- (배경)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신임 당시 2025년 예산 채택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행위로 간주 및 우선 정책 과제로 밝힌 바 있으며,⁸²⁾ 해당 기조의 일환으로 비상사태 대책 위원회를 소집
- (주요 내용) 공공 재정 현황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과 2025년 예산 운용 및 2026년 예산 편성의 4가지 원칙을 제시
- (공공 재정 현황) 지난 20년간 GDP 대비 세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가적 위기마다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세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여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
 - ▶ 프랑스 국민 1인당 공공채무(Dette publique)는 5만유로에 상응하며,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는 2025년에 620억유로에 상응할 것으로 추정
 - ▶ 생산과 소비 측면을 볼 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음을 언급하며 생산력 강화와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

- (정책 방향) 총리가 제시한 프랑스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 혁신 투자, 재산업화(réindustrialisation) 강화 등 국가 생산력 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 ▶ GDP의 3% 이하로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현 재정 목표를 유지하여 공공 재정의 통제력 회복
 - ▶ 사회보장 재정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대 간 소통으로 개혁 추진
 - ▶ 고용 유연화, 근로 조건 개선, 기술력 강화 등을 추진하여 “모두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회” 수립
- (예산 운용 및 편성) 프랑스 2025년 예산 운용 및 2026년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총리는 다음 4가지를 제시
 - ▶ 운영 지출(dépenses de fonctionnement)의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음
 - ▶ 단발성 지출이 아닌 효과적인 재정 계획 수립 및 목표 실천
 - ▶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함
 - ▶ 공공 재정 긴축에 돌입하여 감당 불가능한 규모의 재정 지출 종식

81) 프랑스 정부 포털, “Finances publiques : la vérité pour agir,” 2025. 4. 16., <https://www.info.gouv.fr/actualite/finances-publiques-la-verite-pour-agir>, 검색 일자: 2025. 4. 17.

82) 바이루 총리 신임 당시 개혁 및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5), 2025년 1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5. 2. 10., p. 39,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67>

◆ 프랑스 경제재정부, 2024년 회계 결산 및 관리 결과에 관한 법안(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PLRG 2024) 발표(2025. 4. 16.)⁸³⁾⁸⁴⁾

* 프랑스는 재무 결과를 정리하는 법안을 발표하여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준수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며, 2021년 공공재정 현대화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에 따라 결산법안(projet de loi de règlement, PLR)의 명칭이 회계 결산 및 관리 결과에 관한 법안(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PLRG)로 변경된 바 있음⁸⁵⁾

- 프랑스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3년 0.9%에서 2024년 1.1%로 증가
 - 2024년 잠재성장률 1.2% 및 중기재정법(LPFP) 전망치 1.35%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 및 국제 경제 여건 악화가 초래한 수출 부진에 기인
- 2024년 중앙정부 총 재정수지 적자는 1,560억유로로 2023년 결산법 대비 170억유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예산법 초기 전망 대비 90억유로 증가
 - 순조세수입⁸⁶⁾은 3,257억유로로 예산법 전망 대비 228억유로 감소하여 세수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재정적자 발생에 크게 기여

- ▶ 법인세(146억유로), 소득세(54억유로), 부가가치세(40억유로)영역에서 예산법 전망 대비 세수 감소
 - 2024년 재정지출은 4,847억유로로 2023년 결산법 대비 44억유로 및 예산법 전망 대비 72억유로 감소
- ▶ 2월에 정부가 100억유로의 세출을 취소한 데 이어, 7월에는 세출 동결과 함께 각 부처에 대한 지출 상한선이 발표
- ▶ 예산 말기 지출 관리의 강화와 재정준비금(reserve de précaution)⁸⁷⁾의 신중한 사용이 지출 감소에 크게 기여하여 일반 예산(budget général) 지출은 예산법 전망 대비 34억유로 감소
 - 2024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당초 전망치(2023-2027 중기계획)보다 1.4%p 높은 5.8%를 기록
 -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113.0%로 2023년 109.8% 대비 증가⁸⁸⁾
-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의견)⁸⁹⁾ 기존 예측(2024년 예산법) 대비 재정적자 악화는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관련 세수 오차에 기인하며, 지출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출 통제는 성공적으로 평가되나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에서 지출이 예산을 초과

83)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2025. 4. 16.,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dossiers/Projetdeloirelatifauxresultatsdelagestionetportantapprobationdescomptesdelannee2024>, 검색일자: 2025. 4. 28.

84)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2025. 4. 17., <https://www.vie-publique.fr/fiches/21866-quest-ce-quune-loi-de-reglement>, 검색일자: 2025. 5. 7.

85)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Qu'est-ce qu'une loi relative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 2024. 7. 31., <https://www.vie-publique.fr/fiches/21866-quest-ce-quune-loi-de-reglement>, 검색일자: 2025. 5. 7.

86) 순조세수입은 총세입에서 세금 환급 및 감면 등을 차감한 나머지로 정의됨 (출처: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lesrecettes-fiscales>)

87) 재정준비금(reserve de precaution)은 예산 집행 초기에 예산의 일정 비율을 동결하여, 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제도 (출처: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les-principaux-outils-pilotage>)

88) 프랑스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는 다음과 같음. 2020년 114.9%, 2021년 113.1%, 2022년 111.4%, 2023년 109.8% (출처: 프랑스 통계청,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542247>)

89)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2025. 4. 16.,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5-2-projet-de-loi-relatif-aux-resultats-de-la-gestion-2024>, 검색일자: 2025. 4. 21.

- 세수 오차는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낙관적 가정을 채택한 사유에 크게 기인

기타

- ◆ 프랑스 통계청(INSEE), 2024년 프랑스 일반정부 국민계정 발표(2025. 3. 27.)⁹⁰⁾
 - 2024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조 6,702억유로이고,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3년 56.9%에서 2024년 57.1%로 증가
 - 사회보장수당 및 의료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수당의 지출 증가분은 전체 공공지출 증가의 60%에 상응

-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74억유로가 증가하여 GDP 대비 2.0% 기록
-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0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4년 반등하였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55.2%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2024년 재정수입은 1조 5,006억유로로 전년 대비 3.1% 증가
 - 경제활동 둔화로 인해 2023년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다시 가속화되어 2024년 재정수입 반등
 -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3년 51.5%에서 2023년 51.3%으로 감소

표 19 프랑스 2024년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일반정부(Ensemble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5.4	-5.3
중앙정부(État)	-5.4	-5.2
중앙행정기관(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0.1	-0.1
지방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0.3	-0.6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0.4	0.0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p. 11, 2025. 4. 16.

표 20 프랑스 중앙정부 2024년 결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3 결산법(A)	2024 예산법(B)	2024 예산 종료법(C)	2024 결산(D)	D-A	D-B	D-C
재정지출(Dépenses BG + PSR)	516.2	512.5	505.7	502.8	-13.4	-9.7	-2.9
순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322.9	348.5	323.3	325.7	2.8	-22.8	2.4
기타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65.5	66.9	65.8	67.5	2.0	0.7	1.1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5.1	22.7	23.7	23.2	-1.9	0.5	-0.5
특별회계(Solde comptes spéciaux)	-5.1	-5.7	-3.9	-2.3	2.8	3.4	1.6
부속예산(Solde budget annexes)	0.3	0.2	0.2	0.4	0.1	0.2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173.0	-146.9	-162.4	-155.9	17.0	-9.0	6.5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4, p. 11, 2025. 4. 16.

90) 프랑스 통계청, "In 2024, the public deficit reached 5.8 % of GDP, the public debt 113.0 % of GDP," 2025. 3. 27.,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542247>, 검색일자: 2025. 4. 1.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1,696억유로에 상응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 4.7%, 2023년 5.4%에 이어 2024년 5.8%로 지속적으로 상승
- 2024년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채무는 113.0%로 전년 대비 3.2%p 증가

표 21 프랑스 일반정부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8.9	-6.6	-4.7	-5.4	-5.8
재정지출(Dépenses publiques)	61.7	59.5	58.4	56.9	57.1
재정수입(Recettes publiques)	52.8	53.0	53.7	51.5	51.3
일반정부 총채무(Dette publique(brute))	114.9	113.0	111.4	109.8	113.0
일반정부 순채무(Dette publique nette) ¹⁾	101.6	100.8	101.1	101.6	104.7
조세부담률(Prélèvements obligatoires) ²⁾	44.3	44.2	45.0	43.2	42.8

- 주 1. 순채무는 총채무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금액
 2.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괄하는 과세 부담

출처 프랑스 통계청, "In 2024, the public deficit reached 5.8 % of GDP, the public debt 113.0 % of GDP," 2025. 3. 27.

표 22 프랑스 일반정부의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항목별 내용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재정지출(Total des dépenses)	1,607.4	1,670.2	3.9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519.5	539.3	3.8
-중간 소비(dont conso. intermédiaires)	159.9	163.4	2.2
-인건비(dont rémunérations)	346.3	362.1	4.6
채무비용(Intérêts)	50.5	58.0	14.6
사회보장수당(Prestations sociales)	708.5	747.3	2.2
이전지출과 보조금(Autres transferts et subventions)	206.0	194.1	-5.8
비금융자산 취득(Acquisition nette d'actifs non financiers)	122.7	131.2	6.9
재정수입(Total des recettes)	1,455.7	1,500.6	3.1
판매 및 기타 수입(Ventes et autres recettes)	120.8	126.2	4.5
부동산수입(Revenus de la propriété)	19.5	21.4	9.6
조세수입(Impôts)	825.1	841.2	2.0
-재산세(dont impôts courants sur le revenu et le patrimoine)	357.1	366.0	2.5
-제품생산세(dont impôts sur les produits et la production)	446.6	453.7	1.6
사회보장부담금(Cotisations sociales effectives)	413.5	431.1	4.3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미회수예상액(Impôts et cotisations sociales susceptibles de ne pas être recouverts)	-4.4	-4.6	4.5
기타 수입(Autres recettes)	81.2	85.4	5.1
총재정수지(Besoin de financement)	-151.7	-169.6	-

출처 프랑스 통계청, "In 2024, the public deficit reached 5.8 % of GDP, the public debt 113.0 % of GDP," 2025. 3. 27.

◆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하 재무총국, EU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 발표(2025. 4. 16.)⁹¹⁾

* 2024년 4월에 승인된 유럽연합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준칙 개정안에 따라 회원국들은 4년 중기재정계획(plan budgétaire et structurel à moyen terme, PSMT)을 수립하고, 매년 4월 30일 전에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에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

- (경제) 프랑스 경제는 2024년에 1.1% 성장했으며, 2025년은 0.7% 성장할 전망
- (성장률) 2024년의 성장에 민간 부문의 내수 진작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국제 정세 악화를 고려하여 2025년 경제 성장률을 당해 예산법 초기 전망 대비 하향 조정(0.2%p)
- (물가)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물가상승률은 2.0%로 크게 둔화되었고, 2025년의 경우 추가 하락한 1.4%로 전망
- (고용) 중기재정계획 대비 2024년 총고용은 연평균 22.5만명 증가하여 전망 수준(20만명)을 상회하였으나 평균임금은 2.6% 상승하여 전망 수준인 2.8%를 하회
- (재정) 재정적자는 2024년 GDP 대비 5.8%로 악화되었으며, 2025년은 당해 예산법의 500억유로 규모의 긴축 조치가 기여하여 전년 대비 개선된 5.4%로 전망
- (세입) 자연 세수 증가율의 경우 2024년은 0.1%로 저조하였고 2025년은 명목 GDP 성장률(2.2%)보다

낮은 2.1%로 전망되어 지속적으로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작용

- (지출) 2024년 순기초지출(dépense primaire nette)⁹²⁾ 증가율은 3.3%, 2025년 전망은 0.9%로 유럽연합 권고 기준을 준수
- (투자 및 개혁 방향) 프랑스 정부는 중기 계획에 따라 투자 계획과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와 개혁은 EU로부터 중기재정계획의 조정 기간 연장을 허용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
-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다음 5가지 우선순위에 바탕을 두고 있음
 - ▶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공 지출의 효율성 보장
 - ▶ 기술 향상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 지원 및 일자리 가치 향상
 - ▶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단순화(simplifier) 및 강화
 - ▶ 재산업화, 혁신 및 생산 촉진 정책의 지속
 - ▶ 생태 및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EU 중기재정계획의 연례 추진 보고서에 대한 의견 발표 (2025. 4. 16.)⁹³⁾

※ 연례 추진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과거 및 현재 연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는 향후 기간 재정 및 경제 전망에 대한 평가는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이 의견서 서두에 적시됨

- (경제 전망 평가) 2025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기존 전망(2025 예산법) 0.9% 대비 0.2%p

91) 프랑스 재무경제부 산하 재무총국(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Publication du Rapport d'avancement annuel 2025," 2025. 4. 16.,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5/04/16/publication-du-rapport-d-avancement-annuel-2025>, 검색일자: 2025. 4. 28.

92) 순기초지출이란 재정적 세입 조치, 이자 지출, 경기 순환적 실업 지출, EU 자금으로 일부 및 전액 지원되는 프로그램 지출을 고려하여 정부의 직접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세입 및 지출 변동을 제거한 재정지출을 의미하며 유럽연합에 제출하는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지표임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conomic-governance-framework>)

93)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 rapport d'avancement annuel 2025 du plan budgétaire et structurel à moyen terme 2025-2029," 2025. 4. 16.,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5-3-rapport-d-avancement-annuel-2025>, 검색일자: 2025. 4. 18.

하향 조정하여 0.7%로 전망하였으며, 경제학계 예상(0.6%)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물가) 2025년 물가상승률 1.4% 전망은 최근 유가 하락 및 유로화 강세 추이를 고려할 시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
- (고용) 정부는 비농업 민간 부문 임금 지급 총액(*prévision de masse salariale dans les branches marchandes non agricoles*) 증가율을 1.9%,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증가율을 2.4%로 전망하였으나 다소 낙관적인 수치로 보임
- (재정 전망 평가) 2025년 재정적자 전망은 2024년보다 개선되어 GDP 대비 5.4%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강력한 지출 통제와 지방정부 지출 둔화를 전제함을 주의

- (세입) 자연적 세수 증가율 2.1% 및 세입 증가율 3.8% 전망이 기반하는 경제 전망이 낙관적임에 따라 세입 전망도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
- (재정지출) 2025년 순기초지출 증가율 전망은 0.9%이며, 해당 전망이 중기재정계획에서 계획한 상한선(0.8%)를 초과한 수치임을 지적하고 연간 증가 한도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
- (향후 중기재정계획 평가) 2025년 이후 프랑스 정부의 재정전략은 구체성과 신뢰성이 부족
-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시나리오는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고,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 절감 조치와 정책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거나 신뢰성이 부족



영국

- ◆ 영국 재무부, 「봄 성명서 2025」(Spring Statement 2025) 발표(2025. 3. 26.)⁹⁴⁾
- (배경) 영국은 예산안(Budget) 외에 성명서(Statement)를 통해 경제-재정 전망을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새로운 조세-지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
- (경제 전망) 2025년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2026년부터는 통화정책 완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 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1.0%로, 지난 10월 전망(2.0%)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이후 2030년대까지 평균 1.7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2025년 성장을 하락의 원인은 약 3분의 1이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 요인, 나머지 3분의 2는 금리 상승 기대, 에너지 가격 상승,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경기적·일시적 요인으로 분석

94)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5," 2025. 3. 26.,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pring-statement-2025>, 검색일자: 2025. 4. 14.

- ▶ 2026년 GDP 성장률은 통화정책 완화, 에너지 가격 하락, 경제 유희자원 활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로 반등하고, 이후 1.7~1.8%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10월 전망 대비 0.6%p 높은 수치로, 국제 유가 변동성과 가스·전기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
- ▶ 2026년 이후 에너지 가격 하락, 식품 가격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0%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5년 4.5%(158만명)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에는 4.1%(150만명)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⁹⁵⁾
- ▶ 고용률은 2024년 하반기 60.5%에서 2029년 60.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동 참여율 감소에 기인
- (재정 전망) 지난 10월 가을 예산안 발표 이후 재정 전망이 악화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조정을 통해 순차입 증가 규모가 감소하고, 채무 수준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순차입) 순차입은 2025-26회계연도 GDP 대비 3.9%(1,177억파운드)에서 2029-30회계연도 2.1%(740억파운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이는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121억파운드, 35억파운드 증가한 수치
- ▶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전, 2029-30회계연도 순차입은 지난 10월 전망 대비 131억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개혁(48억파운드), 세제 변경(22억파운드) 등의 조치를 통해 증가폭을 97억파운드 축소
- (순채무) 순채무는 2025-26회계연도 GDP 대비 95.1%(2조 8,972억파운드)에서 2029-30회계연도 96.1%(3조 3,913억파운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중앙은행을 제외한 순채무는 2029-30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30년 말에는 순채무와 거의 일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간 펀딩 프로그램⁹⁶⁾과 자산 매입 프로그램(APF) 종료에 기인
- (주요 정책) 국방 예산 확대, 주요 개혁 추진,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
- (국방 예산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테러 위협 증가, 급격한 기술 변화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2025-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지난 10월 대비 22억파운드 증액

표 23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실질 GDP 성장률	0.9	1.0	1.9	1.8	1.7	1.8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5	3.2	2.1	2.0	2.0	2.0
실업률	4.3	4.5	4.3	4.2	4.1	4.1
고용자 수	33.6	34.0	34.2	34.4	34.6	34.8

출처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5, 2025. 3., p. 10, Table 1.1

95) 실업률과 실업자 수 데이터를 이용해 역산한 결과, 영국의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는 2025년 3,554만명, 2028년 3,608만명으로 산출

96) Term Funding Scheme(TFS): 2016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표 24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¹⁾	1,098.6	1,141.2	1,229.5	1,292.3	1,350.7	1,394.0	1,445.0
(GDP 대비 %)(a)	39.9	39.7	41.1	41.7	41.9	41.7	41.7
총관리지출(TME) ¹⁾	1,229.9	1,278.6	1,347.2	1,389.5	1,430.8	1,471.4	1,519.0
(GDP 대비 %)(b)	44.7	44.4	45.0	44.8	44.4	44.1	43.9
공공부문 경상지출(c)	39.7	39.4	39.8	39.6	39.3	39.1	39.0
공공부문 순투자(d)	2.6	2.7	2.7	2.7	2.7	2.5	2.4
감가상각(e)	2.4	2.4	2.5	2.5	2.5	2.4	2.4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4.8	4.8	3.9	3.1	2.5	2.3	2.1
경기조정 순차입	5.0	4.6	3.6	3.0	2.5	2.3	2.1
경상예산 적자(c+e-a)	2.2	2.1	1.2	0.4	-0.2	-0.2	-0.3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²⁾	87.0	89.9	92.0	93.4	94.2	94.8	95.0
공공부문 순채무 ²⁾	95.5	95.9	95.1	95.8	96.1	96.3	96.1

주 1) 단위는 십억파운드
2) 3월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산화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3*, 2023. 11., Table A.5, Table A.9 발췌

- ▶ 2025-26회계연도에 증액된 예산은 NATO 동맹국과의 합동 훈련 강화, 지향성 에너지 무기⁹⁷⁾ 등 첨단 군사 기술 개발 등에 투자되어, 현대적이고 회복력 있는 군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요 개혁 추진) 조세 격차 해소, 복지 개혁, 행정 효율화 및 공공부문 개혁 등을 추진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
- ▶ (조세 격차 해소) 지난 가을에 이어 조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2029-30회계연도까지 연간 10억파운드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

* 자동화된 세금 채무 회수 시스템 도입, 세금 조사 인력(compliance staff) 500명 추가 채용 등

- ▶ (고용 촉진을 위한 복지 개혁) 복지 시스템을 근로 친화적이면서 재정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여, 2029-30회계연도 복지지출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48억파운드 절감

* 2026-27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고용, 건강 및 기술 지원에 투자, 통합급여 내 급여수준 조정을 통한 근로 유인 강화, 개인자립수당⁹⁸⁾ 평가 방식의 근본적 검토 및 수급 기준 강화 등

97) directed energy weapon: 전자기파 또는 입자 빔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출력을 생성하여 이를 표적에 발사함으로써 표적을 파괴 혹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무기체계

98)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PIP):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건강 상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①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장애가 있을 것, ② 해당 건강 상태로 인해 특정한 일상 활동 수행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 ▶ (공공부문 개혁) 공공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2억 5천만파운드 규모의 전환 기금(Transformation Fund)을 조성
- (경제 활성화 정책)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안정성 회복, 투자 확대, 경제 개혁을 통해 영국 전역의 번영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
- ▶ (투자 촉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인프라, 주택, 국방 혁신 등의 분야에 지난 10월 대비 130억파운드를 추가로 투자
- ▶ (건설 부문 활성화) 주택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건설 인력 양성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
- ◆ 영국 내각부, 준정부기관(ALBs) 존속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 발표(2025. 4. 7.)⁹⁹⁾
 - (현황) 준정부기관은 내각부(Cabinet Office)에 의해 행정적으로 분류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22-23 회계연도 기준 총 304개가 존재
 - 기관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중앙정부 부처 소속이지만, 특정 기능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실행 중심 조직(ex. 운전면허청, 교정보호관찰청, 기상청 등)
 - 비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정부의 전략적 틀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자문·집행·규제 등의 기능을 수행(ex. 영국문화원, 환경청, 보건·안전청 등)
 - 비장관 부처(Non-Ministerial Department): 장관 없이 운영되는 독립적 정부 부처로,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며 고유 예산과 회계를 가짐(ex. 식품기준청, 국세청, 전력·가스규제청 등)
 - (주요 내용) 준정부기관의 존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부 조직 내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복과 관료주의를 줄여 납세자 부담 및 정부 운영 비용을 절감할 계획
 - 모든 준정부기관은 존속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별도의 존속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개편(통폐합 또는 해당 부처로의 기능 이관·환원)의 대상이 되어 재검토를 받게 됨
 - ▶ 다만, 정부를 감시하거나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등 장관급 결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인 경우, 해당 기관은 개편 대상에서 제외
 - 재검토 이후에도 존속하는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내각부 차관(Cabinet Secretary), 각 부처 차관(Secretary of State)과 사무 차관(Permanent Secretary)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

99) Cabinet Office, "Public bodies," Guidance, 2025. 1. 7., <https://www.gov.uk/guidance/public-bodies-reform>, 검색일자: 2025. 4. 15.; ____, "Guidance on the undertaking of Reviews of Public Bodies," Guidance, 2024. 4. 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bodies-review-programme/guidance-on-the-undertaking-of-reviews-of-public-bodies>, 검색일자: 2025. 4. 30.; ____, "Hundreds of quangos to be examined for potential closure as Government takes back control," Press release, 2025. 4.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hundreds-of-quangos-to-be-examined-for-potential-closure-as-government-takes-back-control>, 검색일자: 2025. 4. 15.;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World's largest quango scrapped under reforms to put patients first," Press release, 2025. 3.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lds-largest-quango-scrapped-underreforms-to-put-patients-first?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4. 16.



호주

◆ 호주 재무부, 선거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발표(2025. 4. 7.)¹⁰⁰⁾

※ 예산공정법(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제22조 등에 따라 호주 정부는 선거 공고 후 10일 내에 '선거 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여 현 회계연도 및 향후 4년간의 경제 및 재정전망을 제공

- (경제전망) 호주 경제는 2025-26회계연도에 2.25% 성장할 전망이며, 이는 지난달 발표된 2025-26 예산안 전망치와 동일¹⁰¹⁾
- (재정전망) 2024-25회계연도 현금수지는 276억 호주달러(GDP 대비 -1.0%), 2025-26 회계연도에는 421억 호주달러(GDP 대비 -1.5%)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2025-26회계연도 예산안 전망치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음

- 예산안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 반영으로 2025-26 회계연도에 2억 2,600만 호주달러, 5년간 11억 호주달러의 지출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매개변수 및 기타 변동요인에서 지출 증가 대부분을 상쇄함에 따라 현금수지는 기존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총채무와 순채무 또한 기존 발표된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9년 6월 말 기준 총채무는 GDP 대비 36.8%, 순채무는 23.1%로 예상
- (중기 재정전망) 중기 전망은 2025-26 예산안과 동일하며 현금수지는 2035-36회계연도에 균형에 이를 것으로 예상
- GDP 대비 총수입은 2025-26회계연도에 25.5%에서 2035-36회계연도에 26.8%로 증가, 총지출은 2025-26회계연도에 27.0%에서 2035-36회계연도에 26.8%로 소폭 하락 전망

표 25 2025-26 Budget 주요 경제 변수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실질GDP성장률	1.4	1.5	2.25	2.5	2.75	2.75
고용성장률	2.2	2.75	1	1.25	1.5	1.5
실업률	4.0	4.25	4.25	4.25	4.25	4.25
소비자물가지수	3.8	2.5	3	2.5	2.5	2.5
임금물가지수	4.1	3	3.25	3.25	3.5	3.75
명목GDP성장률	4.1	4.25	3.25	4	5.25	5.5

주 실질GDP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출처 호주 재무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p. 4, Table 2, 2025. 4. 7.

100) 호주 재무부 홈페이지,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EFO2025>, 검색일자: 2025. 4. 8.

101) 2025-26회계연도 예산안 자료는 「KIPF 2025년 3월 재정동향」을 참고

표 26 2025-26 Budget 주요 재정 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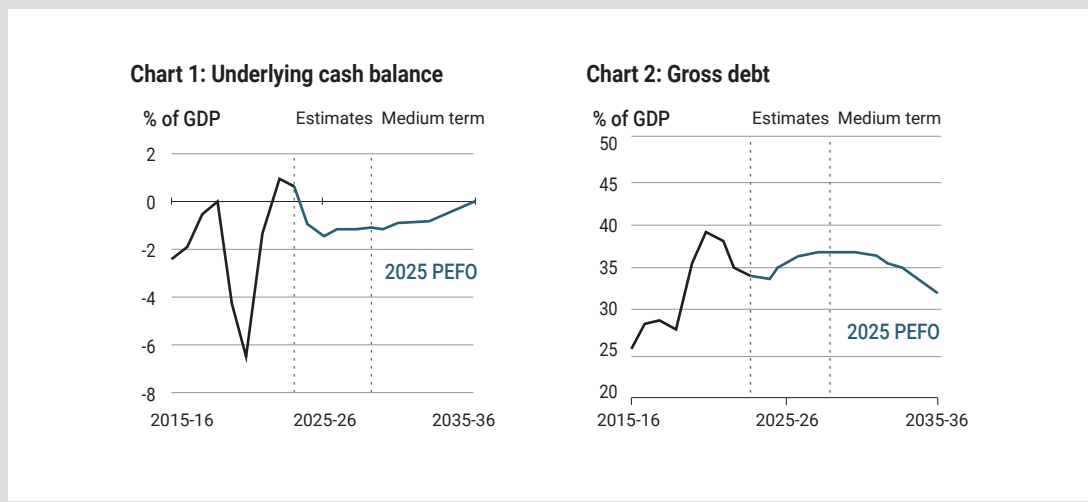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추정						전망 2035-36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총계	
수입(Receipts) ¹⁾	703.9	735.4	766.0	797.4	840.8	3,843.5	
GDP 대비 비율	25.3	25.5	25.6	25.3	25.3		26.8
지출(Payments) ¹⁾	731.8	777.5	801.3	834.5	877.9	4,023.0	
GDP 대비 비율	26.3	27.0	26.8	26.5	26.4		24.9
현금수지 ²⁾ (Underlying Cash Balance)	-27.6	-42.1	-35.7	-37.1	-37.0	-179.5	
GDP 대비 비율	-1.0	-1.5	-1.2	-1.2	-1.1		0.0
총채무(Gross Debt)	940.0	1,022.0	1,092.0	1,161.0	1,223.0		
GDP 대비 비율	33.7	35.5	36.5	36.9	36.8		31.9
순채무(Net Debt)	556.3	620.7	676.3	713.9	768.2		
GDP 대비 비율	20.0	21.6	22.6	22.7	23.1		20.2

- 주 1) 현금주의 기준
 2) 현금주의 기준. 현금수지=수입-지출

출처 호주 재무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p. 5, Table 3, 2025. 4. 7.

그림 10 현금수지 및 총채무 중기 전망



출처 호주 재무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 p. 5, Table 3, 2025. 4. 7.

- 총채무는 2030년 6월 말 GDP 대비 37.0%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6년에는 31.9%로 개선될 전망

◆ 호주 통계청, 2023-24회계연도 정부재정통계 발표 (2025. 4. 22.)¹⁰²⁾

• 2023-24회계연도 일반정부 세입(taxation revenue)은 2022-23회계연도 대비 6.1% 증가한 8,017억 1,600만호주달러, 총수입(total revenue)은 5.9% 증가한 9,785억 8,800만호주달러를 기록

- 세입에서 개인소득세, 원유·석유제품 물품세, 토지세, GST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광물 산업 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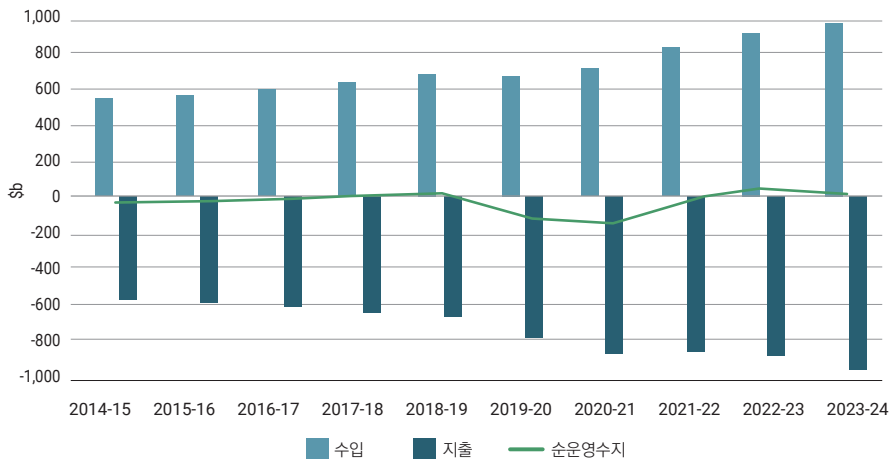
• 2023-24회계연도 일반정부 총비용(total expenses)은 2022-23회계연도 대비 8.4% 증가한 9,597억 1,700만호주달러로 집계됨

- 총비용은 노인요양, 건강보험, 양육보조금, 전기요금 보조, 인건비 증가 등에 기인

• 2023-24회계연도 일반정부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¹⁰³⁾는 188억 7,100만호주달러 흑자, 순차입¹⁰⁴⁾은 441억 3,400만호주달러를 기록

그림 11 호주 순운영수지 10년 추이

(단위: 십억 호주달러)



출처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nual," 2025. 4. 22.

102)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nual," 2025. 4. 22.,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government-financestatistics-annual/2023-24>, 검색일자: 2025. 4. 28.

103) 순운영수지: 총수입-총비용.

104) 순융자/차입: 총수입-총비용-비금융자산 순취득



중국

예산·결산 등

- ◆ 중국 재무부, 2025년 중앙정부 예산안 공개(2025. 3. 26.)^{105) 106)}
- 2025년 중국 중앙정부 총지출 예산은 4조 3,545 억위안¹⁰⁷⁾으로 2024년 집행액보다 6.9% 증가
 - * 한화 기준 약 862조 1,910억원이며, 2025년 대한민국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673조 3천억원
- 과학기술 지출 예산은 3,981억 1,9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예산의 증액이 가장 큰 영향
- 국방비 예산은 1조 7,846억 6,5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7.2%, 공공안전 관련 예산이 2,428억 2,8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7.3% 증가
- 대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1인당 기금의 증액과 정부 학자금 대출의 이자 할인과 관련한 지출 증가로 교육비 예산이 1,744억 4,300만위안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5% 증가

- 자원 탐사 및 산업 정보 관련 지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집행액 대비 18.2% 증가한 444억 1,200만위안 배정
 - 증가액의 대부분은 제조업 관련 예산액의 증액에서 기인하며, 중국 재무부는 해당 예산의 증액을 실정산사업(据實結算項目)¹⁰⁸⁾ 증가의 영향으로 발표
- 이 밖에도 외교, 부채 이자 비용, 문화·관광·스포츠 및 미디어, 위생 및 건강, 금융업, 곡물 및 석유 비축, 방재 및 비상관리, 부채 이자, 채권 발행 등과 관련한 예산 증가
- 사회보장 및 고용,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교통 운송, 상업 부문,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주택 보장 지출 관련 예산은 감소

기타

- ◆ 중국 인민은행, 2025년 3월 금융통계보고서 발표 (2025. 4. 13.)¹⁰⁹⁾
- (통화량) 3월 말 기준 광의통화(M2)¹¹⁰⁾ 잔액은 326조 6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105) 중국 재무부(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財政部有關負責人就2025年中央預算公開答記者問」, 2025. 3. 26., https://yss.mof.gov.cn/gongzuodongtai/202503/t20250326_3960616.htm, 검색일자: 2025. 4. 15.

106) 중국 재무부(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关于2025年中央本級支出預算的說明」, https://yss.mof.gov.cn/2025zyczys/202503/t20250324_3960481.htm, 검색일자: 2025. 4. 15.

107) 2025. 4. 29. 고시 환율 기준 1위안은 한화 약 198원

108) 실제 완료된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계약 모델로, 대금이 계약 체결 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진전에 따라 변동

109) 중국 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2025年3月金融統計數據報告」, 2025. 4. 13.,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110) 광의통화(M2)는 협의통화(M1), MMF, 수익증권, 시장형상품과 2년 미만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을 포함(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통화 및 유동성」,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표 27 2025년 중국 중앙정부 지출 예산표

(단위: 억위안, %)

항목	2024년 집행액	2025년 예산액	전년 대비 증감률
계	40720.18	43545.00	6.9
일반 공공서비스 지출	1552.34	1530.83	-1.4
외교 지출	595.19	645.06	8.4
국방 지출	16652.09	17846.65	7.2
공공 안전 지출	2262.56	2428.28	7.3
교육 지출	1660.71	1774.43	5.0
과학기술 지출	3619.09	3981.19	10.0
문화관광, 스포츠 및 미디어 지출	181.96	192.50	5.8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지출	1108.62	1104.11	0.4
위생 및 건강 관련 지출	295.25	301.65	2.2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관련 지출	206.28	202.14	-2.0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관련 지출	4.41	4.53	2.7
농업, 임업 및 수자원 부문 지출	209.91	197.28	-6.0
교통 운송 지출	824.98	815.12	-1.2
자원 탐사 및 산업 정보 관련 지출	375.66	444.12	18.2
상업 부문 지출	40.10	40.03	-0.2
금융업 부문 지출	564.91	587.29	4.0
천연자원, 해양학, 기상학 관련 지출	288.72	296.98	2.9
주택 보장 지출	658.10	647.89	-1.6
국물 및 석유 비축 관련 지출	1240.38	1316.60	6.1
방재 및 비상 관리 지출	448.49	480.08	7.0
기타 지출	307.25	337.14	9.7
부채 이자 지출	7573.15	8345.50	10.2
채권 발행 비용	50.04	55.60	11.1

출처 중국 재무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25年中央本级支出预算表」, 2025. 3. 26., https://yss.mof.gov.cn/gongzuodongtai/202503/t20250326_3960616.htm, 검색일자: 2025. 4. 15. 표 일부 발췌

- 이 중 협의통화(M1)¹¹¹⁾ 잔액은 113조 4,9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5% 증가했으며, 본원 통화(M0) 잔액은 13조 7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

※ 2025년 1월 협의통화(M1) 통계 기준이 비은행 결제 기관의 개별 요구금과 고객 준비금까지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율이 확인되었으나,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협의통화(M1)의 실질적인 증가율을 1.6%로 발표

- (대출 잔액) 국내외 외화 대출 잔액은 269조 2,6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으며, 위안화 대출 잔액은 265조 4,1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 (예금 잔액) 외화 예금 잔액은 322조 1,1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고, 위안화 예금 잔액은 315조 2,2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111)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1월 이후 개정된 협의통화(M1) 통계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본원통화(M0), 단위 요구불 예금, 개별 요구불 예금, 비은행 결제 기관 고객 준비금을 포함

표 28 전년 동기 대비 통화 분류별(M0,M1,M2) 잔액 비교

(단위: 조위안, %)

통화 분류	2024.3. ¹⁾	2025.3. ²⁾	전년 대비 증감률
본원통화(M0)	11.72	13.07	11.5
협의통화(M1)	68.58	113.49(69.68)*	65.5(1.6)*
광의통화(M2)	304.80	326.06	7.0

주 협의통화(M1)의 경우 2025년 통계 기준의 확대로 잔액이 명목상 크게 증가하여, 괄호 안에 기존 통계기준에 따른 중국 인민은행의 증가율 발표값과 그에 따른 2025년 3월 추산액을 기재

출처 1) 신화통신(재경)(新浪财经), 「2024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4. 4. 12., 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pn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 검색일자: 2025. 4. 30.
2)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2025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5. 4. 13.,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표 29 전년 대비 중국의 국내외 외화대출 및 위안화 대출 잔액 비교

(단위: 조위안, %)

통화 분류	2024.3. ¹⁾	2025.3. ²⁾	전년 대비 증감률
국내외 외화대출	251.81	269.26	6.9
위안화 대출	247.05	265.41	7.4

출처 1) 신화통신(재경)(新浪财经), 「2024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4. 4. 12., 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pn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 검색일자: 2025. 4. 30.
2)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2025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5. 4. 13.,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 (은행간 금리) 3월 위안화 시장 내 은행 간 대출의 월 가중평균금리는 1.85%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p와 0.03%p 낮은 수준
- (외환보유잔액) 외환보유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억달러 감소한 3조 2,400억달러로, 3월말 환율 기준 약 23조 2,574억위안을 보유
- ◆ 중국 통계청, 2025년 1분기 국민경제활동지표 발표 (2025. 4. 16.)¹¹²⁾
- (1분기 GDP) 중국의 1분기 GDP는 31조 8,75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 (공업) 공업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장비 및 첨단기술 관련 제조업에서 빠른 성장세

표 30 전년 대비 중국의 국내외 외화예금 및 위안화 예금 잔액 비교

(단위: 조위안, %)

통화 분류	2024.3. ¹⁾	2025.3. ²⁾	전년 대비 증감률
국내외 외화예금	301.41	322.11	6.9
위안화 예금	295.51	315.22	6.7

출처 1) 신화통신(재경)(新浪财经), 「2024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4. 4. 12., https://finance.sina.cn/bank/yhgd/2024-04-12/detail-inarqpnt0152586.d.html?vt=4&cid=76654&node_id=76654, 검색일자: 2025. 4. 30.
2)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2025년3월金融统计数据报告」, 2025. 4. 13.,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671024/index.html>, 검색일자: 2025. 4. 17.

112) 중국 통계청(国家统计局), 「一季度国民经济开局良好」, 2025. 4. 25., https://www.stats.gov.cn/sj/zxfb/202504/t20250416_1959321.html, 검색일자: 2025. 4. 17.

- 지정 규모 이상 기업¹¹³⁾의 부가가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p 높은 6.5%¹¹⁴⁾ 수준
- 장비 제조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2%p 높은 10.9%, 하이테크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0.8%p 더 높은 9.7% 수준으로 증가
- (고정자산 투자) IT 및 항공우주 등 특정 첨단기술 산업 관련 고정자산 투자의 급격한 증가
- 농촌 가구를 제외한 전체 고정자산 투자액은 10조 3,17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p 상승한 4.2%¹¹⁵⁾ 수준
- 첨단기술 산업 관련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 ▶ 이 중에서도 정보서비스, 항공우주 및 장비 제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 전문 및 기술 서비스 관련 고정자산 투자가 각각 34.4%, 30.3%, 28.5%, 26.1%의 높은 증가율
-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5.8%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상승
- (무역) 1분기 상품의 총 수출입 금액은 10조 3,01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 수출은 6조 1,314억위안으로 6.9% 증가하고, 수입은 4조 1,700억 위안으로 6.0% 감소
-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는 등 안정세였으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
- (실업률 및 가처분소득) 1분기 도시 지역 실업률 평균은 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2,179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경상 가격 기준 5.6% 상승

113) 연간 주요 사업 소득이 2천만위안 이상인 공업 법인을 의미 (중국 통계청(国家统计局), "什么是规模以上工业企业? 如何认定? 限额以上和规模以上有何区别?," 2021.2.18., https://www.stats.gov.cn/zt_18555/zthd/lhfw/2021/rdwt/202302/t20230214_1903909.html#:~:text=%E2%80%9C%E8%A7%84%E6%A8%A1%E4%BB%A5%E4%B8%8A%E5%B7%A5%E4%B8%9A%E4%BC%81%E4%B8%9A%E2%80%9D%EF%BC%8C,%E4%BB%A5%E4%B8%8A%E7%9A%84%E5%B7%A5%E4%B8%9A%E6%B3%95%E4%BA%BA%E5%8D%95%E4%BD%8D%E3%80%82, 검색일자: 2025. 4. 25.

114) 부가가치 성장률은 모두 실질 성장률로 계산

115) 고정자산 투자액과 이후 언급하는 총 수출입 금액의 성장률은 명목 성장률로 계산



스웨덴

예산·결산 등

◆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춘계재정정책법안 발표 (2025. 4. 15.)^{116) 117) 118)}

※ 정부는 매년 4월 15일까지 춘계재정정책법안을 스웨덴 의회에 제출해야 함. 춘계재정정책법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 및 재정정책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고, 가을에 진행되는 예산법안의 구체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¹¹⁹⁾

- (경제 전망) 스웨덴 GDP 성장률은 2024년 1.0%, 2025년 2.1%, 2026년 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과거에 비해 안정되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 감소, 금융 시장 변동성,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가 감소

표 31 주요 수치 전망(2025년 4월 15일)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GDP	1.0	2.1	2.8	2.4	1.4
고용률, 15~74세 노동률 대비 %	69.0	68.8	69.3	69.3	69.9
실업률, 15~74세 노동률 대비 %	8.4	8.6	8.2	7.8	7.6
CPI	2.8	0.7	1.8	1.9	2.1
CPIF	1.9	2.5	1.9	2.0	2.0
일반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	-1.5	-1.3	-0.6	0.2	0.4
일반정부 총부채, GDP 대비 %	33.6	34.3	33.4	32.4	31.0

주 1. 2024년은 결과, 2025~2028년은 전망을 나타냄

2.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며,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가계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クス뱅크(Riksbank)는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은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재정동향 2024년 1월호』 참고)

출처 1. 스웨덴 재무부, "Artikel från Finansdepartementet Vårbudgeten 2025 på fem minuter," 2024. 4.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5/04/varbudgeten-2025-pa-fem-minuter/>, 검색일자: 2025. 4. 16.

2. 스웨덴 재무부 주요수치 엑셀파일,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6094df53e6a4474fbb710a72a54cd6e3/nyckeltal-prognos-15-april-2025.xlsx>, 검색일자: 2025. 5. 19.

116) 스웨덴 재무부, "Artikel från Finansdepartementet Vårbudgeten 2025 på fem minuter," 2024. 4.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5/04/varbudgeten-2025-pa-fem-minuter/>, 검색일자: 2025. 4. 16.

117) 스웨덴 재무부, "From the Spring Fiscal Policy Bill 2025: Guidelines for economic and budget policy," 2025. 4. 15., <https://www.government.se/information-material/2025/04/from-the-spring-fiscal-policy-bill-2025-guidelines-for-economic-and-budget-policy/>, 검색일자: 2025. 4. 29.

118) 스웨덴 재무부, "2025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 prop. 2024/25:100," 2025. 4. 15.,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ad1f4ceed7ab41c2a268f7be57bc5e2f/2025-ars-ekonomiska-varproposition-prop.-202425100.pdf>, 검색일자: 2025. 4. 30.

119)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Den ekonomiska vårpropositionen lämnas till riksdagen,"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statens-budget/budgetprocessen/>, 검색일자: 2024. 4. 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4년 4월 국제기금 및 주요국 재정동향』, 2024. 5. 13., p. 64 재인용

- (재정 전망) 스웨덴 정부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중한 재정운용을 지속할 계획
- (재정수지) 2025년 재정수지는 -1.3%로 2024년 -1.5%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2026년부터 경기회복과 함께 세입 증가 및 지출 둔화로 인해 재정수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28년 0.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부채) 총부채는 2027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GDP 증가율을 하회하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5년 34.3%에서 2028년 31.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계획) ① 가계 부양 및 경기 회복 지원, ② 노동시장 회복 및 실업률 감소, ③ 성장 및 투자 증대로 구성된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
-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대상 소득세 인하, 근로 경력 기반 세금 혜택 제공,¹²⁰⁾ 온실가스 감축의무(Reduktion-splikt)¹²¹⁾ 완화 및 유류세 감면을 통한 연료 가격 인하, 저축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을 추진
-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수요를 촉진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며, 스웨덴의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장기 실업 상태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 확대, 실업급여 상한액 상향 조정,¹²²⁾ 이민자 취업 지원 등을 추진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스웨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억크로나¹²³⁾ 이상의 교통 인프라 재정 지원, 연구 및 혁신 기금과 세금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 촉진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
- (2025 봄 추경예산안) 스웨덴 재무부는 경기부양책, 안전 및 보안을 위한 법 집행 강화, 군사 방어 능력 강화 등에 대해 115억크로나¹²⁴⁾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 (경기부양책) 경제 회복을 위해 58억크로나¹²⁵⁾를 배정하여 ROT 세액공제 강화, 노동시장 및 교육 이니셔티브, 도로 및 주택 투자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¹²⁶⁾

120) 2007년에 도입된 근로소득세 공제(Jobbskatteavdrag) 제도(스웨덴 재무부, "Sänkt skatt på förvärsinkomster," 2008. 6. 17., <https://www.regeringen.se/rapporter/2008/06/sankt-skatt-pa-forvarvsinkomster/>, 검색일자: 2025. 4. 30.)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2025년 춘계재정법안에는 구체적인 정책 명칭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나와있지 않음

121)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 혼합 의무제도로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가능한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 이에 따라 기업의 증가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연료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국민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속도가 다소 조정되고 있음(스웨덴 기후기업부, "Reduktion av växthusgasutsläpp genom inblandning av biodrivmedel i bensin och dieselbränslen," 2017. 6. 8.,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lagratsremiss/2017/06/reduktion-av-vaxthusgasutslapp-genom-inblandning-av-biodrivmedel-ibensin-och-dieselbranslen/>, 검색일자: 2025. 4. 21.)

122) 스웨덴의 실업급여는 월소득의 80%를 최대 33,000크로나(세전, 원화 환산 시 486만 3,87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한액이 34,000크로나(세전, 원화 환산 시 501만 2,620원)로 상향됨. 참고로 2023년 스웨덴의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은 39,900크로나(원화 환산 시 약 588만 2,856원)(출처: 스웨덴 통계청, "Löneutveckling 1992-2023," 2024. 6. 18.,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arbetsmarknad/loner-och-arbetskostnader/lonestrukturstatistik-hela-ekonomi/pong/tabell-och-diagram/loneutveckling/>, 검색일자: 2025. 4. 30.)

123) 원화 환산 시 약 29조 5,400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24) 원화 환산 시 약 1조 6,985억 5,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25) 원화 환산 시 약 8,566억 2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26) 스웨덴 노동부·재무부·농촌부, "Satsningar för att stötta ekonomins återhämtning," 2025. 3. 2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satsningar-for-att-stotta-ekonomins-aterhamtning/>, 검색일자: 2025. 4. 17.

- ▶ (ROT 세액공제¹²⁷ 강화) 2025년 5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ROT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일시적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한도는 과세 연도 당 최대 50,000크로나¹²⁸)에서 75,000크로나¹²⁹)로 상향함에 따라 43억 5,000만크로나¹³⁰)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 (도로 및 주택 투자) 도로 유지 보수에 5억 크로나,¹³¹) 스웨덴 북부 지역 노르란드(Norrland) 지원에 1억 6,000만크로나¹³²)를 제안
- ▶ (노동시장 및 교육 이니셔티브) 고등직업교육에 4억 680만크로나,¹³³) 지자체의 학생·성인 직업교육에 3억 200만크로나,¹³⁴) 고용서비스 보조금에 6,000만크로나,¹³⁵) 실업급여 상한액 상향에 5,600만크로나,¹³⁶)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투자 및 공공 고용서비스 증설 등을 제안
- (안전 및 보안 강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군사 방어 강화,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지원 패키지, 교정 및 보호 관찰 서비스 확장 투자, 청소년 범죄 대응, 폭발물 사용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 민간방위 역량 강화 등을 제안
- ▶ (군사 방어 강화) 장기 방위 투자,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국방력 강화 투자, 하이브리드 위협¹³⁷) 등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크로나¹³⁸)를 배정¹³⁹)
- ▶ (교도소 및 보호 관찰 서비스 확장) 수감자 수 증가로 인해 교도소 및 보호 관찰 서비스 증대를 위해 4억 8,400만크로나¹⁴⁰) 투자¹⁴¹)

127) ROT 세액공제는 주택소유자 개인이 주택 수리·유지보수·재건 작업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재료비, 장비비, 출장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스웨덴어로 "rotavdraget"라 하며, 앞의 rot는 "Renovering, Ombyggnad, Tillbyggnad" 의 약자로 "Renovation, Remodeling, and Extension" 이라는 뜻. 주택소유자의 소비를 통해 건설 부문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세입자의 경우 정원 가구기, 가사 서비스, 청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RUT 공제(rutavdraget)를 별도로 운영 중(출처: Sweden's solar tax incentives in 2023: ROT and Green Deduction (grön teknik), <https://solarstone.com/blog/swedens-solar-tax-incentives-in-2023#what-is-the-rot-deduction>, 검색일자: 2025. 3. 25.; Sweden - ROT & RUT avdrag, <http://impact-phs.eu/national-practices/sweden-rot-rut-avdrag/>, 검색일자: 2025. 3. 25.; 스웨덴 국세청, Rot och rut - priva 제도 설명, <https://skatteverket.se/privat/fastigheterochbostad/rotarbeteochrutarbete.4.2e56d4ba1202f95012080002966.html>, 검색일자: 2025. 3. 25.)

128) 원화 환산 시 약 738만 4,500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29) 원화 환산 시 약 1,107만 6,750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0) 원화 환산 시 약 6,423억 2,1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1) 원화 환산 시 약 738억 3,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2) 원화 환산 시 약 236억 2,56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3) 원화 환산 시 약 600억 6,808만 8,000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4) 원화 환산 시 약 445억 9,332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5) 원화 환산 시 약 88억 5,9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6) 원화 환산 시 약 82억 6,84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7)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사회 혼란 조장, 정치적 개입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비군사적 공격 방식(출처: NATO, "Countering hybrid threats," 2024. 5. 7.,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56338.htm?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4. 17.)

138) 원화 환산 시 약 3조 6,912억 5,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39) 스웨덴 국방부, "Största stödpaketet till Ukraina hittills höjer det svenska stödet för 2025 till 29,5 miljarder kronor," 2025. 3. 3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storsta-stodpaketet-till-ukraina-hittills-hojer-det-svenska-stodet-for-2025-till-295-miljarder-kronor/>, 검색일자: 2025. 4. 17.)

140) 원화 환산 시 약 714억 6,26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41) 스웨덴 법무부, "Satsningar för att hålla uppe trycket i utbyggnaden av Kriminalvården," 2025. 4. 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satsningar-for-att-halla-uppe-trycket-i-utbyggnaden-av-kriminalvarden/>, 검색일자: 2025. 4. 17.)

- ▶ (청소년 범죄 대응) 청소년 교정시설 증대, 지자체 재정 지원, 아동·청소년 범죄 위험 대응 등에 3억 5,700만 크로나¹⁴²⁾ 배정¹⁴⁶⁾
- ▶ (폭발물 사용 감소) 폭발물 사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400만 크로나¹⁴⁴⁾를 배정¹⁴⁵⁾
- ▶ 그 밖에 민간방위 역량 강화에 8,500만 크로나,¹⁴⁶⁾ 147) 학교 안전 강화에 5,300만 크로나¹⁴⁸⁾를 배정¹⁴⁹⁾
- (기후 전환 이니셔티브) 기후발전 프로젝트에 65억 크로나, 산업 기후 전환 프로젝트에 22억 크로나¹⁵⁰⁾ 배정¹⁵¹⁾
-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5년에 5억 크로나¹⁵²⁾가 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유연한 치료를 확대할 계획¹⁵³⁾
- ◆ 스웨덴 통계청, 2023년 사회복지 지출 규모 발표 (2025. 3. 31.)¹⁵⁴⁾
- 통계청에서 집계한 2023년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1조 7,020억 크로나¹⁵⁵⁾로 전년 대비 890억 크로나¹⁵⁶⁾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증가율은 5.5%로, 2022년 5.1%에서 증가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경우, GDP 증가율과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2022년과 동일한 27.5%를 유지
 - 스웨덴의 사회복지지출은 ① 노령, ② 질병/건강·의료, ③ 가족/아동, ④ 장애, ⑤ 실업, ⑥ 기타 사회적 취약성 ⑦ 주거, ⑧ 유족 총 8개로 구분되며, 이 중 노령 부문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42) 원화 환산 시 약 527억 1,105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43) 스웨덴 법무부·보건사회부·교육연구부, "Satsningar för att motverka ungdomars brott," 2025. 4. 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satsningar-for-att-motverka-ungdomars-brott/>, 검색일자: 2025. 4. 17.

144) 원화 환산 시 약 9,06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45) 스웨덴 국방부, "Satsning för att minska kriminell användning av explosiva varor," 2025. 4. 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satsning-for-att-minska-kriminell-anvandning-av-explosiva-varor/>, 검색일자: 2025. 4. 17.

146) 원화 환산 시 약 125억 4,855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47) 스웨덴 재무부·국방부·기후기업부, "85 miljoner kronor för att öka förmågan i det civila försvaret," 2025. 4. 11., <https://www.regeringen.se/debattartiklar/2025/04/85-miljoner-kronor-for-att-oka-formagan-i-det-civila-forsvaret/>, 검색일자: 2025. 4. 17.

148) 원화 환산 시 약 78억 2,439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49) 법무부·교육연구부, "Regeringen föreslår lagändringar och nytt statsbidrag för ökad skolsäkerhet," 2025. 3. 20.,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regeringen-foreslar-lagandringar-och-nytt-statsbidrag-for-okad-skolsakerhet/>, 검색일자: 2025. 4. 17.

150) 원화 환산 시 약 3,247억 8,6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51) 스웨덴 기후기업부, "Nya satsningar för att stärka Sveriges klimatomställning," 2025. 4. 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nyasatsningar-for-att-starka-sveriges-klimatomstallning/>, 검색일자: 2025. 4. 17.

152) 원화 환산 시 약 737억 8,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53) 스웨덴 재무부·보건사회부, "En halv miljard kronor i förstärkt satsning på den specialiserade psykiatriska vården under 2025," 2025. 4. 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en-halv-miljard-kronor-i-forstarkt-satsning-pa-den-specialiserade-psykiatriska-varden-under-2025/>, 검색일자: 2025. 4. 17.

154) 스웨덴 통계청, "Utgifter för socialt skydd som andel av BNP i stort sett oförändrade 2023," 2025. 3. 31.,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utgifter-for-det-sociala-skyddet-i-sverige-och-europa-samt-utgifternas-finansieringssprosp/pong/statistiknyhet/socialt-skydd-i-sverige-2023/>, 검색일자: 2025. 4. 21.

155) 원화 환산 시 약 251조 1,471억 2,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56) 원화 환산 시 약 13조 1,328억 4,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 (노령) 전년 대비 331억코로나¹⁵⁷ 증가하여 4.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노령연금(Ålderspension)¹⁵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질병/건강·의료) 노령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37억코로나¹⁵⁹ 증가하여 7.4%의 증가율을 보임
 - ▶ 질병/건강·의료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에서 각각 10% 증가하였으며, 유급 병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되었던 특정 혜택이 중단되어 26억코로나¹⁶⁰ 감소
- (가족/아동) 전년 대비 76억코로나¹⁶¹ 증가하여 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부모수당 및 자녀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 규모는 690억코로나¹⁶²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고 미취학 아동 보육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현물지원 규모는 1,000억코로나¹⁶³로 전년 대비 증가
- (장애) 전년 대비 114억코로나¹⁶⁴ 증가한 1,580억코로나¹⁶⁵ 규모로 이 중 현금지원 제도인 ‘병가 및 활동 지원금’과 ‘연금’이 11.5%(42억코로나)¹⁶⁶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현물지원 제도인 ‘특별 거주 시설의 간호 및 지원’이 9.1%(35억코로나)¹⁶⁷ 증가
- (실업)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기타 현물급여 등을 포함한 실업 관련 지출은 총 420억코로나¹⁶⁸ 규모로 전년 대비 0.8%(3억코로나) 증가
- (기타 사회적 취약성) 주거비 및 소득 지원, 성인 약물 남용자 치료 등을 포함한 기타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지출은 총 292억코로나 규모¹⁶⁹로 전년 대비 2억코로나¹⁷⁰ 감소

157) 원화 환산 시 약 4조 8,848억 9,8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58) 스웨덴의 노령연금(Ålderspension)은 공적연금 제도로 근로소득에 기반해 산정되며(출처: 스웨덴 연금청, "Riktålder - när kan jag ta ut allmän pension?," 2025. 4. 28.,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ga-i-pension/planera-din-pension/pensionsaldrar-och-riktalder>, 검색일자: 2025. 5. 8.), 노령연금이 없거나 노령연금이 최저보장연금액(독신 11,907코로나, 기혼 10,780코로나)보다 적은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보장연금(Garantipension)을 지급(출처: 스웨덴 연금청, "Garantipension - om du har låg pension," 2025. 1. 9.,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forsta-din-pension/sa-fungerar-pensionen/garantipension>, 검색일자: 2025. 4. 30.)

159) 원화 환산 시 약 4조 9,734억 4,6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0) 원화 환산 시 약 3,837억 8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1) 원화 환산 시 약 1조 1,213억 4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2) 원화 환산 시 약 10조 1,802억 6,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3) 원화 환산 시 약 14조 7,540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4) 원화 환산 시 약 1조 6,819억 5,6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5) 원화 환산 시 약 23조 3,208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6) 원화 환산 시 약 6,199억 2,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7) 원화 환산 시 약 5,166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8) 원화 환산 시 약 6조 1,971억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69) 원화 환산 시 약 4조 3,084억 6,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170) 295억 1,000만원(2025. 4. 30. 14:45 환율 기준)

표 32 2018~2023년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단위: 백만크로나, %)

기능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질병/건강 관리	358,504	376,044	414,854	434,639	452,108	485,762
2. 장애	135,594	135,334	134,360	136,161	146,389	157,832
3. 노령	591,908	612,459	641,268	667,053	719,547	752,694
4. 생존자	12,767	12,412	12,050	11,458	11,058	10,766
5. 가족/자녀	148,449	153,246	153,507	156,698	161,563	169,149
6. 실업	37,777	36,258	50,007	50,978	41,794	42,115
7. 숙박 시설	19,168	19,043	20,858	20,682	21,596	23,858
8. 기타 사회적 취약성	39,786	34,930	31,292	29,425	29,384	29,226
사회 복지 혜택에 대한 총지출	1,343,953	1,379,726	1,458,196	1,507,094	1,583,439	1,671,402
관리비 / 기타비용	27,032	27,603	27,960	27,051	29,154	30,223
사회 보호에 대한 총지출	1,370,985	1,407,329	1,486,156	1,534,145	1,612,593	1,710,989
GDP 대비 점유율	28.6	28.0	29.6	28.1	27.5	27.5

출처 스웨덴 통계청, "Utgifter för socialt skydd som andel av BNP i stort sett oförändrade 2023," 2025. 3. 31.,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utgifter-for-det-sociala-skyddet-i-sverige-och-europa-samt-utgifternas-finansiering-esspros/pong/statistiknyhet/socialt-skydd-i-sverige-2023/>, 검색일자: 2025. 4. 21.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47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5년 5월 19일 발행 | 제347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05